

#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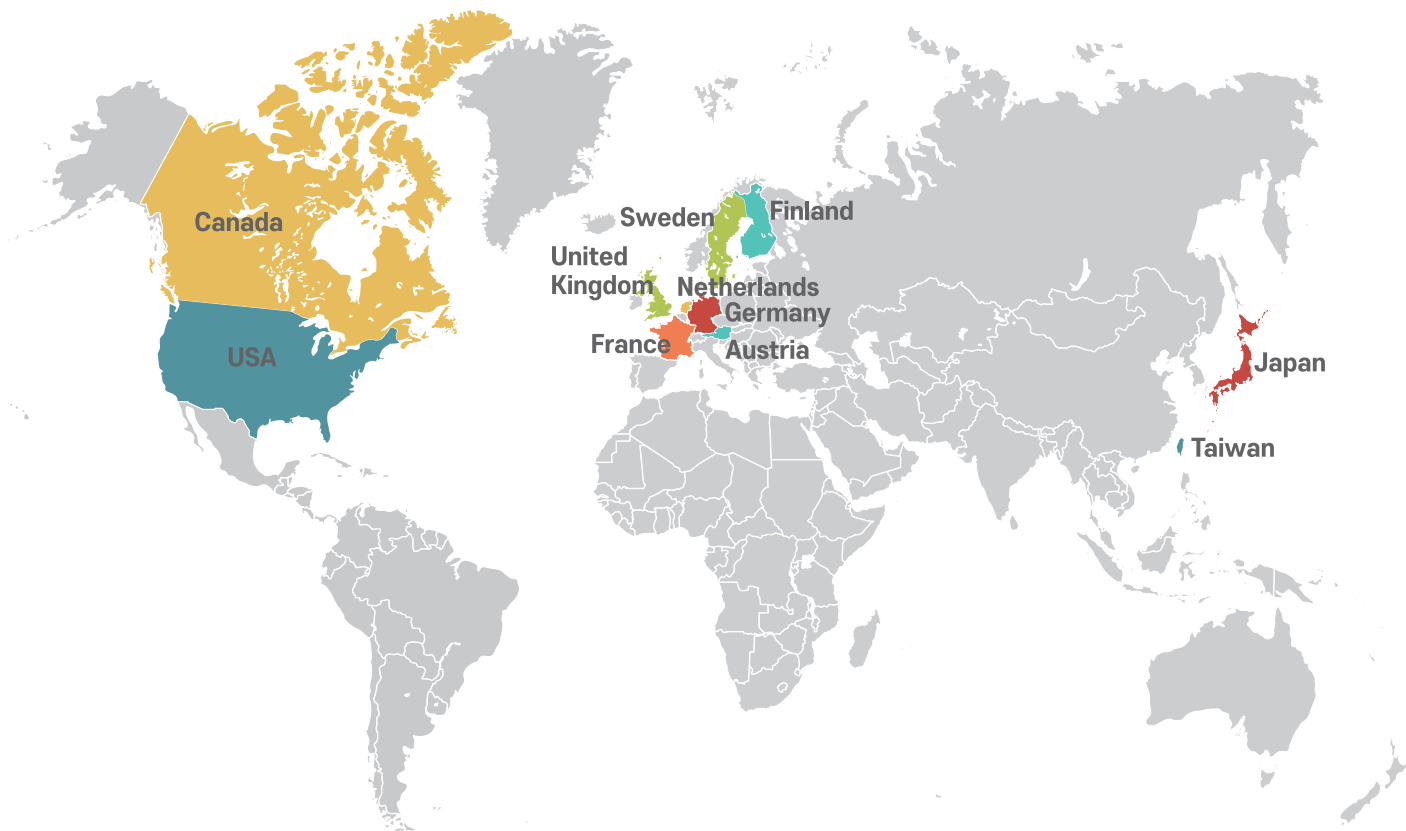
미국 캐나다

## Europe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Asia

일본 대만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Contents

---

<b>I. 11개국 공무원 연금제도 총괄표</b>	<b>1</b>
-----------------------------	----------

---

<b>II. 국가별 운영현황(대륙별)</b>	<b>14</b>
1. 미국	18
2. 캐나다	26
3. 영국	36
4. 프랑스	44
5. 독일	58
6. 네덜란드	66
7. 오스트리아	76
8. 스웨덴	84
9. 핀란드	100
10. 일본	112
11. 대만	126

---

<b>III. 주제별 운영현황</b>	<b>132</b>
1. 재정안정화 기여금	134
2. 연금조정	138
3. 지급개시연령	143
4. 연금정지	146
5. 현재가치화	150
6. 누진기여금	151
7. 정부부담률	152
8. 연금급여제한	155

---

출처	158
----	-----





# I

---

## 11개국 공무원 연금제도 총괄표

---

## 미 국 (연방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1층 통합형	신공무원연금 (FERS) * 2층 직역연금 구분이 있을 뿐 민간과 동일구조	3층		신공무원 연금 (FERS)	개인저축계정 (TSP)	IRA 등 개인연금제도				
		2층		연금 (FERS)	공무원직역연금 (BP)	주·지방 공무원연금		기업연금		
		1층								
		사회보장연금 (OASDI:소득비례연금)								
[참고] CSRS(1920~1983) 구제도		적용대상		연방 공무원(FERS)	주·지방 공무원	민간근로자				
1984년 이전 임용 공무원 대상 연방공무원제도 (독립형 단층제도)		공적연금(임의가입)		OASDI + BP + (TSP)	주·지방 공무원연금 + (OASDI, TSP)	OASDI + 기업연금 + (IRA)				
구 분		1층 사회보장연금				2층 공무원직역연금				
도입시기 및 가입대상		(OASDI 적용) 1983년 연금개혁 FERS(법 제정) 1986년 (시행) 1987년 (가입대상) 1984년 이후 임용자								
연 금	산 식	AIME* 중 \$996까지 90%+\$6,002까지 32% + 그 이상 15%				확정급여형(DB): 기준소득 × 지급률 × 재직기간				
		40년 가입기간 중 상위소득 35년 전체 소득의 합을 35년(420개월)으로 나누어 산출 * 35년 미만이어도 420개월로 나누어 산정('19)				기준소득	연속 3년 최고 평균보수 평균액 (기본금 + 일부수당)			
	지급개시연령	2020년까지 66세, 이후 2개월씩 연장, 2027년 67세				지 급 률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1.1%			
		연금연동방식	생계비 조정(COLA:Cost-of Living Adjustment) 지수 상승 반영				재직기간	상한 미존재		
			연도(년)				2020	2021	2022	재직기간 30년 이상 55~57세, 20년 이상 60세, 5년 이상 62세
재 원	소득대체율	연상률		1.6%	1.3%	5.9%	COLA 반영하되, 2% 이상 시 단계별 일부차감 ■ CPI < 2% ⇒ CPI ■ 2% ≤ CPI ≤ 3% ⇒ 2% ■ *3% < CPI ⇒ CPI-1%			
		평균임금대비 100% 수준 근로자의 48%('18년)		2022년 : *5.9% - 1% = 4.9%						
	재정방식	부과방식 * 국고보조 없으며, 관리비용도 사회보장세로 충당				20년 재직시 20%				
		보험료	피용자	6.2%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 12.4%		완전적립방식			
가입자/수급자/부양률	사용자		6.2%	→ 퇴직·유족급여 10.6%, 장애급여 1.8% 배분		임용시기별 0.8~4.4%				
	운 영	운영기관	1억 8,230만명 / 5,658.6만명 / 31%('22년)				35.2%('19년) * 개인보험료 외 모든 비용 정부부담			
사회보장청(관리, 감독), 국제청(사회보장세 징수) ■ 1986년 신공무원연금(FERS) 도입에 따른 공무원 공적연금 가입체계 다층화(민간의 2~3층 존용) 및 완전 적립방식 이행				274만명 / 99.6만명 / 36.4% ('19년)						

\* 사회보장연금(OASDI) 자료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외국의 연금제도 및 미국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등 참조

## 캐나다 (연방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1층 통합형		기초노령연금 · 보충연금 + 캐나다연금 또는 퀘벡연금(거주지역에 따라 구분) + 연방공무원연금 (PSPP)	3층	개인저축계정 (RRSPs,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2층	연방공무원연금 (PSPP)    주 · 지방공무원금    고용주 제공 기업연금 (RPP)	
			1층	캐나다연금 (CPP) 또는 퀘벡연금 (QPP)	
			0층	기초노령연금 (OAS), 보충연금 (GIS)	
			대상	연방공무원	주 · 지방공무원
구 분		1층 캐나다연금 (CPP)		2층 공무원연금 (PSPP)	
도입시기		1966년 소득비례형 연금제도 도입		1870년	
가입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 소득하한 CAD\$3,500('22년)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가입제외		연방공무원	
연 금	산 식	연금산정소득액 × 지급률 ÷ 재직기간(월수)		기준소득 × 지급률 × 재직기간	
		연금산정 소득총액		Σ(매년도 연금산정소득 ÷ 매년도 소득상한(YMPE) × 퇴직시점 최종 5년 소득상한 평균(AMPE))	기준소득    최고 5년 평균보수 지 급 률    퇴직시점 최종 소득상한5년평균 CAD\$59,700('22년) 이하분 1.375%, 초과분 2%
	지 급 률	25%		재직기간    재직기간 상한 35년	
	지급개시연령	65세		60세 (2013년 전 가입자) → 65세 (2013년 이후 가입자)	
	연금연동방식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재 원	소득대체율	평균소득의 25% → 40년 후 33% 수준을 목표로 개혁 ('16년)		35년 근무 및 AMPE 이하 소득 가정 시 48.125% (=35년 × 1.375%)	
	재정운영방식	부과방식으로 설계 → 1998년부터 적립방식으로 운영		부분적립 → 2000년 이후 적립방식	
	보험료 ('22년)	피용자	5.7%	• 보험료는 매년 변동하고 개인과 사용자 동률부담 • 소득상한액 CAD\$64,900('22년)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음	7.95 ~ 12.48%
		사용자	5.7%		7.95 ~ 12.48%
	운 영	가입자/수급자/부양률	14,866,000명 / 6,100,000명 / 41% ('20년)		331,665명 / 281,765명 / 84.95% ('20년)
연금관리 · 운영기관		(제도)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    (징수) 국세청		정부연금센터 (Government of Canada Pension Centre)	
주요 개혁		■ 2012년 공무원연금(PSPP) 개시연령 연장 및 보험료를 하향 : 60세 → 65세 (2013년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2016년 캐나다연금(CPP) 급여적정성 강화를 위한 개혁 - 보험료 상향(9% → 23년 11.9%, 단계적 인상)을 통한 연금인상 (상향된 보험료 기준 40년 이상 납입 시 소득대체율 33% 달성 목표)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1층 통합형	연금크레딧*+NSP+PCSPS**+(개인연금)  * 저소득층 대상의 급여로 전액 정부재원 조달 ** 현재 영국에는 약300개 이상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존재 하나, 총 6개의 제도(국가공무원연금, 지방공무원연금, 경찰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의료서비스연금)에 공무원의 95% 가입	3층	개인연금, 자유저축 등	
		2층	국가공무원연금(PCSPS)	직역연금
		1층	신국가연금(NSP)	
		0층	연금크레딧	
		대상	국가공무원	특수직 / 주·지방공무원

신국가연금 (NSP)									
구 분	1908년 최초 노령연금제도 도입, 2016년 신국가연금(NSP) 도입								
도입시기	16세 이상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자 (학생, 해외거주자도 임의가입 가능)								
가입대상	완전연금액 × 기여년수 (+기여인정년수) × 1/35								
연 금	산 식	2020년 기준 주당 £175.20수준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됨							
		최소 가입기간 10년, 완전연금 조건 35년							
	지급개시연령	65세 → '26~'28년'67세 → '39년'68세							
	연금연동방식	삼중잠금제(Triple Lock) : ①임금상승률과 ②소비자 물가지수(CPI) 반영하여 최소 ③2.5% 인상 보장		구 분	'18	'19	'20	'21	
	소득대체율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24.1% ('20년)		인상률(근거)	3%(CPI)	2.6%(임금상승률)	3.9%(임금상승률)	2.5%(2.5%)	
재 원	재정운영방식	부과방식 (적립금은 2개월 급여 지급분 보유)							
	보험료 ('22년)	• 소득수준은 가입유형별(Class1~4)'로 상이하며 매년 결정됨 *Class 1. 근로소득자, 2. 저소득자영업자, 3. 임의가입자, 4. 고소득자영업자			가입유형		소득수준	근로자	사용자
		• 피용자 보험료율은 내각부(정부)와 공무원 대표가 협의			Class 1 (근로소득자)	주 £120	가입대상 제외		
		• 사용자 보험료율은 보험계리 결과에 의해 결정				주 £120-183	0%		
		• 신국가연금의 보험료는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에 포함되어 일괄 징수됨 (통합보험제)				주 £183-962	13.8%		
영 운	정부부담	급여비용 지출 중 부족액 발생 시 총당							
	가입자/수급자/부양률	구제도 수급자 포함 수급자 총 1,250만명 ('20년)							
	연금관리·운영기관	(운영) 노동연금부 (징수) 국세청 (급여) 연금관리청							
	주요 개혁	■ 2016년 다층연금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제도 간 기능중복 및 복잡성 제거 - 기존의 1층 기초연금(BSP)과 2층 국가연금(S2P)을 1층 신국가연금(NSP)으로 통합하여, 2층 체계를 직장연금으로 구성							



## 영국 (국가공무원)

구 분		공무원연금 (PCSPS)						
도입(개혁)시기		Classic 1972	Premium 2002	Nuvos 2007	Alpha 2015			
가입대상		'02. 9. 30. 이전 재직자	'02. 10. 1. 이후 임용자	'07. 7. 31. 이후 임용자	'15. 4. 1. 이후 임용자 및 '07. 7. 31.이후 임용자 중 선택자			
급여결정방식		DB형	(옵션1) DB형이 기본	'02.10.01.이후 임용자들은 DC형제도인 Partnership* 선택 가능 * Partnership : 개인(계약형 완전직립제도로 사용자 전액 부담을 원칙(연령별8~14.75%)으로 하되 공무원은 임의적으로 추가 부담이 가능함 (이 경우 1~3%내에서 정부 매칭 부담)				
산 식			기준소득 × 지급률 × 재직기간					
연금	기준소득	최종연금보수	최종연금보수	전기간평균연금보수	전기간평균연금보수			
	지 급 률	1.25%	1.67%	2.3%	2.32%			
	재직기간	최소 재직기간 2년						
	지급개시연령	60세	60세	65세	65세 또는 신국가연금 개시연령 중 높은 연령			
	연금연동방식	소매 물가지수 (RPI) → <sup>'11년~현재</sup> 소비자 물가지수 (CPI)						
소득대체율	40년 가입시 최종보수의 50%	30년 가입시 최종보수의 50%	32.6년 가입시 최종보수의 47.5%	구 분 인상률	'18 3%	'19 2.4%	'20 1.7%	'21 0.5%
	30년 가입 시 최종보수 대비 약 44%							
재원	재정운영방식	순수부과방식						
	보험료	피 용 자	1.5%	3.5%		2015년 4월 도입 제도로 해당연도 납부자 없음		
			소득별 1.5~6.85%	소득별 3.5~8.85%				
			전 제도 보험료 소득별 4.6~8.05%로 동일					
	사용자	소속기관이 매 4년마다 연금충당부채 부담금을 산정하여, 공무원 몫의 보험료를 제외한 부분을 부담						
비 고	원칙적으로 공무원 개인 비기여제로 운영 (위에서 기술한 피용자 보험료는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부분)							
운영	정부부담	징수한 피·사용자 보험료 합계액이 당해 연금지출액에 미달할 경우 의결과정을 거쳐 정부 일반예산에서 차액 추가 부담						
	가입자/수급자/부양률	542,373명 / 706,351명 / 130.2% ('20년)						
	연금관리·운영기관	(감독) 내각사무처 공무원연금국 (관리) MyCSP(Civil Service Pensions)						
주요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연금액 인상률 변경 (소매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지수)</li> <li>2015년 신공무원연금제도 Alpha 실시 (지급률 및 개시연령 상향조정)</li> </ul>							

## 프랑스 (국가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독립형 (직업군에 따라 42개 연금 운영)	공무원연금 + 부가연금 + 사적연금(임의가입) * 단종형 직역연금제도였으나, '05년부터 부가연금(의무) 시행되며 2층 구조로 재편, 부가연금 비중 ↓	3층	사적연금 (임의)	
		2층	공무원부가연금	
		1층	국가공무원연금	지방공무원연금
			농업공제조합(농업)	일반연금 (상공업) ...

구 분		1층 국가공무원연금		2층 공무원부가연금		
도입시기		(공무원연금 도입) 1853년 (현재 체계 도입) 2003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2층 부가연금(RAFP) 신설 (시행) 2005년				
가입대상		국가공무원, 군인 국가·지방공무원, 군인, 판사, 공공병원 근로자				
연금	산 식	기준소득 × (기여금 납부 분기수 ÷ 완전연금수령 분기수) × 75%				
	기준소득	최종 6개월 보수 평균액(보수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상여금제외)				
	분 기 수	1973년생 기준 43년 (172분기) * 완전연금수령 분기수는 수급연령 도달시기에 따라 다름 (본문 참조)				
	지 급 율	연 1.744% (75%÷43년)				
	지급개시연령	구 분 (출생, 납입, 직종별 상이)	사무직 ('55년생~)	현장직 ('60년생~)	■ 포인트시스템으로 운영 (P=포인트) (부가연금액) P개수 × P서비스가치 × P 가산계수 (부가일시금) P개수 × P서비스가치 × P 가산계수 × 일시금화계수 * 산정예시 본문 참조  ■ '51년 7월 이전 : 60세 ~ ■ '55년생 이후 : 62세	
		완전연금수령 분기수 중 족 시	62세	57세		
		완전연금수령 분기수 미충족시	67세	62세		
연금연동방식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반영 (담배 제외)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최대 75%					
재 원	재정방식	부과방식 (가입자 기여금 수입 외 전액 국가 일반회계예산에서 부담)				
	개인기여금	11.10% ('20년)				
	정부부담률	74.28% ('20년) * 명목상 사용자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음				
운 영	가입자/수급자/부양률	204만명 / 271만명 / 132.8% ('19년)				
	운영기관	경제재정부 공공재정일반국 산하 국가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서비스 (SRE : Service des Retraites de l'Etat)				
	주요 개혁	■ 2003년 공적연금 전반 개혁 - 완전연금수령 위한 기여금 납부기간 점진적 상향 및 공무원과 자영자를 위한 2층 부가연금제도 (의무) 도입 ■ 2010년 공공부문 지출 축소 위한 개혁 - 완전연금수령 기여금 분기수 총족여부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상향(총족시 62세, 미충족시 67세), 기여금 인상(7.85 → 10.55%) ■ 2019년 이후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42개 공적연금 일원화 방안 추진 중단 상태				

## 독 일 (연방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독립형	공무원연금 (BV) + 개인연금 (Riester, Ruerup)	3층		개인연금 (Riester, Ruerup)						
		2층		공공부문 근로자 부가연금 (ZÖD)		기업연금 (BA)	농민연금	전문직연금		
		1층		법정연금보험제도 (GRV)						
		대상		연방, 주·지방 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공기업종사자, 비정규직공무원	민간근로자	농민	전문직	
구 분							1·2층 공무원연금 (BeamVG)			
도입시기 및 가입대상		(도입) 1873년		(가입대상) 연방, 주·지방 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 '11. 7. 1. 이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으로 직업군인은 공무원연금, 임시군인은 법정연금보험제도 적용						
연 금	산 식	확정급여형 (DB) : 기준소득 × 지급률 × 재직기간								
		최종보수 (최종 2년 기본급 + 가족수당 등 일부수당 포함 평균값)								
		1년당 연금지급률 1.79375%								
		최소 5년, 최대 40년								
	지급개시연령	'12년 65세 → '29년 67세 * 경찰 및 전문 소방 공무원 '09년~'62세								
연금지출방식	보수인상을 반영									
	71.75% (30년 재직 시 약 53.8%, 최대 40년 재직 시 71.75%)									
	완전적립방식 * '07. 1. 1. 이후 임용자 (구제도 : 순수과방식)									
재 원	보험료	개인	없음 (전액 정부 부담)					연금지출은 회계 상 연방정부 인건비 일부로 편성하여 전액 국가예산으로 정부에서 부담		
		정부								
영 운	재직자/수급자/부양률		176만명 / 139만명 / 79% ('19년 기준)					(제도·정책관리) 연방 내무부 연금관리국 (연금지급) 각 퇴직기관		
	운영기관									
주요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998년 한시적 성격의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여명 증가 및 '10년대 이후 퇴직자 급증을 대비한 정부재정부담 경감 차원의 재직자·수급자 부담 한시적('99~'17년) 완충기금 성격</li></ul></li><li>2001년 모수개혁(연금지급률 인하) 및 Riester 연금 도입</li><li>2007년 공무원연금기금 설치 및 완전적립제도로의 이행, 공무원연금제도 분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행화에 따른 장기 정부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07. 1. 1. 이후 임용자 대상으로 소관부처 표준보험료 부담의 적립방식 도입</li></ul></li></ul> <p>* 쾰공무원 대상 공무원연금제도 1개 → '06년 연방주의 개혁(독일 기본법 개정) 후 연방 및 주·정부공무원들 각각의 제도로 분리 운영</p>								

## 네덜란드 (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1층 통합형	기초연금 (AOW) + 공무원연금 (ABP) + 개인연금	3층	개인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 상품, 세제혜택)				
		2층	공무원연금 (ABP)	개별 기업연금 (OPF)	-		
		1층	기초연금 (AOW)				
		대상	공무원	민간근로자	자영업자		
구 분		1층 기초연금 (AOW)			2층 공무원연금 (ABP)		
도입시기 및 가입대상		1957년 / 1년 이상 네덜란드 거주한 국민			1836년 / 연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연금	산 식	독 신	월€1,316.77 × 네덜란드거주기간/50년		소 득	연간 소득 €44,177.59 이하 (연간 소득 - €11,850) × 1.701% × 재직기간	
		부 부	월€ 901.07 × 네덜란드거주기간/50년		구 간 별	연간 소득 €44,177.59 초과 (연간 소득 - €14,850) × 1.875% × 재직기간	
	소득상한	연 €35,129		최대 €114,866 * 초과금액은 별도 추가연금제도 임의가입 가능			
	산정기간	최대 50년 (네덜란드 거주기간)		최대 50년 (최소 재직기간 하한은 없으나 최소 월 연금액 €2 충족 시 연금지급 가능)			
지급개시연령		'22년'66세 → '27년'67세로 단계적 인상 중 * 세부내용 본문 참조					
연금연동방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적용이 원칙이나, 기금적립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조정하지 않으며, 2010년 0.28% 인상 이후 조건미달로 2022년까지 연금조정 無					
소득대체율		1층(AOW) + 2층(기업연금)의 총 연금액이 평균임금의 75%가 되도록 설계					
재 원	재정운영방식	부과방식		완전적립방식			
	보험료	개인	18% (노령연금분 17.9%, 유족연금분 0.1%)	7.9%	• 매년 산정한 필요보험료를 (수지균형보험료를)을 조정함으로 분담 (공무원: 정부 = 3 : 7)		
운 영	기여자/수급자/부양률	정부	없음 (전액 개인 부담)	18%			
		운영기관	9,066천명 / 3,957천명 / 43.6% ('19년 기준)	1,178천명 / 943천명 / 80.1% ('20년 기준)			
		사회보험은행 (Sociale Verzekeringsbank, SVB)		공무원연금공단 (ABP Foundation, 독립법인)			
주요 개혁		■ 1997년 국가저축기금 (Saving Funds) 조성 - 고흥화 피크('35년 전후)기의 국민부담 완화 • 정부부채 감축 위해 정부 일반재정의 일부로 저축기금 (완충기금 성격) 조성					
		■ 2019년 연금개혁협의안(Pensioenakkoord)에 의해 지급개시연령을 기존 '21년까지 67세로 인상 → '24년까지 인상으로 조정, 이후 매년 기대수명에 연계되어 확정되며 '22년 기준 '27년까지 67세로 인상 확정					

1) The 2021 Ageing Report, The European Commission, 2021

## 오스트리아 (연방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1층 통합형	일반법정연금(APG) + 연금기금(PK) + 개인연금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개인연금 (Zukunftsversorgung)			
		2층	연금기금 (Pensionkassen, PK)	기업연금 (BPG)		
		1층	일반법정연금 (APG)			
		대상	연방공무원	주·지방공무원	민간근로자 (생산·사무직)	농민
구 분		1층 일반법정연금 (APG)				
도입시기 및 가입대상		(제정 / 시행) 2004년 / 2005년 (가입대상) 2005. 1. 1. 이후 임용자				
연 금	산 식	명목확정급여형(NDB) : 기준소득 × 지급률 × 재직기간				
	기준소득	전 기간 평균소득 (1955년 이전 출생자는 '18년 30년 → ~ '28년 40년 평균소득으로 점진적 연장 중)				
	지급률	1년당 연금지급률 1.78%				
	재직기간	최소 7년, 최대 45년				
	지급개시연령	남 61.5세 → 65세 * '19년 기준 남 65세, 여 60세, 여성은 '24 ~ '33년까지 연도마다 반년씩 상향하여 '34년 남녀 모두 65세 도달 예정				
재 원	연금연동방식	공무원 급여산정 기준소득은 임금상승률, 연금수급자 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 * 두 변수는 매년 연방노동사회부 산하 연금위원회가 인구구성비 변화, 연금지출 등을 감안하여 조정				
	소득대체율	최대 80% (45년 재직 시 전 기간 평균소득 기준) * 2,3층 연금제도 비중 미미				
	재정운영방식	부과방식 :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조달, 독립된 연금기금 부재				
	보험료	공무원	10.25%	• 보험료는 공무원의 출생연도 및 근로자, 자영자, 농민 등 직종 유형에 따라 모두 다름 * 세부내용 본문참조		
		정 부	12.55%			
영 운	재직자 / 수급자 / 부양률	179천명 / 303천명 / 169% ('20년 연방공무원 기준)				
	운영기관	(제도관리 및 정책결정) 재무부 산하 연방연금청 (운영) 공무원사회보험공단 (BVAEB)				
주요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03년 연금수급자 대상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03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산정 기준소득 변경(최종소득 → 18년 평균소득) 후 세대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1.13~3.3%를 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 부과 (~'19년 퇴직자까지)</li></ul></li><li>2004년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 및 일반법정연금(APG) 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연금계좌 도입 및 65-45-80 원치 적용 등 지역별 공적연금 수급구조 일원화 (관리 및 운영 별도)</li></ul></li></ul>				

## 스웨덴 (중앙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1층 통합형		보증연금 + 국민연금 + 직역연금 (구분직용) + 사적연금 (임의가입) * 2층 직역연금에 구분이 있을 뿐 민간과 동일구조				3층	사적연금 (개인부담)				
						2층	직역연금 (고용주 부담)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무직	노동직		
							국민연금 (소득연금 IP + 프리미엄연금 PP)				
							보증연금				
구 분		1층 국민연금 : 소득연금 (IP) + 프리미엄연금 (PP)				2층 직역연금 (PA16 : 중앙공무원)					
연금	도입시기 및 가입대상		(현 체계 도입) 1998년 (시행) 1999년 (대상) 전 국민				4개 직역 (중앙·지방공무원/사무직·노동직·군로차)별 구분 가입				
	산 식	• IP (NDC) : (총기여액 + 가상이자) ÷ 퇴직시점 연금계수						출생연도, 최종 5년 급여수준에 따라 소득구간별 산정 (30년 미만 근무 시 근무개월 / 360개월 적용) * 산정표 본문 참조			
		• PP (DC) : (총기여액 + 시장수익) ÷ 퇴직시점 연금계수									
		퇴직시점 출생코호트별 잔여수명 (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반영									
	연금소득상한		해당연도 기준소득의 7.5배 ( <sup>20년</sup> 501,000 SEK * 1SEK ≒ 133원)								
평균연금월액		17,906 SEK ( <sup>20년</sup> 2,389,681원)									
재원	지급개시연령		62세 ( <sup>23년</sup> 63세, <sup>27년</sup> 64세) * 정년 없음								
	연금연동방식		연금재정상태(균형비)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작동								
	재원조달방식		IP : 부과방식, PP : 적립방식								
재원	보험료	피용자	9.25%	재원구성 : 소득연금 16% 프리미엄연금 2.5% (18.5%) *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제도 도입(1999년) 후 변경 없음				재원			
		사용자	9.25%								
운영	가입자/수급자/부양률		6,168,986명 / 1,583,741명 / 25.6% ('20년 기준)								
	운영기관		(관리) 보건사회부 (운영) 스웨덴 연금청 : 보증연금, 국민연금 등								
주요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913년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기초연금 및 특별보충연금 도입 등 연금 확대 복지모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1991년 경제위기로 1998년 이후 연금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의 구조개혁 실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명목확정기여방식(NDC) 연금제도와 기대수명 및 재정상태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li></ul></li><li>■ 2023년 연금수급 대상연령을 사전(6년 전)에 결정하는 ‘목표연령’ 도입으로 연금개시연령 지속 상향 예정 ... (평가) 1998년 연금개혁 이후 모든 계층의 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연금급여액이 낮아지면서 노인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한계 有</li></ul>									

## 핀란드 (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1층 통합형	기초연금·최저보장연금* + 소득비례연금** + (단체연금) * 소득비례연금액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 ** 핀란드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적연금 지출의 약 90%를 차지	3층 개인연금, 장기저축계좌
		2층 단체연금보험 (Group Pension Insurance) : 임의가입
		1층 소득비례연금 (Earning-Related Pensions)
		0층 기초연금 (National Pensions), 최저보장연금 (Guarantee Pensions)
		대상 국가공무원      주·지방공무원      민간근로자

구 분		소득비례연금 (Earning-Related Pensions)				
연 금	도입시기 및 가입대상	(도입) 1961년 (가입대상)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산 식	기준소득 × 지급률 × 재직기간 × 기대여명계수				
		전 기간 평균소득				
		'17~'25년52세 미만 1.5%, 53~62세 1.7%, 63~68세 4.5% → '26년전 연령 1.5%				
	지 급 률	2009년 62세에 도달하는 집단을 기준(계수1로 설정)으로 매년 62세에 도달하는 집단의 계수를 결정하여 연금액의 가치 조절 (1958년생의 기대 여명계수 0.95404)				
재 원	기대여명계수					
	지급개시연령	63세~68세 → '27년 65~70세 → '30년 기대여명과 연동				
	연금연동방식	임금지수와 물가지수를 2 : 8로 결합하여 조정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60% → 기대여명계수 도입으로 '80년 45% 전방		평균연금액 €1,820 ('20년)		
영 은	재정운영방식	(공공부문 근로자) 부과방식 (민간근로자) 부분직립방식				
	보험료 ('22년)	대상	국가공무원 53-62세 그 외 연령		지방공무원 등 53-62세 그 외 연령	
		피용자	8.65%	715%	8.65%	715%
		사용자	17.3%		16.83% 17.4%	
	가입자/수급자/부양률	250만명 / 150만명 / 60% ('20년, 전체 제도 가입자기준)				
주요 개혁	연금관리·운영기관	(총괄) 핀란드 연금센터 (공공부문 담당) Keva				
	■ 2005년 기대여명계수 도입, 연금상한제(연금액이 최종소득의 60% 초과 금지) 폐지 ■ 2017년 연금개시연령 연장 및 기대여명연동(63세~68세 → '27년 65~70세 → '30년 기대여명과 연동)					



## 일본 (국가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1·2층 통합형		국민연금* + 후생연금 + 퇴직등연금여(3층 구분)			3층	퇴직등연금여		
		* 일본 '국민연금'은, 전 국민 노후기초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된 정액형 연금제도로 국고보조 등 형태는 기초연금에 가깝음			2층	후생연금 (소득비례연금)		
					1층	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민간근로자	자영자 등
구 분		1층 국민연금			2층 후생연금			
도입시기		1961년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 제정·시행 (가입대상: 민간근로자) 2015년 10월 공무원을 포함한 70세 미만 직장인으로 확대·시행			
가입대상 ('18년)		제1호: 20~60세 자영자, 농민, 학생 등 (1,471만명) 제2호: 공무원 및 민간근로자 (4,428만명) 제3호: 제2호의 배우자 (847만명)			70세 미만 제2호 가입자: 공무원(448만명) 및 민간근로자(3,981만명)			
연 금	산 식	781,700엔 × 보험료납부월수 ÷ 480개월			평균표준보수월액 × (9.5 ~ 7.125) / 1,000 × '03년 3월 이전 가입기간 + 평균표준보수월액 × (7.308 ~ 5.481) / 1,000 × '03년 4월 이후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월수	완전기초연금액 (전년 금액 × 물가상승률로 결정)			* 지급률은 생년월일에 따라 차등		
			보험료 납부월수 + 보험료면제월수 × (1/2 ~ 7/8) · 보험료 전액면제: 1/2 · 보험료 1/2 면제: 3/4 · 보험료 3/4 면제: 5/8 · 보험료 1/4 면제: 7/8			* 국민연금, 후생연금 외 3층에 별도의 공무원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제도 보유 (세부내용 본문 참조)		
	지급조건	보험료 납부 및 면제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고 후생연금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지급개시연령	~ 2012 60세	~ 2015 61세	~ 2018 62세	~ 2021 63세	~ 2024 64세	2025~ 65세	* 여성의 경우 납성에 비해 5년 늦게 지급개시연령 연장(2030년 65세)
연금연동방식		물가변동을 또는 임금변동을 + 거시경제 조정률 (= 공적연금 피보험자수 변동률 + 기대여명 상승률)						
소득대체율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83% ('19년)						
재정방식		부과방식						
재 원	보험료	제1호: 16,540엔 ('20년) * (일부) 면제 · 유예자: 614만명 제2~3호: 보험료 별도 납부하지 않음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에서 재정부담						
		9.15%						
	정 부	당해연도 국민연금 소요액 1/2 국고 부담						
운 영	가입자/수급자/부양률		6,746만명 / 3,529만명 / 52% ('18년)				후생연금(국가공무원): 108만명 / 65만명 / 60.2% ('19년) (민간) 일본연금기구 (공무원) 국가/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학) 사립학교공제사업단	
	운영기관		(감독) 후생노동성 연금국, (운영) 일본연금기구					
	주요 개혁		■ 1986년 현행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으로 다층개혁 ■ 2012년 공적연금 재정기반과 최저보장기능 강화위해 국민연금 국고부담 1/2 규정, 관민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공제연금*을 모두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 제정					

\* 공제연금: 2015년 10월 이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민간근로자와 별도로 적용받던 공적연금제도



## 대 만 (공무원)

운영방식		공무원의 공적연금 가입체계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독립형	공무원·교직원보험(일시금) + 공무원연금기금(연금) * 공무원은 1층 공무원·교직원 보험을 통해 일시금만 수령 가능하며, 2층 공무원연금기금을 통해 연금을 수령함	3층			개인저축 등		
		2층			공무원연금기금		
		1층			군인보험	공무원·교직원보험	사립학교퇴직기금
		대상	군인	공무원	공립교직원	사립교직원	민간근로자
		공무원연금기금					
구 분							
도입시기 및 가입대상		(도입) 1943년 (가입대상) 공무원, 공립학교 교원, 군인 등					
연금	산 식	기준소득 × 지급률 × 재직기간					
	기준소득	22년최종 8년 평균 연금보수 → 29년최종 15년 평균 연금보수 * 연금보수 : 기본급의 2배, 실제 소득의 110~130% 수준					
	지 급 률	~ 35년 : 2%, 35년 초과~40년 : 1%					
	재직기간	재직기간 상한 40년					
	지급개시연령	61세 → 26년65세 : 단계적 인상 중					
	연금연동방식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정부재정 및 연금 기금 적립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소득대체율	40년 근무 가정 시 75%	산식 : (35년 × 2%) + (5년 × 1%)				
	재정운영방식	부분적립방식					
	보험료	피용자	4.9% ('22년)		보험계리 결과에 따라 12~18% 내에서 전세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며, 그 중 피용자가 35% 사용자가 65%를 부담		
		사용자	9.1% ('22년)				
운영	가입자 / 수급자 / 부양률		672,000명 / 363,000명 / 54%('20년)				
	연금관리·운영기관		공무원연금기금관리위원회(PSPFMB)				
	주요 개혁		■ 1995년 전액 정부 부담제 → 기여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금운용기관(PSPF) 설립 ■ 2017년 지급개시연령 인상, 기준소득변경 등 모수개혁 단행 (2018. 7월 시행, 단계적 적용) - 지급개시연령 인상 (55세 → 21년 68세 → 26년 65세) - 기준소득변경 (최종 연금보수 → 최종 5년 평균 연금보수 → 29년최종 15년 평균 연금보수)				



## II

---

### 국가별 운영현황 (대륙별)

---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미국



## 미국 (연방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1935년 도입된 사회보장연금 (OASDI)을 근간으로 공적연금제도 발전
- OASDI를 기본으로 하되,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철도연금, 군인연금, 연방공무원 및 州별 공무원연금제도 분리 운영
- 연방공무원연금은 '87년 신·구 연금제도 분리 및 다층체제 전환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3층	개인연금(보험사 등 금융기관 상품) 또는 IRA(개인퇴직계좌) / TSP(연방공무원)				
2층	DB형 기업연금 DC형 기업연금	IRA형 (사용자 매칭)	BP (新연방공무원 연금)	CSRS (舊연방 공무원 연금)	주·지방 공무원 연금
1층	OASDI (사회보장연금)				

적용대상	자영업자	민간근로자	연방공무원	주·지방공무원
------	------	-------	-------	---------

## 연방공무원연금제도 (CSRS/FERS) 주요 내용

### ■ 주요 연혁 및 관련 법령

- 1920년** 연방공무원연금제도 (CSRS) 도입  
- (최초법) Civil Service Retirement Act
- 1969년** 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제도로 전환
- 1987년** 신·구 이원화, 신제도 (FERS) 다층화 (OASDI+BP+TSP) 및 (회계상) 완전적립 이행  
- (현행법)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

### ■ 적용 대상자

- CSRS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 舊공무원연금제도  
- 1983년 12월 31일까지 연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
- FERS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新공무원연금제도  
- 1984년 1월 1일부터 연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  
- 1층 사회보장연금 (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2층 공무원직역 연금 (Basic Pension), 3층 개인저축계정 (TSP : Thrift Savings Plan) 동시 적용
- 인원 현황 ('19. 9월 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가입자수(A)	연금수급자수(B)	부양률(B/A)
CSRS	70	1,717	2,452.9%
FERS	2,740	996	36.4%
합 계	2,810	2,713	96.5%

### ■ 재원조달

- 재정방식** CSRS(회계상) 부분적립, FERS(회계상) 완전적립  
- FERS 적립재원은 정부특별채권 발행으로 조달, 국가채무로 인식
- 소득구간** 소득구간의 상하한 없음 (OASDI 소득상한 \$142,800, 2021년)
- 비용부담** CSRS : 공무원·정부 동물 부담(기본급 7%) 및 연금충당부채 이자분 등 정부 추가부담  
FERS : 공무원 0.8%~4.4%\* 부담 제외 표준보험료 정부 전액 부담  
(OASDI는 공무원·정부 6.2% 균형부담)  
\* 2012년 이전 임용 0.8%, 2013년 임용 3.1%, 2014년 이후 임용 및 재직기간 5년 미만 4.4%

구 분		CSRS 가입자	FERS 가입자
공무원 기여율	OASDI	-	6.2%
	CSRS / FERS	7.0%	0.8% ~ 4.4%
	TSP	선택가능 (정부지원 無)	0% ~ 12%
정부 부담률	OASDI	-	6.2%
	CSRS / FERS	7% + 추가부담금	(표준보험료율 - 기여율)
		35.2%	
	TSP	-	0% ~ 5%
	총부담률	41.4% (OASDI + FERS)	
재정 현황 (10억\$)	총수입액	108.1	
	총지출액	88.7	
	적립기금	948.2	
	미적립채무	1,025.0 (823.5 <CSRS> + 201.5 <FERS>)	

\* 2019년 회계연도 기준<sup>2)</sup>

## ■ 수급요건

**퇴직연금**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 시 지급개시연령에 연금지급

재직기간	舊연방공무원연금 (CSRS) (1983년 이전 임용자)	新연방공무원연금 (FERS) (1984년 이후 임용자)
5년 이상	62세	좌동
20년 이상	60세	좌동
30년 이상	55세	55세~57세

출생년도	1947이전	1948	1949	1950	1951	1952	
개시연령	55세	55세 2월	55세 4월	55세 6월	55세 8월	55세 10월	
출생년도	1953-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이후
개시연령	56세	56세 2월	56세 4월	56세 6월	56세 8월	56세 10월	57세

2) OPM (2021),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Annual Report, Fiscal Year Ended September 30, 2020.



**유족연금** 연방공무원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퇴직연금수급 중 사망하는 경우

\* 연방공무원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 전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 발생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등 일시금만 지급

- (배우자) 혼인기간 9개월 이상인 배우자

구분	舊연방공무원연금(CSRS) (1983년 이전 임용자)	新연방공무원연금(FERS) (1984년 이후 임용자)
재직기간	18개월 이상	10년 이상
혼인기간	9개월 이상 단, ① 공무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사망한 공무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9개월 미만도 인정	
이혼한 전 배우자	① 적법한 법원 명령을 받고 ② 혼인기간 9개월 이상(예외규정 없음)으로 ③ 55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은 경우 (사망 공무원과 혼인기간 30년 미만 시)	

- (자녀) 사망한 연방공무원에게 부양받고 있던 18세 미만 자녀 등

구분	모든 연방공무원 (CSRS/FERS 동일 적용)
재직기간	18개월 이상
대상자	①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② 공인 교육기관에 전일제로 다니는 18세 이상 22세 이하 미혼 자녀 ③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미혼 자녀
수급권 소멸	(공통요건) 결혼 (개별요건) ① 18세 도달 ② 22세 도달 또는 전일제 교육 중단 ③ 장애 회복 또는 경제적 자립

**장해연금** 사망한 연방공무원에게 부양받고 있던 18세 미만 자녀 등

舊연방공무원연금(CSRS) (1983년 이전 임용자)	新연방공무원연금(FERS) (1984년 이후 임용자)
5년 이상	18개월 이상

## ■ 급여지급액

### 퇴직연금

구분	舊연방공무원연금(CSRS) (1983년 이전 임용자)	新연방공무원연금(FERS) (1984년 이후 임용자)
기준소득	최고 3년 평균 보수 (HT: High Three Average Salary)	
연금산식	재직기간	구분
	5년 이하	연금액
	5년 초과 10년 이하	재직 20년 미만 or 62세 미만
	10년 초과	재직 20년 이상 and 62세 이상
최대지급률	80%	-

### 유족연금

구분		舊연방공무원연금(CSRS) (1983년 이전 임용자)	新연방공무원연금(FERS) (1984년 이후 임용자)
배우자	재직 중 사망	장해연금의 55%	퇴직연금의 50% + 일시금*
	수급 중 사망	퇴직연금의 55%	퇴직연금의 50%
자녀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52, 최대 \$1,659 ('21년 기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자녀 1인당 \$663, 최대 \$1,990 ('21년 기준)	

\* (2020년 기준) \$34,542.01 + ① 사망 당시 연봉 × 50% 와 ② HT × 50% 중 더 큰 금액

### 장해연금

舊연방공무원연금(CSRS) (1983년 이전 임용자)	新연방공무원연금(FERS) (1984년 이후 임용자)
퇴직연금산정액과 HT × 40% 중 높은 금액	(첫 해) (HT × 60%) - (사회보장장해연금) (62세까지) (HT × 40%) - (사회보장장해연금 × 60%) (62세 이후) 62세까지 계속 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재산정 = HT(퇴직 당시 HT를 62세까지 COLA로 현가) × 1%(or 1.1%) × 재직기간(장해연금 수급기간 포함)

- 연금연동방식** 생계비조정(COLA : Cost-of-Living Adjustments) 적용
- CSRS : 물가상승률 전부 반영
  - FERS : 물가상승률 반영하되, 2% 이상 시 단계별로 일부 차감

舊연방공무원연금(CSRS)	新연방공무원연금(FERS)		
소비자물가인상률(CPI)	$CPI \leq 2\%$	$2\% \leq CPI \leq 3\%$	$CPI > 3\%$
	CPI	2%	$CPI - 1\%$

## ■ 관리운영기관

- CSRS, FERS** 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OASDI**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TSP** 연방퇴직저축위원회 (The 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



#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캐나다



## 캐나다 (연방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기초노령연금, 보충연금, 소득비례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루어진 다층 공적연금체계
- 공무원연금은 주·지방·직종(군인, 교원 등)에 따라 별도로 운영
- 2000년부터 재정방식을 명목적립방식에서 실질적립방식으로 변경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3층	RRSPs 개인저축계정	RPPs 고용주 제공 기업연금	PSPP 연방공무원연금	주·지방 공무원 연금	
2층	-	CPP(Canada Pension Plan) 또는 QPP(Quebec Pension Plan)			
1층	OAS (Old Age Security 기초노령연금)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보충연금)				
적용대상	비경제활동자	자영업자	민간근로자	연방공무원	주·지방공무원

## 공적연금제도 개요

제 도	개 요
<b>OAS</b> (Old Age Security) 기초노령연금	<b>개 요</b> 연령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하는 보편적 수당방식의 연금 *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연금액이 감액·환수됨 <b>급여수준</b> 캐나다 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15%수준 <b>재 정</b> 일반조세
<b>GIS</b> (Guaranteed Income Supplements) 보충연금	<b>개 요</b>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보충급여 * 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1/3수준 이하인 저소득 노인 대상 <b>급여수준</b> 최대급여액기준 평균소득의 약 18% 수준 <b>재 정</b> 일반조세
<b>CPP/QPP</b> (Canada/Quebec Pension Plan) 캐나다/퀘벡 연금	<b>개 요</b>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형 연금 <b>급여수준</b> 소득대체율 25% → '23년 33.3% 목표로 점진적 상향 (2016년 개혁) <b>재 정</b> 보험료 9.9% → '23년 11.9% 목표로 점진적 상향 (2016년 개혁)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각 50% 부담, 자영업자의 경우 100% 본인부담

## 연방 공무원연금제도(PSPP) 주요 내용

### ■ 주요 연혁 및 관련 법령<sup>3)</sup>

- 1870년** 연방공무원대상 연금지급을 위한 최초의 공무원연금법 마련
- 1924년** 구 공무원연금법(CSSA : Civil Service Superannuation Act) 제정
  - 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 등 공무원연금급여 구체적 내용규정
- 1954년** 신 공무원연금법(PSSA :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제정
  - 기존 공무원연금급여는 국가의 보조금 개념이었으나 새 법률 하에서는 퇴직 시 개인의 고유 권리로 인정
- 1966년** 일반 국민을 위한 소득비례형 공적연금 CPP(QPP) 도입
  - 연방공무원도 CPP(QPP) 가입대상으로, PSPP제도와 유기적으로 운영

3) [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public-service-pension-plan-history.html](http://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public-service-pension-plan-history.html)

- 2000년 공무원연금기금 투자방식 변경 (명목적립방식 → 실질적립방식)
  - 2000년 3월까지의 연금거래내역이 정부 계정에만 기록되고 기금이 실제 시장에 투자하지 않았으나, 2000년 4월 정부투자기관인 공무원연금투자위원회 (PSPIB)를 설립하여 적립기금을 실제 시장에 투자
- 2012년 고용 성장법 (Jobs and Growth Act) 개정
  - 2013년 가입자부터 개시연령 상향 (60세 → 65세)

## ■ 적용 대상자

- 연방공무원 (전일제 및 시간제 포함)
- 일부 공공기관 직원 및 지방공무원 (territorial government)
- 인원 현황 ('20년 3월 말 기준)

(단위: 명)

재직자(A)	연금수급자(B)*	부양률(B/A)
331,665	281,765	84.95%

\* 거치연금(deferred annuitants) 대상자 : 37,923명 제외

## ■ 재원조달

**재정방식** 2000년 이전 회계상 부분적립, 2000년 이후 완전적립 목표  
 - 2000년 이전 보험료는 20년 만기 정부채권 이자율로 명목 적립

**소득구간** 공무원연금(PSPP)에는 소득에 상하한이 없으나, 소득비례형 연금(CPP/QPP) 제도의 소득상한(YMPE)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됨

**비용부담** 원칙적 공무원·정부 동물 부담 및 연금부족분 정부부담으로 상각  
 - 보험료 산정: 캐나다 수석 보험 계리실(OCA)에서 시행하는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라 매년 증감 조절

\* 2012년 이전 임용 0.8%, 2013년 임용 3.1%, 2014년 이후 임용 및 재직기간 5년 미만 4.4%



### <연방공무원의 CPP 및 PSPP 기여율>

연도	소득 상한 (YMPE*)	소득 하한 (YBE**)	소득비례형 공적연금 (CPP/QPP) 기여율			공무원연금(PSPP) 기여율***			
			YBE 이하	YBE ~ YMPE	YMPE 초과	2012. 12. 31. 이전 임용자 (개시연령 60세)		2013. 01. 01. 이후 임용자 (개시연령 65세)	
						YMPE 이하	YMPE 초과	YMPE 이하	YMPE 초과
2020년	\$58,700	\$3,500	-	5.25%	-	9.53%	11.72%	8.69%	10.15%
2021년	\$61,600	\$3,500	-	5.45%	-	9.83%	12.26%	8.89%	10.59%
2022년	\$64,900	\$3,500	-	5.7%	-	9.36%	12.48%	7.95%	11.82%

\* YMPE (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 CPP에서 매년 설정하는 연간 보험료 산정 소득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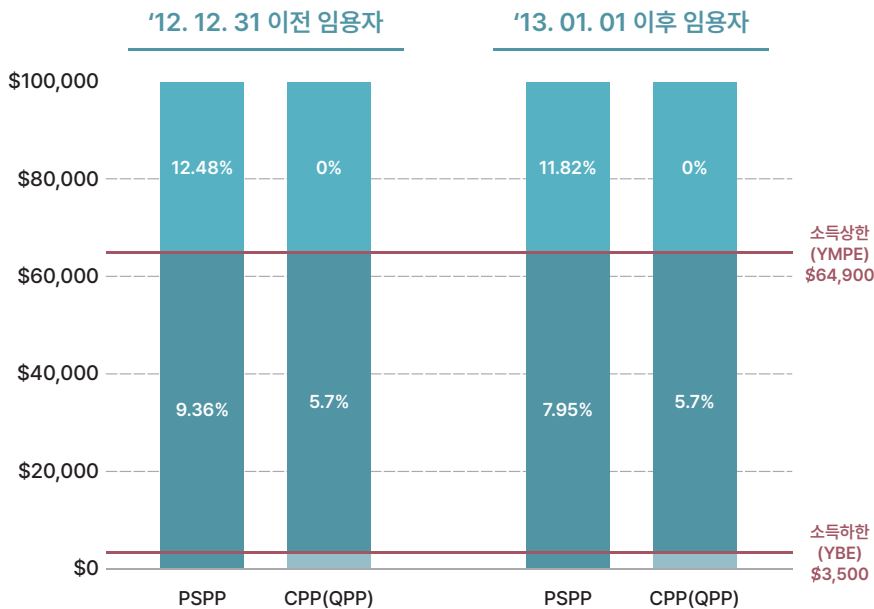
\*\* YBE (Year's Basic Exemption) : CPP에서 매년 설정하는 연간 보험료 면제 대상 소득

\*\*\* 공무원연금(PSPP) 기여율 : 재직기간 35년 초과시, 퇴직시까지 기여율 1% 적용

### (예시) 2022년 기준 캐나다 연방공무원의 PSPP 및 CPP(QPP) 기여구조<sup>4)</sup>

상한소득 미만 구간은 공무원연금과 캐나다(퀘벡)연금에 동시기여하며, 상한소득 초과 구간은 공무원 연금에만 기여하되 상한소득 미만 구간 보다 더 높은 기여율을 적용함

(단위: 캐나다\$)



4) [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retirement-income-sources](http://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retirement-income-sources)

**재정현황** 2020년 회계연도 기준<sup>5)</sup> 적립된 기금 규모는 연금 총당부채 (Pension Obligation\*)에 미달하여 110,643백만 달러의 재정 부족 상태임

\* 연금 총당부채 (Pension Obligation) : 기대수명, 퇴직연령,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미래 지급 예정인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

(단위 : 백만 캐나다\$)

구 분	2000. 3. 31. 이전 재직기간	2000. 4. 1. 이후 재직기간
	구계정 (PSSA;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count)	신계정 (PSPFA; Public Service Pension Fund Account)
순자산(A)	-	124,561
연금 총당부채(B)	123,152	112,052
정부로부터 총당될 적자(A-B)	(110,643)	

\* 2000년 공무원연금 투자방식 변경으로 2000. 4. 1. 전·후로 별도의 계정을 운영하며, 구계정(PSSA)은 지불능력을 상실하여 연금계획의 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음

## ■ 수급요건

**퇴직연금**<sup>6)</sup>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 시 지급개시연령에 연금지급

재직기간	2012. 12. 31. 이전 임용자		2013. 1. 1. 이후 임용자	
2년 이상	개시연령 60세		개시연령 65세	
	60세 이후 퇴직시	즉시연금	65세 이후 퇴직시	즉시연금
	50-60세 퇴직 시	거치연금	55-65세 퇴직 시	거치연금
		조기연금		조기연금
	50세 미만 퇴직 시	거치연금	55세 미만 퇴직 시	거치연금
		급여이전		급여이전
30년 이상	개시연령 55세		개시연령 60세	

- 즉시연금 (Immediate Annuity) : 개시연령 도달 후 퇴직 시 신청 가능한 급여
- 거치연금 (Deferred Annuity) : 개시연령 도달 전 퇴직 시 신청 가능한 급여로 신청 시 개시연령까지 대기 후 퇴직급여를 수령함
- 조기연금 (Annual Allowance) : 개시연령 도달 전 퇴직 시 신청 가능한 급여로 신청 시 5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연간 약 5%씩 감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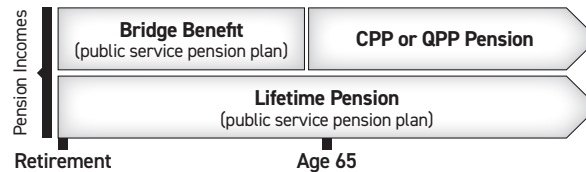
5) [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retirement-income-sources](http://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retirement-income-sources)

6) [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public-service-pension-options.html](http://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public-service-pension-option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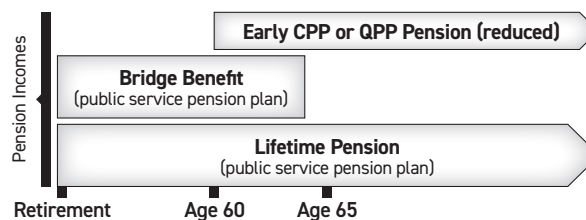
- 급여이전(Transfer Value) : 조기연금으로 수급 가능한 기간 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급여로 퇴직연금형 계좌(RPP) 또는 은퇴시점까지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저축형 계좌(LIRS)로만 이체가 가능함
- 기여금 반환(Return of Contributions) : 2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소정의 이자와 함께 반환

### 가교연금 : Bridge Pension <sup>7)</sup>

- CPP(QPP) 지급이 개시되는 65세 전까지 공무원퇴직연금과 함께 지급되는 급여



- 조기연금으로 65세 이전 CPP(QPP)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퇴직연금과 함께 65세까지 지급함



### 유족연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 (배우자)

구 분	내 용
재직기간	2년 이상
대상자	① 공무원 퇴직 전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 1년 이상인 경우 ② 공무원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족연금 대상 아니지만, 퇴직 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선택 가능
재혼 시 수급권 소멸여부	1989년 이전에는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 소멸하였으나, 1989년 법 개정으로 재혼하더라도 수급권 소멸하지 않음

- (자녀)

구 분	내 용
재직기간	2년 이상
대상자	① 18세 미만의 자녀 ② 공인 교육기관에 전일제로 다니는 18세 ~ 25세 자녀

7) [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retirement-income-sources](http://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retirement-income-sources)

**장해연금** 장해보상을 위한 별도의 연금은 없으며, 2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즉시 지급

## ■ 급여지급액

### 퇴직연금

연금지급률	×	기준소득	×	재직기간(최대 35년)
1.375%	×	최고 5년 평균소득 (AMPE 이하)	×	재직기간
+				
2%	×	최고 5년 평균소득 (AMPE 초과)	×	재직기간

\* AMPE (average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 CPP (QPP)에서 설정한 연간 보험료 산정 소득상한(YMPE)의 평균값으로, 퇴직연도를 포함한 퇴직 전 5년 소득으로 산정됨

### 가교연금 : Bridge Pension

연금지급률	×	기준소득	×	재직기간
0.625%	×	최고 5년 평균소득 (AMPE 이하)	×	최대 35년

### 유족연금

구 분	급여액
배우자	퇴직연금액의 50%
자녀	① 유족연금 받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퇴직연금액의 10%씩 추가 지급 단,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까지만 지급되고, 자녀 수에 따라 균분 ② 유족연금 받을 배우자가 없거나, 해당 배우자가 3개월 내 수급권 포기하면, 기존 자녀 유족연금액의 2배(1인당 20%씩, 최대 80%) 지급

### 연금연동방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적용

※ CPI 하락 시 연금 미조정

## ■ 관리운영기관

- 정책수립** 캐나다 재무부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연금사업** 캐나다 정부연금센터 (Government of Canada Pension Centre)
- 기금운용** 공무원연금 투자위원회 (Public Sector Pension Investment Board)
- 평가·규제** 금융기관 감독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 특이사항 및 개혁동향

### ■ 특이사항

#### 가교연금 : Bridge Pension

- 연방 공무원연금제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제도에서 가교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적부문의 RPPs(고용주 제공 기업연금)의 경우 대부분 가교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권장하는 과도한 보장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 여론 존재함

#### 연금정지

- 공무원 재임용 시 전액정지, 민간부문 임용 시 정지하지 않음
- \* 공직과 관련 없는 경제적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 공적연금제도 개혁동향

- 2016년 소득비례형 공적연금(CPP) 개혁
  - (배 경)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은 우수하나, 중산층 이상의 소득비례형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OECD와 G20 국가들 중 하위권에 위치
  - (주요내용) 소득대체율 상향 (25% → 33%)을 목표로 보험료 납입 상한액 및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함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영국



## 영국 (국가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1908년 자산조사방식 기초노령연금 → 1946년 보편적 국가연금제 도입
-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고용저축신탁회사(NEST)에 가입
  - \* 약 300개 이상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존재하나 국가공무원연금, 지방공무원연금, 경찰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의료서비스 연금에 총 공무원의 95%가 가입됨
- 직역연금제도는 자동가입제이지만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탈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준강제적 성격을 지님
- 국가공무원연금은 1972년 법제정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개혁 추진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3층 (임의)	개인연금 보험 등		
2층 (OPT-OUT) 자동가입·탈퇴가능	국가공무원연금 (PCSPS*)	직역연금 (NEST포함)	
1층 (의무)	신국가연금 (NSP)		
0층 (의무)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적용대상	공무원	민간 근로자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	--------	------	---------



## 공적연금제도 개요

제도	내용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div>개 요</div>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전액 정부재원으로 조달
	<div>급 여</div> 최저보장소득('20년독신 £175.75, 부부 £265.20)과 실제소득 차액 지급
신국가연금 (New State Pension)	<div>개 요</div> 소득활동을 대상으로 국민보험료에 포함하여 정률 징수하고 급여액은 정액으로 지급함 (소득재분배 요소를 포함한 시스템)
	<div>급 여</div>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20년 24.1% 수준

## 국가공무원연금제도(PCSPS) 개요

### ■ 주요 연혁 및 관련 법령

- 1834년** 최초의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 1972년** 국가공무원연금제도(PCSPS) 도입  
- (최초법) Superannuation Act 1972
- 1995년** 연금충당부채부담제도 및 명목기금제도 도입
- 2002년** Premium(DB형) / Partnership(DC형) 제도 도입  
- 이전 제도는 Classic, Classic+로 명명
- 2007년** Nuvos 제도 도입
- 2010년** 연금연동방식 변경 (소매물가지수 → '11년~ 소비자물가지수)
- 2015년** Alpha 제도 도입  
- (현행법) Public Service Pensions Act 2013

#### [국가공무원연금제도 변화]

도입연도		1972	2002		2007	2015
PCSPS	DB형	classic	classic+	premium	nuvos	alpha
	DC형	-			Partnership (완전적립 개인계좌 형식)	

※ '02.10월 이후 임용자의 경우 DB제도와 DC제도 중 선택하여 가입토록 함  
→ 공무원 선택 폭 확대 및 연금제도간 연계성 강화

## ■ 인원 현황<sup>8)</sup> ('20년 기준)

(단위: 명)

재직자(A)	연금수급자(B)*	부양률(B/A)
542,373	706,351	130.2%

\* 거치연금 대상자: 357,830명 미포함

## ■ 재원조달

- DB형: 순수부과방식

**공무원** 비기여제를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연금 및 유족급여 상당에 한해 보험료 납부 (독신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 및 이자 반환)

**소관부처** 연금충당부채부담률(ASLC)\*에서 공무원 보험료 차감 후 부담

\* ASLC(Accrued Superannuation Liability Charges): 완전적립제도의 표준보험료와 명목미적립부채 분할상각 부담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자인 소속기관이 매 4년마다 소득 수준별로 산정함

**정 부** 공무원·소관부처로부터 징수한 보험료가 당해 연도 연금지출액에 미달할 경우, 의결과정을 거쳐 정부 일반예산에서 차액을 부담 (Balancing Contribution)

구 분		비용부담				
공무원 기여율		4.6% ~ 8.05% (평균 5.7%)				
		소득(£)	~ 22,600	22,601 ~ 54,900	54,901 ~ 150,000	150,001 ~
		기여율	4.60%	5.45%	7.35%	8.05%
소관부처 부담률		27.3%				
		소득(£)	~ 23,000	23,001 ~ 45,500	45,501 ~ 77,000	77,001 ~
		ASLC비율	26.6%	27.1%	27.9%	30.3%
재정현황 (10억£)	적립기금	없음 (순수부과방식)				
	미적립채무	307.51				

\* 2020년 회계연도 기준<sup>9)</sup>

8) Cabinet Office(2021), Civil Superannuation Account 2020-21, p.10.

9) Cabinet Office(2021), Civil Superannuation Account 2020-21, p.8, p.19

• DC형 : 완전적립방식

- 소관부처 전액부담 (연령별 8~14.75%)
- 공무원 추가 부담 가능 (연금보수의 3%까지 정부가 매칭 부담)

(단위 : %)

구 분	31세 미만	31~35세	36~40세	41~45세	46세 이상
소관부처 부담률	8	9	11	13.5	14.75

\* 2022년 기준<sup>10)</sup>

## ■ 수급 요건

### 퇴직연금

도입연도(년)	1972	2002		2007	2015
가입대상	'02. 9. 30. 이전 재직자	'02. 9. 30. 이전 재직자 중 전환자	'02. 10. 1. 이후 임용자	'07. 7. 31. 이후 임용자	'15. 4. 1. 이후 임용자 및 07. 7. 31. 이후 임 용자 중 선택자 <sup>11)</sup>

DB	제도명	classic	classic+	premium	nuvos	alpha
	재직요건	2년 이상				
	개시연령	60세	60세	60세	65세	65세 또는 신국가연금 지급개시 연령 중 높은 연령*

DC	제도명	-	Partnership			
	개시연령	-	55세 이후 (퇴직 전에도 인출가능)			

\* 향후 신국가연금과 일치 추진 : 60세/65세 → 66세('20년) → 67세('28년) → 68세('39년<sup>12)</sup>)

10) [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knowledge-centre/pension-schemes/partnership-pension-account](http://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knowledge-centre/pension-schemes/partnership-pension-account)

11) alpha 적용대상 1) 정상퇴직연령에서 13.5년 이상 남아있는 재직자 일괄 적용 2) 정상퇴직연령에서 10년~13.5년 남아있는 재직자 신·구제도 중 선택 3) 정상퇴직연령에서 10년 미만 재직자 구제도 적용

12) 종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46년 68세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2017년 이보다 약 7년 앞당기기로 결정

**유족연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 (배우자) 이성 배우자 외에도 동성 파트너 등 장기적 동거, 경제적 상호 의존하는 성인 포함

구 분	수급요건
재직기간	2년 이상
대상자	공무원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 또는 동성 파트너로 등록된 사람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동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이혼 시 연금 분할	이혼 또는 파트너 관계를 종결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금에 대한 권한 분할 가능

- (자녀)

구 분	수급요건
재직기간	2년 이상
대상자	①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② 전일제 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8세 이상 23세 이하 자녀 단,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장해연금** 장해보상을 위한 별도의 연금은 없음. 다만, 2년 이상 재직하고 지급개시연령 전에 질병으로 퇴직하였으며, 영구적으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

■ **급여 지급액**<sup>13)</sup>

**퇴직연금**

- DB형

구 분 (도입연도)	classic (1972)	premium (2002)	nuvos (2007)	alpha (2015)
연금 급여산식	연금산정기준보수 × 재직기간 × 1.25%	연금산정기준보수 × 재직기간 × 1.67%	연금산정기준보수 × 재직기간 × 2.3%	연금산정기준보수 × 재직기간 × 2.32%
연금산정 기준보수	최종연금보수	최종연금보수	전기간평균연금보수	전기간평균연금보수

\* 소득대체율 : 최종소득 대비 최대 50% 수준(3년 평균소득 대비 66%)

13) [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members/alpha-scheme-guide/](http://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members/alpha-scheme-guide/)

- DC형

구분	Partnership (2002년 도입)
급여 결정의 원리	개인 계좌에 적립된 보험료 및 운용수익 총액을 연금화하여 산정

\* 공무원은 영국 내각부가 지정한 연금 사업자(Pension Provider) 중 선택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립금을 투자하여 공무원 개인계좌에 적립함 ('18년 이후 Legal & General Fund 1개 지정)<sup>14)</sup>

**유족연금**

구분	연금액
배우자	퇴직연금액의 37.5%
자녀	① 유족연금 받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퇴직연금액의 30%씩 추가 지급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60%까지만 지급되고, 자녀 수에 따라 균분 ② 유족연금 받을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1인당 퇴직연금액의 50%씩 지급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0%를 자녀 수에 따라 균분

- (일시금) 일시금 수령자는 공무원이 사전에 지정할 수 있음

구분	일시금액
재직 중 사망	사망 당시 연봉의 2배 또는 5년치 연금액 중 더 큰 금액
수급 중 사망	연금 수급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 5년치 연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연금연동방식** 소비자물가지수 (CPI)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인상률	3%	2.4%	1.7%	0.5%

■ **관리운영기관**

**관리운영**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공무원연금국

**집행업무** MyCSP(고용노동부 산하 독립법인) 설립 후 위탁 (2010년)

14) [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knowledge-centre/pension-schemes/partnership-pension-account](http://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knowledge-centre/pension-schemes/partnership-pension-account)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프랑스





# 프랑스 (국가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프랑스는 직업군에 따라 42개의 서로 다른 연금금으로 나누어 운영

- 공무원연금은 단층형 직역연금이었으나, 연금개혁으로 다층구조로 구성

- 1층 공무원연금제도(국가공무원 : CPCMR, 지방공무원 : CNRACL)와 2층 부가연금(RAFP)\*, 3층 임의가입제도(PREFON)\*\* 적용

\* 공무원은 '05년부터 부가연금(RAFP) 의무가입

\*\* 공공기관 은퇴준비제도(PREFON)는 선택적 퇴직연금으로 공공부문 근무이력 있을 시 가입가능, 월 €19부터 납입가능한 종신형 연금이며 세제혜택 제공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sup>15)</sup>

구 분		1층	2층	3층 (임의)
공공부문	공무원, 군인	국가공무원연금제도(CPCMR <sup>16)</sup> ) 공무원연금서비스 : SRE 운영	공무원 부가연금 (RAFP)	포괄적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선택적 퇴직연금
	지방공무원 국영병원근로자	지방공무원연금제도(CNRACL)		
	계약직	일반연금 국가노후보험기금(CNAV) 운영	국가및지방계약직 공무원보충연금 기금(IRCANTEC)	
	공공부문종사자	특별연금 (철도·전기공사 등 공공기관 종사자, 광부, 선원 등 특수직 종사자)		
민간부문	농업	농업공제조합(MSA)	Agirc-Arrco	추가가입의 퇴직연금 (Art83, 39, Prefon, PERP)
	상공업	일반연금 국가노후보험기금(CNAV) 운영		
자영업자	자영농민	농업공제조합(MSA)	RCO-MSA	Madelin법 형태의 임의보험제도
	장인, 소상공인	자영자 연금	RCO-RSI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건축사, 약사, 회계사 등(CNAVPL)	적립 혹은 부과방식 퇴직연금	

15) 유호선(2021),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 연금이슈&동향분석 제83호, 국민연금연구원.

16) 공무원 및 군인퇴직연금법전(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 de retraite)

##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 ■ 주요 연혁

- 1831년** 국왕 루이필립 군인연금법 제정
- 1853년** 나폴레옹 3세 주도 하 공무원과 군인 통합 연금제도 설립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또는 군인이 60세가 되면 퇴직연금 수령
  - 재직년수 1년당 급여의 1/60(약 1.7%)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1924년**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연금제도 설립
  - 현행 공무원·군인연금 시초로, 기여금 공제 등 공적연금원칙 도입
- 2003년** 공무원연금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전반 연금개혁
  - 완전연금 수령 위한 기여금 납부기간 점진적 상향: 37.5년 → 40년
  - 1993년부터 일반연금에 적용되었던 감액 시스템을 공무원연금에 적용
  - 공무원과 자영자를 위한 의무가입의 2층 기업연금(포인트제) 도입
- 2010년** 공공부문 지출 축소를 위한 개혁
  -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60 → 62세로 증가
  - 퇴직 후 도달해야 할 연금지급개시연령 65 → 67세('23년)로 상향
  - 기여금 7.85% → 10.55%로 인상(향후 10년간)
    - 근로자, 학생, 대다수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 야기
- 2014년** 기여금 인상(3%) 및 납부기간 연장
  - 완전연금 수급 위한 기여금 납부기간 41.5년 → 43년으로 연장('20~'35년)
- 2019년**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42개 공적연금 일원화 방안추진 중단 상태

### ■ 적용범위 및 운영주체

구분	적용대상	운영주체
국가공무원연금	일반직, 군인, 법관, 공립학교 교원 등	경제재정부 공공재정일반국 산하 국가퇴직연금과(SRE)
지방공무원연금	지방자치공무원, 국공립 병원 의료 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연금기금 (CNRACL)

## ■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급자 현황

(‘19년 말 기준, 단위: 천명)

구 분	가입자수(A)	연금수급자수(B)	합계(A+B)	부양률(B/A)
국가공무원연금	2,040	2,710	4,750	132.8%
지방공무원연금	2,219	1,280	3,499	57.7%
합 계	4,259	3,990	8,249	93.68%

## ■ 보험료율<sup>17)</sup>

### 공무원 기여율

(단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무원	8.76	9.14	9.54	9.94	10.29	10.56	10.83	11.10

### 정부 부담률

(단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공무원	71.78	74.28	74.28	74.28	74.28	74.28	74.28	74.28
지방공무원	28.85	30.40	30.50	30.60	30.65	30.65	30.65	30.65

## ■ 연금 재평가

'13.4.	'14.4.	'15.10.	'16.1.	'17.10.	'18.10.	'19.1.	'20.1.		'21.1.	'22.1.
1.3%	-	0.1%	-	0.8%	-	0.3%	€2,000 이하	1%	0.4%	1.1%
							€2,000 초과	0.3%		

- '22. 1. 1.자 연금 재평가율은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21.10. 소비자 물가지수(담배 제외)를 감안하여 1.1%인상
- ※ 공무원연금 등 기본연금 재평가 방식은 사회보장법에 규정

17) COR(2021), Evolutions et perspectives des retraites en France Rapport annuel de COR- Juin.

## ■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액<sup>18)</sup>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최대 75%

- (산식) ① 기준보수 급여총액 × (② 기여금 납부 분기수 / ③ 완전연금수령 분기수) × 75%

① 기준보수 기준 : 최종 6개월 보수 (보수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상여금 제외)

② 기여금 납부 분기수는 4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미만은 절사

③ 완전연금수령 분기수는 1973년생 기준 172분기 (재직기간 43년) 적용

수급연령 도달시기	완전연금수령 분기수	수급연령 도달시기	완전연금수령 분기수
2013~14년	165분기	2024 ~ 26년	169분기
2015~17년	166분기	2027 ~ 29년	170분기
2018~20년	167분기	2030 ~ 32년	171분기
2021~23년	168분기(42년)	2033년 이후	172분기(43년)

- (연금액 감액 및 증액)

① 기여금 납부기간이 완전연금 수급가능 분기수보다 적을 경우 연금액 감액

: 부족한 분기수 × 1.25%, 최대 감액한도 20분기 (25%)

② 기여금 납부기간이 완전연금수급가능 분기수 초과시 증액 (초과 분기수 × 1.25%)

③ 3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연금액 증액

- (최소가입기간) 사무직 2년, 현장직 17년

- (지급개시연령 : 완전연금수령 기여금 분기수 충족 시)

: '11년 이후 점진적 2년씩 증가, 가입자 출생연도와 직무에 따라 차이

사무직 공무원		현장직 공무원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1952년	60세 9개월	1957년	55세 9개월
1953년	61세 2개월	1958년	56세 2개월
1954년	61세 7개월	1959년	56세 7개월
1955년~	62세	1960년~	57세

18) [www.retraitesdeletat.gouv.fr](http://www.retraitesdeletat.gouv.fr)

- (지급개시연령 : 완전연금수령 기여금 분기수 미충족 시)<sup>19)</sup>

: 사무직 공무원은 65세였으나, '10년 지급개시연령을 67세로 조정

사무직 공무원		현장직 공무원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1952년	65세 9개월	1957년	60세 9개월
1953년	66세 2개월	1958년	61세 2개월
1954년	66세 7개월	1959년	61세 7개월
1955년~	67세	1960년~	62세

### 유족연금

구 분	배 우 자	자 녀
요 건	혼인기간 공무원 퇴직 전 2년 이상, 수급자 사망 전 4년 이상, 혼인으로 인한 자녀가 있는 배우자	직무불능으로 인한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 자녀가 장애상태인 경우 평생 지급
지급액	퇴직연금의 50%	퇴직연금의 10%

### 장해연금

직무상 장애	일반장해
장해정도 60% 이상 시 최종 6개월 보수의 50% 이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일반장애 30% 직무수행 불가능한 일반장애 50%
타인의 상시 간호 필요시 간호비 지급	

## ■ 부가연금 (RAFP: Régime additionnel de la fonction publique)

**도입시기** '03년 신설된 제도로 의무가입이며, '05년 부터 시행

**가입대상** 국가·지방공무원, 군인, 판사, 공공병원 근로자  
※ 가입자 약 450만 명 (국가공무원 44%, 지방공무원 32%, 공공병원 20%, 기타 4%, '18년 기준)

**보 험 료** 공무원연금제도에 기여하지 않는 모든 수당, 보너스, 기타 보수 (총 급여의 20%로 제한)의 5%씩을 정부와 가입자가 각각 부담  
※ 43년 보험료 납입·67세 퇴직·15년 수급 가정 시, 소득대체율 6%

19) 노대명(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7p.

**관 리 주 체** 부가연금공단에서 포인트 관리, 이사회에서 매년 포인트 가치 결정

**부가연금급여** 포인트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포인트 개수는 연간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당해 연도 포인트 구매가치로 나누어 산출, 수급개시시점에 누적포인트가 5,125 미만일 경우 일시금, 이상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

- (부가연금액) 포인트 개수 × 포인트 서비스가치 × 포인트 가산계수

- (부가일시금) 포인트 개수 × 포인트 서비스가치 × 포인트 가산계수 × 일시금화계수

퇴직연령(세)	~ 62	63	64	65	66	67	68 ...	75이상
포인트가산계수	1.00	1.04	1.08	1.12	1.17	1.22	1.28	1.81
일시금화계수	24.62	23.92	23.22	22.51	21.80	21.08	20.36	15.24
연도별 포인트 가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포인트 구매가치(€)	1.1967	1.2003	1.2123	1.2317	1.2452	1.2502	1.2740	
포인트 서비스가치(€)	0.04474	0.04487	0.04532	0.04605	0.04656	0.04675	0.04764	

#### <산정예시>

- (부 가 연 금) 2018년 부가연금 포인트 7,000인 67세 퇴직자 :

$$7,000 \times 0.04532 \text{ (2018년)} \times 1.22 \text{ (67세)} = \text{연 €}387.03$$

- (부가일시금) 2018년 부가연금 포인트 4,500인 62세 퇴직자 :

$$4,500 \times 0.04532 \times 1.00 \text{ (62세 이하)} \times 24.62 \text{ (일시금화계수)} = \text{€}5,021$$

## ■ 주요 특징

- 국가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금을 설치하여 특정 공공기관 등이 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운용주체가 되어 직접 관리
- 부과방식 체제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수입 외에는 전액 국가예산에서 부담, 수입과 지출이 모두 매년 의회에 의해 제정되고 집행되는 재정법률에 포함
- 국가가 직접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연금의 지급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국가의 부담이 매우 크고 타 연금제도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정년, 기여금 납입기간,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이 공무원 직종(사무직·현장직)에 따라 상이함

## 주요 연금개혁 및 동향

### ■ 그간의 연금개혁 경과

- 프랑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의무기업연금으로 인해 급여 적정성이 좋은 제도이나,
- 저출산, 고령화 문제 뿐 아니라 제도의 복잡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저하 등으로 1990년대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단행
- 이후에도 연금개혁은 프랑스의 주요 정책과제로 계속 이슈화되었으며,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임

### ■ 최근 동향

- 2017. 09. 연금개혁위원회 조직
- 2018. 11. 연금개혁의 원칙과 개요 공개
- 2019. 07. 연금고등관이 총리에게 보고서 제출
- 2019. 09.~12. 노동조합 및 시민대상 토론회 실시
- 2019. 12. 대표노조와 고용주 단체 협의 후 총리 개혁안 발표
- 2020. 01.~02. 최종안 제출 및 프랑스 하원 통과

- 2020년 하원을 통과한 연금개혁안 시행 잠정 보류 상태
  -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총파업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진행여부가 유동적인 상황

### ■ 참고사항

- 공적연금 개혁안 목표 : 단일화 · 공정 · 투명 ·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
- 개혁안 요지 및 주요내용

- 42개로 분절화된 제도들은 동일한 규율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개혁
-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는 인구및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 일반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약 28%로 계획하며, 보험료로 포인트를 획득
  - \*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일정 보너스 포인트 추가



- 연금은 SSC(social security ceiling)의 3배까지 누적 가능
  - \* 2021년 현재 SSC (보험료 상한)는 월€3,428원
- 최저 퇴직연령 (62세), 유족연금, 최저연금은 현행 유지
- 양육, 출산, 실업 등의 크레딧 부여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포인트로 받게 되며, 장기가입, 위험 직종, 장애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
- 본 개혁은 점진적 이행을 가지며, 개혁 시작 당시 57세 이상인 자는 새로운 제도에 불포함
- 포인트 시스템<sup>20)</sup> 채택
  - 42개로 나뉘어진 연기금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제도로 통합하는 수단이자, 형평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 프랑스의 포인트 방식 도입방안 >

- ◆ 매년 재산정되는 포인트의 연금가치에 기대여명계수와 경제상황 등을 반영
  - 포인트 연동은 임금성장률에 맞춰 조정하여 고용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
  - 인구학적 위험을 감안하여 연금계산 시 기대여명 반영
    - 코호트별 및 퇴직 시점에 따라서도 포인트 연금가치점수가 다르게 설계
  - 연금수급기간 동안 연금 연동이 관대할수록 연금 최초 산정 시 소득의 재평가는 낮게 산정

- 시사점<sup>21)</sup>
  -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도 각자 가입한 연금과 지위에 따라 다른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오랜 기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1유로는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주장
  - 이 문제 해결 위해 다양한 예외를 만들어 왔던 수많은 연금체계의 통합개편이 불가피
  - 다만, 현재 제도 하에서 보험료 징수와 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약 35개 조직의 통합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의 감소가 예측되어
  - 연금 통합 법안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20) 유호선(2021), 「프랑스 연금개혁동향 - 포인트 시스템 도입안을 중심으로」, 연금포럼 겨울호(Vol.84), 국민연금연구원.

21) 노대명(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참고자료> 프랑스 일반연금제도<sup>22)</sup>

### 1. 1층 일반연금제도

- 사회보험료를 주요재원으로 운영
  - Régime général 보험료율 (2021년 기준)
    - €3,428 이하 보험료율 15.45% (고용주 8.55%, 근로자 6.9%)
    - €3,428 이상 보험료율 17.75% (고용주 10.45%, 근로자 7.3%)
- 급여는 확정급여 (DB) 방식이며, 최소 기여기간은 3개월,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은 생애 근로기간 중 소득수준이 높았던 25년 동안의 급여 평균
- 군복무, 실업, 육아휴가, 병가 등 다양한 사유 발생 시 높은 수준의 크레딧 제공
  - 가입기간 증가: 자녀당 8분기+, 출산휴가 및 입양: 4분기+, 출산휴가 및 입양 후 4년간 육아: 4분기+
- 완전퇴직연금(지급률 50%)
  - 41년 이상 가입하거나, 법정 최소 수급연령(60~62세)에 5세를 더한 연령(65~67세) 도달
  - 완전퇴직연금 급여산식 = 기본연봉\* × 지급률(37.5~50%) × 총가입기간 / 172분기\*\*
    - \* 전체 소득기간 중 소득이 가장 많았던 25년 기간의 연평균 소득
    - \*\* 출생연도별 분기 다름 (1943~73년, 150~172분기)
- 조기퇴직연금
  - 장애를 입었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입자 등에 대해 2년 일찍 연금 수급 가능 (60세)
- 감액연금
  - 완전퇴직연금 수급조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연금을 수급받고자 하는 경우
    - (50% - 미달분기 × 감액률\*) × 기본연봉 × 가입기간 / 최대가입기간
    - \* 1950년~53년 이후 출생자: 1.625%/분기~1.25% 분기
- 증액연금
  - 완전퇴직연금 수급조건에 필요한 최대가입기간 채운 가입자가 법정 최소 수급연령 도달 후 근로 활동 시 2009년 1월 이후 추가 근로기간에 대해 분기당 1.25% 지급률 추가
    - \* 그 밖에 출산, 입양, 양육에 따라 가입기간 및 연금액 추가지급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19), 「주요국의 교직원 연금제도」

- 연기연금

- 완전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완전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미충족 시 퇴직을 연기함으로써 연금가입기간 가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 근로기간에 대해 분기당 총가입기간의 2.5%를 가산

- 유족연금 (퇴직연금의 54%)

Reversion Pension :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나 이전 배우자를 위한 제도

- 민법에서 정한 일정 소득(최저생계비) 이하를 받는 배우자가 최소 55세 도래 시 지급
  - \* 소득조사 통해 지급, 유족 및 동거인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를 넘는 사람은 수급자격 없음
- 급여액은 사망한 수급자 연금의 54%가 한도
- 사망한 수급자의 중혼으로 유족연금수급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유족에게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지급하며, 3명 이상일 경우 연금의 10% 증액
- Widowhood Allowance: Reversion Pension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실업수당으로 유족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급하는 임시급여
- 수급조건 : 배우자가 55세이하, 분기별 소득 조건 있으며, 최장 2년간 지급가능

## 2. 2층 퇴직연금 제도 (ARRCO : 근로자, AGIRC : 관리자 이상 담당)

- 추가적인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의무직역연금으로 부과방식, 근로소득 있으면 의무적 가입
- 기업연금 수급연령은 65세, 최소 기여기간 없으며 포인트 시스템으로 운영
- 가입자 기업연금 (ARRCO : 근로자-AGIRC : 관리자 이상 담당) 2019년 1월부터 통합·관리
- 보험료율 : 사회보장한도 금액을 기준
  - 2021년 기준 €3,428 이하 보험료율 7.87% (고용주 4.72% 근로자 3.15%)
  - €3,428~27,424 보험료율 21.59% (고용주 12.59% 근로자 8.64%)
- 퇴직연금액 : 납입한 보험료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계산, 퇴직 시 포인트 가치에 따라 달라짐
  - 총연금액 = 총 포인트 × 포인트 단위당 가치 (2019.11.기준 €1.2714)
  - 전체 가입기간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계산
- 감액·증액 : 10년 이전부터 조기신청 감액을 적용하여 수급가능
  - 수급 연기 시 증액 (2년 연기 10%, 3년 연기 20%, 4년 연기 30% 증액)
  - 부양자녀 18세 이하 자녀(고등교육종업자 21세)당 연금 5% 가산, 3명 이상시 10% 가산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 최종 연금액의 60%를 유족연령 55세 이상일 경우 지급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상관없이 지급
- 고아연금 : 부모를 모두 잃은 21세 미만자, 양쪽 부모 각각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 지급

<프랑스의 일반연금과 특별연금 비교<sup>23)</sup>>

구 분	일반연금 +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및 특별연금
대 상	일반근로자 대상	공무원, 국영철도 종사자, 광부 등
보험료율	근로자 10.05%, 사용자 13.27% * 월 €3,428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부담률 적용	본인부담 11.1% * 국가는 지급 시에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연금 산정기준	소득이 가장 높은 25년의 평균임금	퇴직 전 6개월 평균 임금
완전연금 수급 가입요건	1948년생은 40년 가입 이후 단계별로 조정하여 1973년생 이후 43년 가입	
지급개시연령	62세(최소 가입기간 3개월)	62세 * 단, 노동강도와 피로가 높은 특수직종은 57세에 연금수급 가능
소득대체율	60%(일반연금 50%+퇴직연금 10%)	75%
관리운영	사회보장국 관리하에 노령보험중앙기금, 노령보험지역기금 등 운영기관 다수	공무원연금서비스 이외 직종별 관리기관 다수

23) 성혜영(2020),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연금이슈&동향분석 제64호, 국민연금연구원.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독일





## 독일 (연방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민간부문의 법정연금보험제도와 분리된 단층제도로, 직역별 분리·운영  
(공공근로자는 국민연금과 부가연금 적용)
- 연방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없이 정부예산으로 퇴직급여 지급
- '07년 이후 임용자부터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 주·지방 공무원연금제도 분리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3층 (임의)	개인연금 (Riester, Ruerup 연금)				
2층 (의무)	농민연금 (AdL)	전문직연금	기업연금 (BA)	공공부문 근로자 부가연금 (ZÖD)	공무원연금 (BV)
1층 (의무)			법정연금보험제도 (GRV)		

(적용대상)	농민, 전문직 등	민간근로자	공기업종사자, 비정규직공무원	연방, 주, 지방 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	-----------	-------	-----------------	--------------------------

\* 2011. 7. 1. 이후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으로 직업군인은 공무원연금, 임시군인은 국민연금 적용

## 공무원연금제도(BeamtVG) 개요

### ■ 주요 연혁

- 1873년** 공무원연금 최초 도입, 1949년 연방헌법에 공무원부양원칙 규정 제정
- 1992년** 모수개혁 : 최대 가입기간 (35년 → 40년) 및 연금수급최소연령 연장(62세 → 63세)
- 1998년** 지불준비금제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2001년** 모수조정 개혁 및 Riester연금 (전국민 대상 보충연금) 도입
- 2007년** 공무원연금제도 분리 운영 (연방外 16개 주·지방 정부별로 이관), 신규 임용자부터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  
- (현행법) Beamtenversorgungsgesetz

### ■ 인원 현황 ('19년 기준)<sup>24)</sup>

(단위 : 만 명)

구 분	재직자(A)	연금수급자(B)	부양률(B/A)
정규 공무원	176	139	78%

### ■ 재원 조달

#### 재정방식

- 구제도 : 순수부과방식
- 신제도 : 완전적립방식 ('07년 개혁으로 신규 제도의 이원화, 신규임용자 대상 제도는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  
\* 1998년 : 2000년대 말부터의 퇴직자 급증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 비용부담

- 연금지출은 회계 상 연방정부 인건비 일부로 편성하여 전액 국가예산으로 정부에서 부담  
(신제도 : 소관부서 표준보험료 부담)

#### 재정상황

- '07년 정부부담률이 57%에 이를 정도로 심화되었으나, 지속적 연금개혁 및 공직축소 정책 등으로 장기적 재정안정화 달성 전망

24) [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Rente/alterssicherungsbericht-2020.pdf?jsessionid=8D67A3F713457BD72CA94D50672E291.delivery2-master?\\_\\_blob=publicationFile&v=1](http://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Rente/alterssicherungsbericht-2020.pdf?jsessionid=8D67A3F713457BD72CA94D50672E291.delivery2-master?__blob=publicationFile&v=1)

## ■ 수급 요건

**퇴직연금** 최소 재직기간(5년) 충족 및 퇴직 시 지급개시연령 도달

- (지급개시연령) '12년 65세 → '29년 67세 \* 경찰 및 전문 소방 공무원 '09년~62세

**장해연금**公務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급여지급액

**퇴직연금** 기준보수(최종보수) 기준 재직기간 1년당 1.79375% ('01년 개정)

- (급여산정기준) 최종보수(최종 2년 기본급 + 가족수당 등 일부수당 포함 평균값)

- (연금지급률) 30년 재직시 약 53.8% ('10년 이후), 최대 71.75% (40년) ('92년 시행)

\* 1년당 연금지급률 1.875%('03년)  $\xrightarrow{\text{매년 0.54\%씩 인하}}$  1.79375%('10년)

<연도별 연금지급률과 재직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 비교>

구 분		'02년 까지	'05년	'10년 이후
지급률(per year)		1.875%	1.8445%	1.79375%
예 시	20년 재직	37.5%	36.89%	35.88%
	30년 재직	56.25%	55.34%	53.81%
	40년 재직(최대)	75%	73.78%	71.75%

- (자발적·근무능력 미달 등으로 조기퇴직 시) 1년당 3.6% 감액(최대 4년, 14.4%)

**장해연금** 연금급여의 최소 66.7% ~ 최대 75%

**유족연금** 배우자의 경우 퇴직연금의 55%('01년 개정), 자녀의 경우 12%  
(배우자 유족 없을 경우 20%)

**연금연동방식** 보수인상률(사회보험제도의 자동조절장치 미적용)

## ■ 관리운영기관

**제도관리 및 정책결정** 연방 내무부 연금관리국

**집행업무** 공무원이 퇴직한 기관에서 연금지급업무 수행

## 주요 개혁 및 동향

### ■ 주요 개혁

#### 1998년 위험준비금적립제도 도입

- (배경) 기대여명 증가 및 '10년대 말 퇴직자 급증을 대비한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차원
-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부담에 기초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 \* 한시적 성격('99~'17년)의 완충기금 ('01년 개혁에 따른 공무원 이종부담 피하기 위해 '10년까지 유보 후 '11년 재개)

#### 2001년 공무원연금 모수개혁 및 Riester연금 도입

- (배경) 민간부문제도 개혁(소득 대체율 하향)에 따른 형평성 유지차원
- 공무원연금: 지급률 하향(1.875% → 1.79375%)을 통해 민·관 형평성 유지
  - \* 40년 가입 기준 소득 대체율 75% → 71.75%
- Riester연금: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완적 수단의 제도로, 자발적 저축계정 가입(연소득 4%이상 납입)시 주정부에서 세제혜택(최대 2,100유로) + 보조금 지급(60세 or 공적연금 수급시점 개시)

#### 2007년 완전적립제도로의 이행 및 공무원연금제도 분리

- (배경) 고령화에 따른 장기 정부 재정부담 완화 차원
- 소관부처 표준보험료 부담의 '공무원연금기금' 설치 후 적립방식 도입
- '06년 연방정부국가제도 개혁으로 연방 외 16개 주·지방 제도 분리 운영

#### <재정안정화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의 차이>

구 분	재정안정화 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역 할	위험준비금 (완충기금)	책임준비금
조성기한	한시적 (1999년~2017년)	영속적
재원조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 ~ '02년, '11 ~ '17년 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연금수급자 연금인상률 0.2% 삭감액</li> <li>• '03 ~ '10년까지 점진적연금지급률 하향(75% → 71.75%)에 따른 조성금액의 1/2</li> </ul>	정부일반예산에 의한 표준보험료 부담

## ■ 개혁 동향 (정책적 시사점)

- 1990년대부터 재정안정화 위해 지속적으로 모수·기금개혁 단행
  - 모수개혁('01, '07년), 보완책으로 Riester연금('01년), 미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 및 정부부담에 따른 각종 기금계획('98년, '07년) 등
- 그 외 보수인상 억제 및 신규채용 축소 등 공공부문 전반 개혁 병행
- 2007년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은 없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특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해 연금지급을 위한 재정을 장기적으로 확보 및 충당 예정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 네덜란드



## 네덜란드 (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다층연금 : 1층 기초연금, 2층 공무원연금의 직역연금, 3층 개인연금
- 직역연금은 노사 합의에 의하여 운영되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3층	개인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 상품, 세제혜택)		
2층(소득비례)	-	개별 기업연금 (OPF)	공무원연금 (ABP)
1층(기초보장)	기초연금 (AOW)		
(적용대상)	자영업자	민간근로자	공무원

###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 ■ 주요 연혁

- 1836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 1993년** 공무원연금법 사법(私法) 체제로 전환 및 관리운영 독립법인(ABP Foundation) 설립
- 2008년** 자회사(APG) 설립 및 기금운용 등 외부위탁체제 구축

## ■ 적용 대상자

- 연방공무원(군인 제외) 및 공공기관 직원 \* 공무원 퇴직 후 최대 3년간 ABP 임의가입 가능
- 인원 현황<sup>25)</sup> ('20년 말 기준) (단위: 명)

재직자(A)	연금수급자(B)*	부양률(B/A)
1,178,215	943,318	80.1%

\* 연금수급 미도래자(93만 241명) 추가 시 제도가입자는 약 305만명

## ■ 재원조달

**재정방식** 완전적립방식

**소득상한** 최대 €114,866 소득까지만 적립가능 (전일제 근무, 2022년 기준)<sup>26)</sup>

\* 시간제근무인 경우 소득상한이 더 낮아짐

- 소득상한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추가연금제도 임의가입 가능

**비용부담** 매년 산정한 필요보험료율(수지균형보험료율)을 노정합의로 부담하되,  
공무원:정부 = 3:7 수준으로 결정

- 운용수익저하,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보험료율 증가 추세

(단위: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공무원	5.6	6.3	6.9	7.5	7.5	7.9	7.9
정 부	13.2	14.8	16.0	17.4	17.4	18.0	18.0
계	18.8	21.1	22.9	24.9	24.9	25.9	25.9

**재정현황** '08년 금융위기로 적립률이 90%를 하회하였으나, '09년 100% 이상으로 회복한 후, 90% 이상 유지<sup>27)</sup>

(단위: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기금수익률	2.7	9.5	7.6	-2.3	16.8	6.6	11.1
기금적립률	97.2	96.7	104.4	97.1	97.8	93.5	110.2

25) [www.jaarverslag.abp.nl](http://www.jaarverslag.abp.nl)

26) [www.abp.nl/pensioen-bij-abp/pensioenpremie](http://www.abp.nl/pensioen-bij-abp/pensioenpremie)

27) ABP(2020), Annual Report 2019.

<참고 : 네덜란드 기초연금(AOW, 2021년 기준)>

- 적용대상 : 1년 이상 네덜란드에 거주한 국민
- 재정조달 : 별도 사회보장세를 통한 기여방식(소득상한 연 €35,129)  
- 세율 18% : 노령연금분 17.9%, 유족연금분 0.1%<sup>28)</sup>
- 완전연금 (50년 기준) : (독신) 월 €1,316.77, (부부) 각각 월 €901.07<sup>29)</sup>
- 개시연령 : 67세 (65세에서 67세 단계적 인상 중, 최대 가입기간 50년)

## ■ 수급요건

- 퇴직연금** 최소 재직기간 요건은 없으나, 월 연금액이 최소 €2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초연금(AOW)의 지급개시연령<sup>30)</sup>에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희망에 따라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 선택 가능

<기초연금(AOW) 지급개시연령>

생년월일	'52. 04. 01. ~ '52. 12. 31.	'53. 01. 01. ~ '53. 08. 31.	'53. 09. 01. ~ '54. 08. 31.	'54. 09. 01. ~ '55. 08. 31.	'55. 09. 01. ~ '56. 05. 31.	'56. 06. 01. ~ '57. 02. 28.	'57. 03. 01. ~ '57. 12. 31.	'57. 12. 31. ~ '60. 12. 31.	'61. 01. 01. ~
개시연도	'18	'19	'20	'21	'22	'23	'24	'25~'27	'28 ~
개시연령	66세	66세 4개월	66세 4개월	66세 4개월	66세 7개월	66세 10개월	67세	67세	기대수명 연동

\* 2019년 법 개정 시 기존 2021년까지 67세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2024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이후 매년 기대수명에 연계되어 확정되며 2022년 현재 2027년까지는 67세로 확정<sup>31)</sup>

28) [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prive/werk\\_en\\_inkomen/sociale\\_verzekeringen/premies\\_volks](http://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prive/werk_en_inkomen/sociale_verzekeringen/premies_volks)

29) [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http://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rates/aow-pension-rates)

30) [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prive/werk\\_en\\_inkomen/pensioen\\_en\\_andere\\_uitkeringen/wanneer](http://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prive/werk_en_inkomen/pensioen_en_andere_uitkeringen/wanneer)

31) [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age/your-aow-pension-age](http://www.svb.nl/en/aow-pension/aow-pension-age/your-aow-pension-age)

**유족연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 (배우자)

구 분	수급요건
재직기간	최소 재직기간 요건 없음
대상자	공무원과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등록된 파트너)인 배우자 동거 중인 배우자
혼인기간	최소 혼인기간 요건 없음

- (자녀)

구 분	수급요건
재직기간	최소 재직기간 요건 없음
대상자	25세 미만의 친생자녀, 또는 친생자녀 아니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녀 (친생부모로부터 생계 지원받지 않아야 함)

**장해연금**

구 분	수급요건
재직기간	최소 재직기간 요건 없음
대상자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 법적 배우자(파트너)와 이혼하는 경우 퇴직연금 분할 가능

구 분	수급요건
대상자	법률혼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등록된 사람 (혼전계약 또는 이혼계약 시 연금을 분할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이혼 후 2년 이내
종결	이혼 배우자와 재결합 시

## ■ 급여지급액

### 퇴직연금

구 분	급여액
AOW	(독신) 월 €1,316.77 × 네덜란드 거주기간 / 50년 (부부) 월 € 901.07 × 네덜란드 거주기간 / 50년
ABP	연간 소득 €44,177.59 이하 : (연간 소득 - €11,850) × 1.701% × 재직기간 연간 소득 €44,177.59 초과 : (연간 소득 - €14,850) × 1.875% × 재직기간

### 유족연금

구 분	급여액
배우자	퇴직연금의 70%
자녀	(돌보는 사람 있는 경우) 1인당 퇴직연금의 14% (돌보는 사람 없는 경우) 1인당 퇴직연금의 28% 단, 자녀가 많더라도 최대 총 70% 까지만 지급

### 장해연금

근로능력상실률	35 ~ 45%	45 ~ 55%	55 ~ 65%	65 ~ 80%	80% 이상
공무상	퇴직연금의 40%	퇴직연금의 50%	퇴직연금의 60%	퇴직연금의 80%	퇴직연금의 100%
비공무상	퇴직연금의 20%	퇴직연금의 25%	퇴직연금의 30%	퇴직연금의 40%	퇴직연금의 50%

### 분할연금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연금액이 법정한도(월 €2) 미만인 경우 연금분할 없이 일시금 지급하고, 연간 €503.24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연금연동방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적용이 원칙이나, 기금적립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조정하지 않으며, 2010년 0.28% 인상한 이후 조건 미달로 2022년까지 연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부분조정) 전년도 10월 말 기준 정책적립률\*이 110% 이상인 경우
- (전부조정) 전년도 10월 말 기준 정책적립률이 123% 이상인 경우
- (연금감액) 5년간 정책적립률이 최소필요자본보다 낮은 경우

\* 정책적립률 = 12개월 평균 자금조달 비율 (2022년 2월 말 기준 105%)

## ■ 관리운영기관

**ABP Foundation** 공무원연금공단 (ABP Foundation, 독립법인으로 '93년 설립)

- 최고위원회(Board of Governors), 10개 상설위원회(5개)와 자문위원회(5개)로 구성 (기금투자정책 수립 및 자회사 감독 수행)

## 주요 개혁 및 동향

### ■ 주요 개혁

**1993년** 공무원연금 사법화 개혁

- 정부와 공무원노조 합의로 공무원연금 사법화에 대한 법률 제정
- 新법률 제정 이후 연금수급권은 노·사 합의에 의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제도 개선 역시 노사간 합의 사항
- '96. 1. 1.부터 공무원연금공단(ABP Foundation) 감독 · 관리

**장해연금** 기금관리방식 개혁

- 자회사 설립 및 기금운용 전면 아웃소싱 실시
- 모든 서비스 실무 자회사(APG Group N.V) 설립 후 아웃소싱 계약
- \* APG는 투자, 기금제도 및 마케팅 등 기금운영 전반적인 사항 포괄 수행

## ■ 정책적 시사점

- 네덜란드는 기업연금제도가 발달한 국가로 관련법 개정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Social Partnership에 의해 결정  
→ '82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 원리가 작동

###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개요>

- '82년 네덜란드 사용자협회와 노조연맹이 체결한 협약으로, 불황기에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집약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등 노사가 함께 국민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실현
- 
- 완전적립방식 하에 기금의 신축적 운용 및 노사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 '93년 공무원연금 사법화 개혁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음
    - 공적연금 성격보다는 기업연금(민간 퇴직금)에 해당
    - 정부의 책임성 강화(개인:정부 = 3:7의 비용부담 원칙)를 통해 안정적 연금제도 유지 도모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연방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일반법정연금(1층), 부가연금(2층), 사적연금(3층)으로 구성
- 연방공무원 대상 공무원연금제도는 민간근로자의 일반법정연금제도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 '04년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 및 일반법정연금법 제정(개인연금계좌 도입)으로 직역별 공적연금 수급구조 일원화 (관리 및 운영은 별도)
- '05년 이후 65-45-80 원칙 적용 (65세 지급, 45년 재직, 80% 소득대체율)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3층(사적연금)	개인연금		
2층(기업연금)	연금기금(PK)	기업연금(BPG)	
1층(기초연금)	일반법정연금(APG)		

(적용대상)	연방공무원	주/지방공무원	민간근로자	농민	자영업자
--------	-------	---------	-------	----	------

\* 2005년 이후 공무원 포함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농민, 자영업자 등 모두 일반법정연금법(APG) 적용



## 연방공무원연금제도 개요

### ■ 주요 연혁

- 1750년** 최초 도입, 1902년 공무원연금제도 법제화
- 1997년**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최종소득 → 평균소득(최종 18년)으로 변경 ('03년 이후)
- 2000년**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60세 → 61.5세), 조기퇴직연금제도 도입
- 2003년** 기준보수 산출기간(18년 → 40년 평균) 확대('04~'28년), 지급개시연령(♂61.5세 → 65세) 및 최대가입기간(40 → 45년) 상향조정
- 2004년**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 및 일반법정연금법 제정 (65-45-80원칙 적용)

### ■ 인원현황 ('20년 연방공무원 기준)

(단위 : 만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직자	17.94	17.37	16.81	16.27	15.74	15.24
연금수급자	30.34	30.66	30.89	31.14	31.35	31.48

\*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오스트리아 연방 재무부 2020

### ■ 제도 내용 (APG)

**급여산정기준** 전 기간 평균소득<sup>32)</sup>

**연금지급률** 1년당 연금지급률 1.78%

**소득대체율** 최대 80% (45년 재직 시 전 기간 평균소득 기준)

\* 급여지급결정: 매년 크레딧 (보수 × 1.7778% 연금지급률)을 가상개인계좌에 명목적립\* 후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된 크레딧 합계액을 첫 연금액으로 제공 [DB제도에 임금상승률 (크레딧)을 기초로 한 명목확정급여 (NDB 방식)]

\* 공무원사회보험공단이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1.78%를 곱한 후 개인연금계좌에 입금 표기, 표기 금액은 매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재평가된 금액으로 보험료 기여기간 동안 가치상실 방지 (합계금액 = 65세 도달 시 수령금액)

**지급개시연령** ♂61.5세 → 65세<sup>33)</sup> (최소 7년 기여기간)

\* '65 (지급개시연령) - 45 (최대재직기간) - 80 (최대소득대체율)' 원칙 적용

32) 1955년 이전 출생자는 30년 평균소득('18년 기준) → 40년 평균소득(~'28년)으로 점진적 연장 중

33) 2019년 기준 남 65세, 여 60세로, 여성은 '24~'33년 까지 연도마다 반년씩 상향하여 '34년 남녀 모두 65세 도달 예정

**조기 및 연기연금** 연 4.2%, 최대 12.6%(3년) 감액 및 증액 적용

- 조기연금: 근속기간 42년 충족 및 62세 도달 시 연 4.2% 감액 적용
- 연기연금: 지급개시연령(65세) 이후 퇴직 시 연 4.2% 증액 적용

**연금연동방식** 공무원의 급여산정 기준소득은 임금상승률 반영,  
연금수급자 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

※ 두 변수는 매년 연방노동사회부 산하 연금위원회가 인구구성비 변화, 연금지출 등을 감안하여 조정

**지급정지** 퇴직 후에도 공무원직무수행규율에 관한 법률 적용(공무원 신분유지), 연금수급 기간 내 법원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 받을 시 연금수급 중단<sup>34)</sup>

## ■ 재원 조달

**재정방식** 부과방식 (PAYG)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조달, 독립된 연금기금 부재)

**비용부담** 재직 공무원, 정부 및 연금수급자 부담

1) 공무원: 기준보수의 10.25%, 정부: 12.55% 기여금 납부 (신제도 기준)

- 1955년 기준 이전 출생자 12.55%, 이후 출생자 10.25 ~ 12.40% (출생연도별)<sup>35)</sup>

	부담률(신제도 기준)	
	피보험자	사용자 또는 연방정부
연방공무원(BP)	10.25%	12.55%
근로자(ASVG)	10.25%	12.55%
자영업자(GSVG)	18.5%	7.8%
자유업자(FSVG)	20%	2.8%
농민(BSVG)	17%	8.3%

34) 이각희(2007), 「오스트리아 신연금법 해설(Pinggera-Poeltner-Stefanits)」.

35) 상대적으로 연금급여수준이 높은 1955년 이전 출생 공무원이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 유지

## 2) 연금수급자 : 퇴직시점에 따라 연금액의 1.13 ~ 3.3% 재정안정화기여금 납부

- 2003년 연금개혁(최종소득 → 18년 평균소득)후 재직자 연금액이 낮아져 형평성 유지 목적

퇴직시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2018년	2019년
기여율(%)	3.30	3.04	2.92	2.79	...	1.26	1.13

\* 2020년도 이후 퇴직자 (1959. 12. 1. 이후 출생) 는 기여금 납부의무 없음 (오스트리아 연방 내무부, 2021)

### 재정상황 연금부문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

- GDP대비 퇴직연금 지출이 10.9%('19년) → 13.22%('35년)으로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구분	2019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연금지출 / GDP	13.3%	15.1%	15.1%	14.7%	14.6%	14.3%
- 퇴직연금	10.9%	12.8%	13.0%	12.8%	12.9%	12.8%

BMF, BMSGPK, EC, 2021

## ■ 관리운영기관

**제도 관리 및 정책결정** 재무부 산하 연방 연금청 (정부 직접 관리·운영)

**집행업무** 공무원사회보험공단<sup>36)</sup>에서 연금지급 등 실무업무 수행

\* 주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각 관할부서에서 관리

## ■ 주요 특징

**재정안정화기여금** 재직기간별 공무원 형평성 유지 위해 베이비부머세대의 연금수급자로 부터 퇴직시기별로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

\* '03년 이전 퇴직자 3.3% ~ '19년 퇴직자 1.13%

### 공적연금 조화

'04년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 및 일반법정연금법 제정으로 직역별 분화되어 관리 및 운영하던 사회보험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험료율, 개인연금계좌 도입 등으로 수급구조 일원화

36) 연방정부 공무원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은 공무원사회보험공단, 연금은 연방연금청에서 일괄 관리·운영하였으나, 2007년 6월에 연금지급 업무가 재무부 연금관리국에서 공무원사회보험공단에 이양됨으로써 연금지급 및 서비스 업무도 공무원사회보험관리공단에서 관장(이각희(2017), 「공무원연금제도론」, 공무원연금공단.)

## 주요 개혁 및 동향

### ■ 주요 개혁

#### 2003년 연금수급자 대상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PG)

- 연금산정기간 연장(최종 18년 평균 → '28년 40년),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1.5세 → 65세), 최대가입기간 연장(40년 → 45년), 조기연금 감액을 강화(1년당 3% → 3.36%) 등
- 재직기간별 공무원 형평성 훼손 방지 위해 연금수급자에게 퇴직시기별 차등비율로 재정안정화 기여금<sup>37)</sup> 부과

#### 2004년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 및 일반법정연금법(개인연금계좌<sup>38)</sup> 도입) 제정

- (배 경) 공적연금제도 조화 관련 법률<sup>39)</sup> 제정 등 제도 간 형평성 제고
- (핵 심) 모든 공적연금제도 가입자 개인계좌 도입설치, 개인 연금이력 기록\*  
\*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보수) 및 누적 적립된 부분 연금액<sup>40)</sup>
- (가입대상) 2005년 이전·이후 가입자 (신·구제도 적용)

출생시기(05. 1. 1.기준)		가입기간	적용제도
1955년 이전 출생 (50세 이상~)	-	-	구제도 (PG)
1955년 ~ 1975년 출생 (30세 이상 ~ 50세 미만)	and	'05. 1. 1. 기준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구 & 신제도 (경과규정)
1975년 이후 출생 (~ 30세 미만)	or	'05. 1. 1. 이후 임용 ( '05. 1. 1. 기준 가입기간 1개월 미만)	신제도 (APG)

- (65-45-80 원칙 적용) 45년 최대 재직 시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소득대체율 80%를 65세부터 지급하는 일반법정연금과 일치된 방식을 공무원에 적용
- (개인연금계좌제도 시행) 연금액 인하에 대한 보완 및 연금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매년 크레딧 (보수 × 1.7778% 연금지급률)의 개인가상계좌 적립 및 가상 증식 후 크레딧 합계액을 첫 연금으로 제공하는 방식

37) Pensionssicherungsbeitrag(Pension Security Contribution)

38) 일정시점 기준 가입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인정된 연금액. 예를 들어, '13년 말 가입기간 10년인 가입자의 부분 연금액은 과거 10년 동안 매년 평균임금상승률로 재평가 되어 누적된 연금액, 이 과정이 퇴직 직전년도까지 반복되어 최종 연금액 산출

39)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Pensions Harmonisierungsgesetz, PHG) 2004.

40) 경과규정(Parallelrechnung)에 따라 신·구제도 각각 적용

## ■ 개혁 동향 (정책적 시사점)

- 2000년 전후하여 수차례 ('97년, '00년, '03년, '05년) 모수개혁 추진
- 일반법정-공무원연금 간 연금형평성을 위해 수급구조는 일원화하되, 관리 및 운영 별도
- 이미 높은 수준의 보험료 추가 인상 대신 근로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적정 연금액 확보 노력
- 2003 ~ 2005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의 투명성·편의성 강화 (개인연금계좌제도 도입)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 스웨덴



## 스웨덴 (중앙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직역연금, 사적연금의 3층 구조로 구성
  - 공적연금은 보증연금, 소득연금 + 프리미엄연금(국민연금)으로 나뉘고,
  - 직역연금은 4가지 직군 (중앙/지방공무원, 사무직/노동직)의 퇴직연금에 해당
- (0층) 보증연금 : 연금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해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 (1층) 국민연금 :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연금 및 프리미엄연금
- (2층) 직역연금 : 중앙·지방공무원 및 생산직·사무직 민간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의해 설계된 연금
- (3층) 사적연금 : 개인이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은행, 보험사, 펀드 운영사 등의 상품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 공적연금 제도 개요

### ■ 주요 연혁 및 관련 법령

- 1913년** 국민연금법 제정, 세계 최초 전체 인구 대상의 일반 연금보험 도입  
\* 이전에는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 직군만 연금 제도 운영
- 19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후 중앙기관 국민연금국 설립
- 1936년** 연금개혁 실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 1946년** 연금개혁 실시 (보충연금 폐지, 기초연금 도입)
- 1959년** 소득비례연금제도 도입
- 1969년** 특별보충연금제도 도입
- 1994년** 1994년 연금개혁 실시 (소득연계연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 1998년** 연금관련법 개정 (기초연금 폐지, 정부 부담 보증연금 도입)
- 2001년**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이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관련 법규 개정
- 2010년** 부가연금관리청이 폐지되고, 스웨덴 연금청을 신설하여 공적연금 관련 업무 관리

### ■ 적용 대상자

**가입대상**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모든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및 거주자

**인원 현황** ('20년 기준)

(단위: 명)

정부보증연금(수급자, A)		700,004
(소득연금 + 프리미엄연금)	가입자	6,168,986
	수급자(B)	1,583,741
공적연금 수급자 수(A+B)		2,283,745

## ■ 재원조달

**재정방식** 정부 재정, 국민연금 가입자 기여금, 기금 운용수익으로 구성

- 중앙정부의 일반재정 지출로 보증연금 재원 조달, 가입자 기여금과 기금 운용수익으로 소득비례연금 재원 조달

## ■ 비용부담

- (보증연금) 중앙정부 일반재정 100% 부담
- (국민연금) 가입자 월 소득의 18.5%, 가입자와 고용주 공동 부담(각 9.25%)
  - 기여금 18.5%는 소득연금(월 소득 16%), 프리미엄 연금(2.5%) 재원 구성
- (직역연금) 고용주 전액 부담
  - 기준소득(532,500/12월=44,375SEK, 2022년) 이하 / 초과별 다른 비율 적용  
(‘87년 이전 출생자) 기준소득 이하는 급여의 4.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ex) 월 급여 50,000SEK인 경우 =  $(44,375 \times 4.5\%) + (5,625 \times 30\%) = 3,684\text{SEK}$   
(‘88년 이후 출생자) 기준소득 이하는 급여의 6%, 초과분에 대해서는 31.5%  
\* 고용주로부터의 직역연금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의 4.5%를 저축하여 자체적으로 직역연금 대체비용 마련

## ■ 재정상황

[단위 : 백만 SEK (한화 억 원)]

구 분		2020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2016 ~ 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341,226 (445,400)	3.6%
공적연금 지출규모	보증연금	14,258 (19,029)	0.4%
	국민연금 (소득연금+프리미엄연금)	340,294 (454,156)	4.1%
	합계	354,552 (473,185)	4.0%

\* (자료) 스웨덴 연금청, 2020년 연례보고서 / (환율) 통계청 2020년도 적용 환율

## ■ 수급요건 및 지급액 산정방식

### (1) 보증연금

#### 수급요건

- 국민연금(소득연금+프리미엄연금)이 독신은 기준소득의 3.07배, 기혼은 2.72배 이하인 경우 지급 \*개인의 자산이나 사적연금액은 미고려
- 65세 이상부터 수급 가능 \* 2023년부터 66세 이상으로 연령 상향 예정
- (최대연금 수급요건) 16~64세까지 최소 40년 간 스웨덴 거주한 자
- (최소연금 수급요건) 스웨덴에서 3년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거주자여야 하며, EEA(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또는 스위스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한 경우 해당 연도를 스웨덴 거주 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나, 최소 1년은 다시 스웨덴에 거주 또는 일을 해야 합산 가능
- 보증연금 수급 자격이 부여된 자는 노인 대상의 정부 주거보조금 및 재정지원에 대한 신청 역시 가능

#### 산정방식 및 금액 ('20년 기준)

- 1인당 월지급액은 스웨덴 거주기간, 결혼여부 등을 반영
  - 독신 =  $(2.181 \times \text{기준금액}) \div 12\text{개월}$
  - 기혼 =  $(1.951 \times \text{기준금액}) \div 12\text{개월}$
- 기준금액(Price basic amount)은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기반으로 매년 산정하고, 100 SEK로 반올림 ('20년 기준 47,300 SEK)

구 분	최대 월 연금액 (2020년, 세전 지급액)	연평균 증가율 (2016-2020년)
독 신	8,597 SEK (한화 1,147,356원)	2.3%
기 혼	7,690 SEK (한화 1,026,307원)	2.3%

## 소득연금과 보증연금의 상관관계



- 소득연금이 있는 수급자는 보증연금이 점진적으로 감액되며, 일정 수준 도달 시 보증연금 수급 중단
  - 보증연금 수급불가 기준 (2020년) : 월 소득관련연금이 기혼 연금수급자는 11,153 SEK, 독신 연금수급자는 12,530 SEK 이상
- 스웨덴에 거주하고 이전에 EEA 및 스위스에서 거주 또는 근무한 경우 타 국가에서의 보험 기간도 급여지급액 산정에 반영
- 반면 급여 및 자본금 보유 여부, 스웨덴이나 타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업 연금 및 사적 연금 보험과 같은 기타 혜택은 급여지급액 산정에 미반영

## (2) 국민연금

### 수급요건

- (가입대상)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 (연금개시연령) 61세 도달 후 스스로 수급개시연령을 정할 수 있으며, 62세가 되는 시점부터 수급 가능

\* 2023년부터 63세부터로 연금개시연령 변경

\*\* 스웨덴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타국에서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 부여



- 스웨덴은 퇴직연령이 없으므로\* 연금이 자동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신청을 통해 수급 개시  
\* 고용보호법에 따라 2020년부터 68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고 2023년부터 69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합의하면 그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음
- 연금소득은 급여 외 사업 활동 소득(자영업자), 육아 수당, 실업 수당 및 질병 수당 등 여러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음
- 타 국가의 연금은 스웨덴 소득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프리미엄연금) 국민연금의 일부로써, 보험료의 2.5%를 민간부문의 연금펀드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개인이 선택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됨
- (보충연금) 소득연금 보완차원으로 연금소득이 낮은 경우(월 SEK 9,223~17,000) 보충연금을 지급하며, 65세부터 수급 가능('21년 도입)
- (유족연금) 국민연금의 일부로 아동연금, 유족수당, 조정연금, 과부연금으로 구성되며, 사망한 사람이 스웨덴에서 받는 연금을 기준으로 수급액 산정(스웨덴에서 연금 기반이 낮으면 유족 연금도 낮음)

#### 산정방식 및 금액 ('20년 기준)

- 소득연금액 = (총 기여액+가상이자) /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가상(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계수(퇴직시점 출생 코호트별 잔여수명)로 나누어 산출)
- 연금소득 상한선
  - 1년 동안 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상한선이 있으며, 해당연도 기준소득의 7.5배를 초과하지 못함
  - 2020년 기준 소득 상한선 연501,000 SEK (=기준소득\* 월66,800 SEK × 7.5)
  - \* (기준소득) 연금급여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매년 정부가 소득지수\*\*에 따라 산정
  - \*\* (소득지수) 소득추이와 가격대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해당연도 국민 1인당 소득증감률) 가입자 개인계좌별 적립액 매년 재계산 시, 수급자 연금액 매년 조정 시 사용

: 소득지수 산식

$$I_t = I_{t-1} \cdot \frac{u_{t-1}}{u_{t-2}}$$

$$u_t = \frac{Y_t}{N_t}$$

$t$  해당연도  $I_t$   $t$  연도의 소득지수

$u_t$   $t$  연도의 가입자 평균 소득

$Y_t$   $t$  연도의 연금기여금 공제 후 가입자 총 소득

$N_t$   $t$  연도의 가입자 수

- 프리미엄연금액 = (총기여액 + 시장수익) / 퇴직시점의 연금계수

< 1인당 평균 연금월액 >

구 분	연금월액 (2020년, 세전 지급액)	연평균 증가율 (2016-2020년)
국민연금 (소득연금+프리미엄연금)	17,906 SEK (한화 2,389,681원)	2.3%

### (3) 직역연금

#### 수급요건 (PA16)

- 단체협약을 통해 설계되는 일종의 기업연금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4대 직역연금 존재
  - 중앙정부공무원연금 (PA16)      - 지방정부공무원연금 (KAP-KL)
  - 민간사무직근로자연금 (ITP)      - 민간노동직근로자연금 (SAF-LO)
- 일반적으로 개시연령 65세, 30년 근무 시\* 최대 확정급여형 연금수급
  - \* 30년 미만 근무 시는 근무한 개월 수를 360개월 (30년)으로 나누어 산정
- 수급기간을 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종신 중 선택 가능하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종신으로 수급
- 중앙정부공무원연금 (PA16) 구분
  - (PA16, dep 2) 1987년 또는 이전 출생자 : 65세까지 연금보험료 적립
  - (PA16, dep 1) 1988년 이후 출생자 : 68세까지 연금보험료 적립
  - dep 1는 62세부터, dep 2은 61세부터 수령가능, 미신청 시 71세부터 지급

#### 산정방식 출생연도, 급여 수준에 따라 기준소득 구간별 산정하여 합산

수금액	최종 5년 평균급여(연 환산)가 연금산정 기준소득*의		
출생연도	7.5배 미만 구간	7.5~20배 구간	20~30배 구간
1943	9.5 %	64.85 %	32.40 %
⋮	⋮	⋮	⋮
1953	7.2 %	63.35 %	31.40 %
⋮	⋮	⋮	⋮
1963	3.9 %	61.85 %	30.40 %
⋮	⋮	⋮	⋮
1973년 이후	0.0 %	60.00 %	30.00 %

\* 2021년 SEK 68,200, 2022년 SEK 71,000

## ■ 관리운영기관

- 관 리**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홈페이지 : [www.government.se](http://www.government.se)
- 운 영** 스웨덴 연금청 (pensionsmyndigheten, Swedish Pensions Agency)  
- [www.pensionsmyndigheten.se/](http://www.pensionsmyndigheten.se/) 보증연금, 국민연금 운영
- 운 영** 스웨덴 직역연금청 (Swedish Occupational Pensions Agency)  
- [www.spv.se/](http://www.spv.se/) 직역연금 운영

## 주요 개혁 및 동향

### ■ 연혁

#### 1946년

-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을 통합하여 거주 요건 충족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배경) 저소득층(빈곤층)을 위한 연금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의 필요성 대두
- 직업 유무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정액급여를 지급
- 보편적 기초연금의 재원은 사용자, 자영업자, 정부가 조달하고 기준소득에 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정책급여 방식

#### 1960년

- 소득비례연금 재도입 및 특별보충연금 도입
- (배경) 빈곤층 및 노인 대상의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였으나 보편 복지차원의 적절한 노후 소득 추가 제공
- (소득비례연금 재도입) 1959년 국민투표를 거쳐 소득비례연금을 재도입하고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충연금제도 실시
- 재도입된 소득비례연금은 강제가입방식이며 재원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으로 마련, 가입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연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 \*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평가소득의 1%, 사용자(자영업자 포함)는 13%
  - \*\* 30년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간 평균소득의 60% 지급

- (특별보충연금) 소득비례연금의 도입 이후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와의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1969년에 특별보충연금을 도입
  - 기초연금만으로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의 최대 55.5% 수준의 급여 지급
    - \* 기초연금과 특별보충연금을 합하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30% 수준 도달

## 1998년

- 보증연금, 소득 및 프리미엄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 (배경) 국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 불안정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연금개혁 목표 설정
  - (보증연금) 거주요건을 충족한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던 정책급여방식의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보충연금을 폐지하고 소득조사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에게 보증연금을 지급
    - 보증연금의 적용대상은 스웨덴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이고,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에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40년 미만은 감액된 연금 수령
    -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조사하여 보증연금에서 설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
      - \* 보증연금은 개인의 자산이나 사적연금의 급여액을 고려하지 않고 공적연금의 급여액만을 고려하며 재원은 중앙정부의 조세재원으로 충당함
      - \*\* 급여는 국민연금액이 독신은 기준소득의 3.07배, 부부는 2.72배 이하인 경우 지급
  - (소득연금) 확정급여(Defined Benefit) 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 (NDC :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의 소득연금제도 도입
  - (프리미엄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민간부문의 보험, 은행, 투자회사 등이 운용하는 연금 펀드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
    - 프리미엄연금의 급여는 개인이 선택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정해지고(수익률 경쟁 발생), 운용주체는 민간이지만 공적연금제도의 한 부분 이므로 소득연금과 동일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음
      - \* 프리미엄연금의 급여형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모두 가능하며 연금인 경우 종신연금이나 잔여 기대여명기간의 연금이나에 따라 수익률 다르게 적용
    - 재원은 본인의 연금보험료 적립원금(연금보험료 2.5%의 누적치)과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발생한 이자로부터 마련
    - 연금가입자는 언제든지 기금운용자를 교체할 수도 있으며 타 금융기관으로 기금 이동은 가능하나 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 \* 프리미엄연금도 소득연금과 동일하게 61세부터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자 선택에 따라 65세 이후에도 연금급여를 받지 않고 계속 운용할 수 있음

## &lt; NDC : 명목확정기여형 제도 도입 &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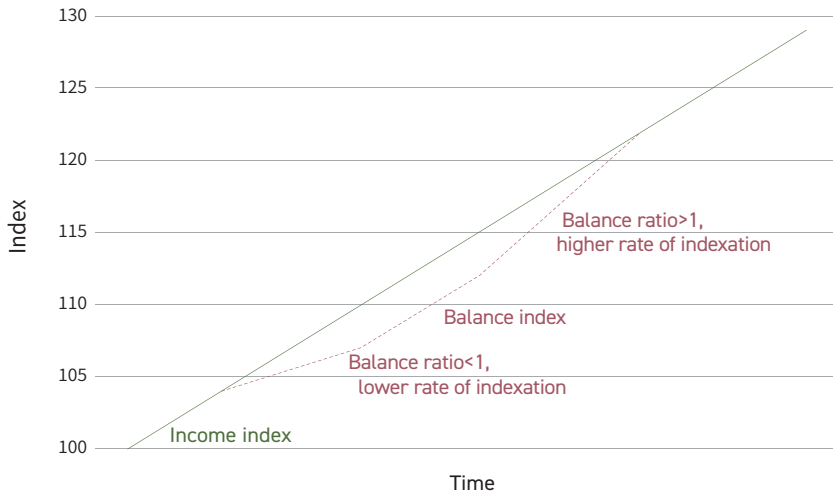
- 명목확정기여 방식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연금급여 간의 연계가 강한 것이 특징으로 보험료를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축적된 보험료와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가입자의 기여(보험료 납부액), 생애기간 평균 소득, 경제적 상황, 퇴직시점, 현재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립액을 차별화하는 소득연금으로 전환
- 보험료 납부액이 동일하더라도 퇴직시점,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급여에 차이 발생
- 총 기여금 적립금은 가상의 것으로 GDP증가율, 소득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에 따라 계산
-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이고, 연금 보험료는 18.5%이며 각각 절반씩 급여의 9.25%씩 부담
  - \* 16%는 소득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2.5%는 프리미엄연금에 적립
  - \*\* 연금 보험료는 급여가 기준소득을 넘는 경우에 부과되며, 상한선은 기준소득의 7.5배
  -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급여총액의 9.25.%)에 대한 조세혜택(전액 세금공제)이 적용
- 소득연금은 가입자가 61세부터 연금수급연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거나 부분연금을 수급 할 수 있으며, 전체 수급자의 2/3 정도가 65세에 소득연금을 수급
  - \* 소득연금 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 개인의 퇴직연령으로 퇴직시점의 차이를 근거로 급여액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퇴직 시점을 미루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음

- (자동조정장치 도입) 소득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 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연금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 (기대여명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연금급여를 수급자의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자동 조정 (연금액 산정 시)
  - \* 연금급여는 퇴직시점의 적립금을 연금계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연금계수가 상승하여 연도별 연금급여가 자동적으로 감액
- (연금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소득연금의 총 자산과 총 연금부채의 비율인 균형비  $[(\text{보험료 수입(자산)} + \text{적립기금}) / \text{연금부채}]$ 를 활용하며,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져 1 이하로 낮아지면 소득연금제도의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됨 (연금액 조정 시)
  - \* 자동적으로 1 이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기수급 중인 연금은 수지균형연동(balance indexation) 방식에 따라 금액이 조정
  - \*\* 자동조정장치가 작동되면 소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하지만, 그 결과로 소득연금제도의 재정이 회복되어 비율이 1 이상으로 높아지면 소득대체율도 다시 상승
  -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균형비율이 연금개혁 이후 최초로 1미만을 기록하였는데, 2008년의 균형비율은 2009년에 정부가 승인한 후 2010년 1월부터 적용되었고 이와 같은 자동조정장치의 작동으로 2018년 이후에는 1로 회복

### < 균형비 이용 연금액 자동조정 방식 >



- 연금수급대상자가 연금을 최초로 받은 이후 시점부터는 해당 연금급여가 매년 소득연동방식 (소득지수: Income index)을 적용받아 상향조정되나,  
→ 연금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균형비(Balance ratio)가 1보다 작아지면 장기적인 균형을 회복(재정 안정화) 하기 위하여 소득지수 대신 균형지수를 사용하는 자동조정장치 작동  
ex) 소득지수가 100에서 104로 상승하고, 균형비가 0.99를 기록한 경우, 변환균형비\*는 산식에 따라  $0.9967 = (0.99 - 1) \div 3 + 1$ 이 됨 그 결과 균형지수는  $103.66 = 104 \times 0.9967$ 이 되고, 다음 연도의 연금 수지계정은 소득지수 상승률 4%가 아닌 균형지수 3.66%에 따라 연동됨

$$B_t = I_t \cdot BT_t^*$$

$$B_{t+1} = B_t \cdot \left( \frac{I_{t+1}}{I_t} \right) \cdot BT_{t+1}^* = I_{t+1} \cdot BT_t^* \cdot BT_{t+1}^*$$

$B_t$      $t$    연도의 균형지수 [= 소득지수 × 변환균형비]  
 $I_t$      $t$    연도의 소득지수  
 $BT_t^*$     $t$    연도의 변환균형비 [\* 변환균형비 = (균형비-1) ÷ 3 + 1]

※ 균형비 변동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형비	1.0000	0.9826	0.9383	0.9406	0.9592	0.9436	0.9474	0.9829	0.9894	1.0000	1.0000	1.0000



## 2021년

- 소득연금에 더하여 보완차원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연금 도입

## &lt; 보충연금 도입(2021) &gt;

- 스웨덴에서 오랜 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낮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해왔다면 보충연금 수급 자격 부여
  - 소득 기반의 국민연금 수준과 스웨덴에서의 연금소득이 있어온 기간을 산정하여 보충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며 최대 보충연금 수급 요건은 35년~40년의 소득 기반 연금이 있어야 충족
  - 소득 기반 연금이 세전 월 9,223~17,420 SEK 인 경우 지급
  - 최대 보충연금 지급액은 세전 월 최대 600 SEK (한화 78,000원)
  - 국민연금 가입시 보충연금도 동시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에 자동 추가
  - EU/EES, 스위스, 스웨덴과 사회보장협정 국가\*에 거주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보충연금 수급 가능
- \* (사회보장협정 국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인도, 이스라엘, 캐나다, 카보베르데, 필리핀, 모로코, 퀘벡, 세르비아, 영국, 한국, 터키 및 미국

## 2023년

- 2026년 목표연령을 도입하기 위한 단계로, 2023년부터 새로운 퇴직연령이 적용되어 국민 연금을 비롯한 보증연금, 소득연금, 보충연금 및 주택연금 수급가능 연령이 결정됨
  - 2026년부터 다양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목표 연령 적용
  - 2023년 이후 영향을 받는 대상
    - 국민연금의 가장 빠른 수급 연령 : 1961년과 1962년생이 63세
    - 보증연금, 보충 및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령 : 1958년과 1959년 사이에 태어난 66세 (개혁이전 65세)

### < 목표연령 적용 방식 >

- 대상 연령은 매년 결정되고 6년 이후 적용  
→ 2020년과 2021년의 국민연금 외 연금(보증, 보충, 주택연금)의 목표 연령은 67세(이미 국회에서 결정)가 되며, 실제 2026년과 2027년부터 적용 예정
- 2026년부터 67세가 되는 국민연금 외 연금의 목표연령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최저 연령은 목표연령 3세 이전으로 변경되어 1963년 이후 태어난 사람 이 64세에 국민연금 수급 가능
- 매년 목표연령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지침\* 제공

목표연령			*예상목표연령		
출생연도	최초 수급가능 연령(연도)		출생연도	최초 수급가능 연령(연도)	
	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연금
1957	61	65(2022)	1961	63(2024)	67(2028)
1958	61	66(2024)	1962	63(2025)	67(2029)
1959	62(2021)	66(2025)	1963	64(2027)	67(2030)
1960	62(2022)	67(2027)	1964	64(2028)	67(2031)
1961	63(2024)	미정	1965	64(2029)	67(2032)
1962	63(2025)	미정	⋮	⋮	⋮
1963	64(2027)	미정	1970	65(2035)	68(2038)

## 정책적 시사점

### ■ 전반적 평가

- 1913년 세계 최초 연금제도 도입 이래 스웨덴은 수차례 연금 개혁을 단행해왔으며 1946년 기초연금제도와 1959년의 소득비례연금제도, 1969년의 특별보충연금 도입은 스웨덴 사회 보장 기틀을 마련한 복지모델의 핵심으로 평가됨
- 1960년 이후 점진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두와 1990년대 금융위기로 인해 1998년 연금 제도 개혁이 단행되었고 이후 연금과 사회보험구조가 재정비된 계기가 됨

-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방식에서 명목상 확정기여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의 소득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은퇴 시점, 기대수명, 인구통계학적 상황에 근거하여 연금수령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
- 1998년 개혁은 스웨덴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패러다임이 변화한 가장 큰 연금제도 개혁이었으며, 공적연금 비중 축소와 개인연금 역할을 확대하여 연금제도의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과 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 마련
- 스웨덴의 GDP대비 공적연금급여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 7%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2060년 기준 7.5%는 EU, OECD 국가 평균(각각 11.2%, 10.9%)보다 상당히 낮아 스웨덴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보험료 인상 없이 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제도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
- 법적으로도 65세라는 기본적인 연금수급연령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65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도 67세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됨

## ■ 제도적 한계 및 향후 전망

- 1998년 연금개혁 이후 모든 계층의 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연금급여액이 낮아지면서 노인빈곤 위험이 높아지는 한계가 대두됨
- 길어지는 기대수명을 반영하여 조기에 국민연금이나 보증연금 수급 시점을 결정하는 '목표연령' 도입으로 향후 스웨덴의 연금수급 연령은 계속하여 높아질 예정임

## ■ 시사점

- 지난 스웨덴의 연금제도 개혁은 크게 기초보장 범위 확대와 연금재정 안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기초보장 강화, 프리미엄연금 개혁,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근로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으로 특징지어 볼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개혁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음
-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급개시 연령 상향, 이에 따른 장기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핀란드



## 핀란드 (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공적연금으로 총 3가지 (기초연금,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소득비례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 (총 공적연금지출의 약 90% 차지)
- 소득비례연금은 직역별 연금법\*을 기반으로 하며, 과거에는 차이가 존재했으나, 1990~2000년대까지의 개혁으로 동일한 수급구조를 갖게됨
  - 민간부문 연금법 : 민간근로자 (TyEL), 선원 (MEL), 농민 (MYEL), 자영업자 (YEL)
  - 공공부문 연금법 : 공공근로자 (JuEL), 정교회 (OrtKL), 핀란드 은행 (SP), 올란드 정부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sup>41)</sup>

3층 (임의)	개인연금 (Individual Pensions), 장기저축계좌 (Long-term Saving Accounts)				
2층(임의)	단체연금 보험 (Group Pension Insurance)*		-		
1층(의무)	소득비례연금 (Earning-related Pensions)				
0층(의무)	기초연금 (National Pensions), 최저보장연금 (Guarantee Pensions)				
적용대상	공공부문 근로자	민간부문 근로자	자영업자	선원	농민

\* 단체연금 보험 :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기업/산업별 연금의 일종으로, 공공근로자 계획(JuEL) 8조에 따르면 핀란드 공공 부문 연금 취급기관(Keva)에서 자유형식으로 제공 가능하나 보장규모가 미미하며 임의가입으로 운영됨

41) [www.mpsoc.mpg.de/en/social-law/research/research-projects/pension-maps/project-website/finland](http://www.mpsoc.mpg.de/en/social-law/research/research-projects/pension-maps/project-website/finland)



## 공적연금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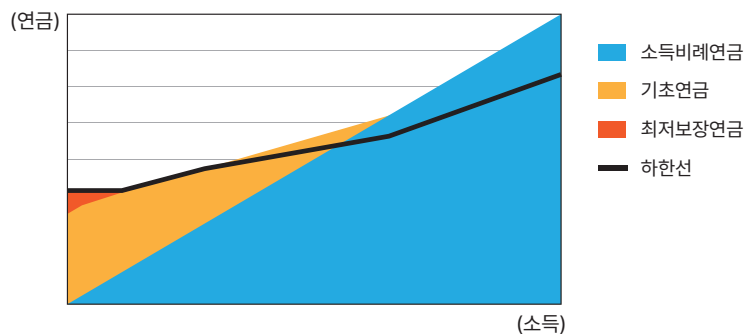
제 도	주요내용	재 정	관 리
기초연금 (National Pensions)	<div>개 요</div> 소득비례연금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 연금으로 거주요건 있음 <div>급 여</div> 2022년 기준 최대 €679.50 지급	일반 조세	핀란드 사회보험국 (Kela)
최저보장연금 (Guaranteed Pensions)	<div>개 요</div> 월연금액의 하한선 설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div>급 여</div> 2022년 기준 세전 월연금액이 €848.56 미달 시 최저 연금액(€855.48) 보장		
소득비례연금 (Earning-related Pensions)	<div>개 요</div>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연금으로 핀란드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div>급 여</div> 소득, 지급률(accrual rate), 기대여명계수에 의해 결정되며, 소득대체율 60%를 목표로 함	보험료	(총괄) 핀란드 연금센터* (운영) 공인된 연금기관**

\* 소득비례연금은 다양한 연금공급자를 통해 분산 운영되며, 핀란드 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가 각 제도를 조정하여 단일한 연금 제공

\*\* 공공부문은 자체 연금기구인 핀란드 공공부문 연금(Keva)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민간부문은 경쟁관계에 있는 공인된 연금기관에 의해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운영 (고용주에 의해 선택됨)

### <소득수준별 공적연금 지급구조<sup>42)</sup>>

- ① 소득비례연금액 결정 → ② 소득비례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보장여부 및 보장규모 결정  
→ ③ 소득비례연금 및 기초연금의 합이 하한액 이하인 경우, 최저보장연금 지급으로 보충



42) [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pension-security/pension-income-level](http://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pension-security/pension-income-level)

## ■ 주요 연혁

- 1937년** 국민연금법(National Pension Act) 제정  
- 1939년부터 완전적립식 개인계정 형태의 국민연금제도 시행

- 1957년** 국민연금 개혁  
- 개인계정 폐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액연금으로 전환

- 1961년** 소득비례 연금제도 시행  
- 1961년 피용인 연금법 및 임시직 연금법 제정  
- 1964년 지방공무원연금법 제정  
- 1967년 국가공무원연금법 제정  
- 1970년 자영업자연금법 및 농업인연금법 제정

[참고]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연금은 1920년대부터 존재해왔으나 각 지방의 주연금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함 (통합된 제도 미존재)  
\* 당시 481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51개는 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400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는 유족연금제도가 없었음 (1961년 기준)

- 1996년**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전국민 대상의 기본급여 폐지  
- 소득비례연금이 없거나 낮은 수급자에게만 지급토록 변경

- 2005년** 실질은퇴연령 연장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  
- ① 연금수급연령 유연화 (65세 → 63~68세) ② 조기퇴직연금 점진적 폐지  
③ 연령별 지급률 차등화 및 상향 (59세 미만 1.5%, 60~65세 2.5% → 52세 미만 1.5%, 53~62세 1.9%, 63~68세 4.5%) ④ 기대여명계수 도입 ⑤ 소득상한폐지

- 2007년** 민간 근로자 적용 연금법 통합

• 기존 피용인연금법 (TEL)  
• 임시직 연금법 (LEL)  
• 예술인 및 특정직 연금법 (TaEL)



새로운 피용인연금법 (TyEL)

- 2011년**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Guarantee 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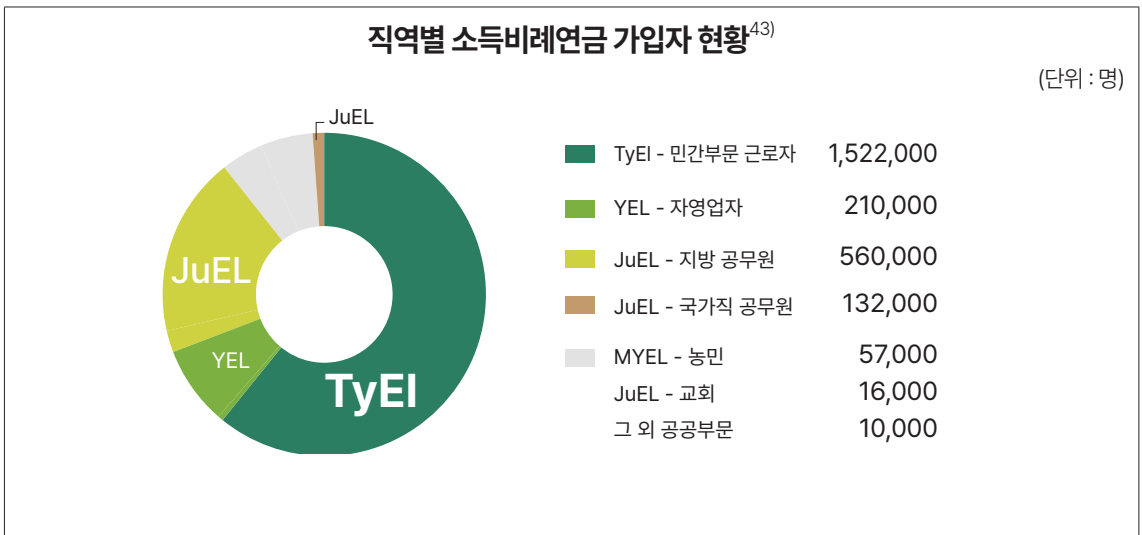
- 2017년** 2015년 개정안 국회통과  
- 재정 안정화, 급여 적정성,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① 연금지급률 통일 및 하향조정 (52세 미만 1.5%, 53~62세 1.9%, 63~68세 4.5% → '17~'25년 53~62세 1.7% 변경 적용 → '26년전 연령 1.5%)  
② 연금수급연령 상향 (63세~68세 → '27년 65~70세 → '30년 기대여명과 연동)

## 소득비례연금(Earning-related Pension)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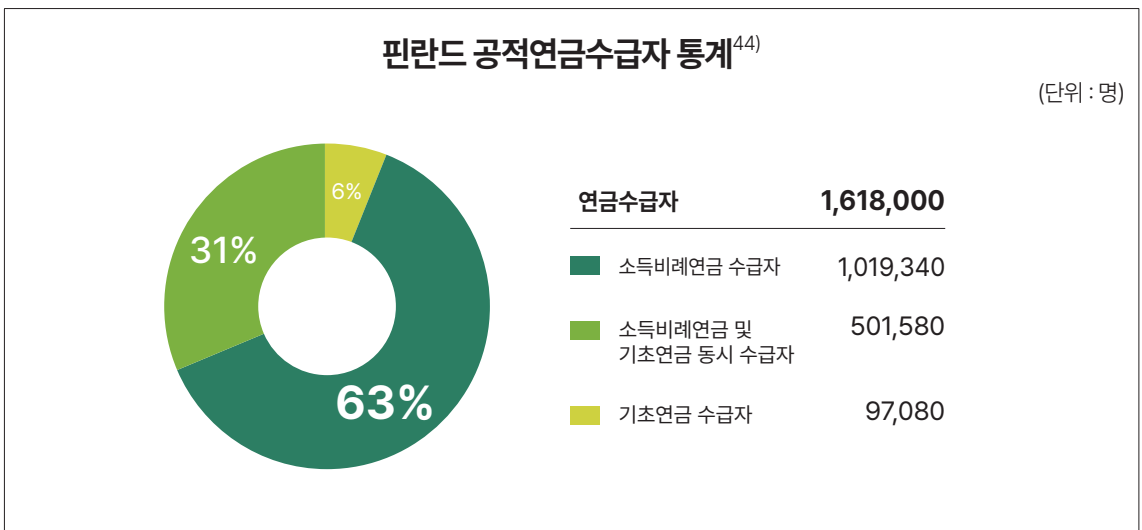
### ■ 적용대상

**대 상** 임금근로자(17-68세) 및 자영업자(18-68세)

**가입자 현황** 2020년 기준 약 250만명 (민간 180만명, 공공 70만명)



**수급자 현황** 2020년 기준 약 160만명



43) Finnish Centre for Pensions(2020), Persons insured for an earnings-related pension in Finland 2020.

44) Finnish Centre for Pensions(2020), Statistical Yearbook of Pensioner Finland 2020.

## ■ 재원조달

### 재정방식<sup>45)</sup>

재정방식	연금제도
부과방식	자영업자(YEL), 농민(MYEL), 공공근로자(JuEL)
부분적립방식	민간근로자(TyEL), 선원(MEL)

※ 민간근로자 및 선원의 경우 각각의 근거법에 적립의무 규정이 존재하며 자영업자, 농민, 공공근로자의 경우 각 근거법에 적립의무 규정은 없지만 지급능력 규정(Solvency regulations)에 따라 지불준비금 성격의 완충기금(Buffer Fund)은 존재함

**소득구간** 소득상한제도가 존재했으나, 2005년 폐지

**비용부담** 기여율은 예상 연금지출 규모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근로자의 보험료에 비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수준이 높음<sup>46)</sup>

### < 2022년 민간부문 기여율 >

(단위 : %)

연금제도	평균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53-62세	그 외 연령	
민간근로자(TyEL)	24.85	8.65	7.15	17.4
선원(MEL)	19	8.65	7.15	11.4
자영업자(YEL)	-	25.6	24.10	-
농민(MYEL)*	-	13.824 ~ 25.6	13.014 ~ 24.10	-

\* 농민(MYEL) :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28,942.64 미만인 경우 최저, € 45,481.37 초과인 경우 최고)

### < 2022년 공공부문 기여율 >

(단위 : %)

연금제도	평균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53-62세	그 외 연령	
국가공무원(JuEL)	24.85	8.65	7.15	17.3%
지방공무원 등(JuEL)	24.4	8.65	7.15	16.83%

45) [www.tela.fi/en/financing-of-pensions/principles-of-financing](http://www.tela.fi/en/financing-of-pensions/principles-of-financing)

46) [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financing-and-investments/pension-contributions/contribution-levels/](http://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financing-and-investments/pension-contributions/contribution-levels/), [www.tela.fi/en/financing-of-pensions/pension-contributions](http://www.tela.fi/en/financing-of-pensions/pension-contributions)

재정현황<sup>47)</sup>

## &lt; 2020년 소득비례연금제도 재정현황 &gt;

(단위 : 백만€)

연금제도	보험료 수입	연금지출	연금자산
민간부문	14,941	18,585	141,649
공공부문	6,752	10,451	79,818

## ■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액

## 퇴직연금(Old-age Pension)

- (요건) 최소 가입기간은 없으며, 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음

출생연도	개시연령	출생연도	개시연령
1954년 이전	63세	1959년	64세 3개월
1955년	63세 3개월	1960년	64세 6개월
1956년	63세 6개월	1961년	64세 9개월
1957년	63세 9개월	1962 ~ 1965년	65세
1958년	64세	1965년 이후	기대여명계수에 의해 결정

- (급여)<sup>48)</sup> 목표 소득대체율 60%, 2020년 기준 평균액 €1,820

$$\text{월연금액} = \text{연소득} \times 1.5\% \div 12\text{월} \times \text{가입기간} \times \text{기대여명계수}^{49)}$$

\* 개시연령 이후 계속근무 시, 실제 퇴직시점까지 매월 0.4%의 연기연금 몫이 추가됨

## 부분 조기 연금(Partial early old age pension)

- (개요) 노령연금 개시연령 도달 전, 노령연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수급할 수 있는 제도

- (요건) 해당 개시연령 도달 후

출생연도	개시연령
1949 ~ 1963년	61세
1964년	62세
1965년 이후	기대여명계수에 의해 결정

47) Finnish Centre for Pensions(2020), Pocket Statistics 2020.

48) [www.tyoelake.fi/en/how-much-pension/how-is-my-pension-calculated](http://www.tyoelake.fi/en/how-much-pension/how-is-my-pension-calculated)

49) 주요개혁 page 참고

- (급여) 연금은 연금수급 당시까지 발생한 퇴직연금액을 조기수급기간에 비례하여 월 0.4%씩 감액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의 25% 또는 50%를 선택하여 수급한다. 퇴직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나머지 몫 (25% 선택한 경우 75%, 50%를 선택한 경우 50%)이 개시됨

※ 부분 조기 연금 수령으로 인해 감액된 부분은 영구적으로 유지됨

### 장해연금

- (개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가 장해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 (요건) ① 17세 이상 ② 재직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1년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급여)<sup>50)</sup>

$$\text{월연금액} = \text{퇴직연금(A)} + \text{장해보상연금액(B)}$$

(A) 실제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B) The projected pension component : 장해로 인한 퇴직을 보상하기 위한 몫으로 장해 발생전 5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장기재직연금 (Years of service pension)

- (개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한 장기 재직자가 개시연령 도달 전 퇴직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2017년 도입)
  - (요건) ①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 (산업보건과의 심사를 통해 판정)  
② 38년 이상 재직 ③ 63세 이상 ④ 1995년 이전 출생
  - (급여) 퇴직시점까지 계산된 퇴직연금액
- ※ 장기재직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장기재직연금을 종결하고 퇴직연금을 수령

50) [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pension-security/earnings-related-pension-benefits/disability-pension](http://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pension-security/earnings-related-pension-benefits/disability-pension)



## 유족연금

- (요건)<sup>51)</sup>

배우자연금		
법률혼	유자녀	① 피보험자가 65세 도달 전 결혼 ② 사망 당시 혼인 상태 유지
	무자녀	① 피보험자가 65세 도달 전 결혼 ② 배우자가 50세 도달 전 결혼('90. 07. 01.이전 혼인의 경우, 제한 없음) ③ 5년 이상 동안 혼인기간 유지 ④ 배우자가 사망 당시 50세에 도달했거나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일 것
사실혼		① 유자녀 ② 5년 이상 동안 동거 기간 유지 ③ 피보험자가 65세 도달 전 동거 시작 ④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가 없음
전 배우자		사망 당시 법원의 결정 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확인한 합의사항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고 있던 경우

자녀연금	
친자녀	사망한 피보험자의 친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친자녀가 아닌 경우	사망한 피보험자의 생물학적 자녀는 아니지만, 친부/친모가 피보험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함께 동거중이며 20세 미만인 경우

- (급여) 사망자의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해당 비율에 따라 지급함

## &lt; 유족구성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비율 &gt;

자녀수(명)	없음	1	2	3	4
배우자연금	6/12	6/12	5/12	3/12	2/12
자녀연금	-	4/12	7/12	9/12	10/12
총 계	6/12	10/12	12/12	12/12	12/12

\* 배우자 연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자녀에게 배우자 몫을 이전함

- (수급기간) 배우자연금의 수급기한은 10년으로 제한하며,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가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지급을 보장함

51) [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pension-security/earnings-related-pension-benefits/survivors-pension](http://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pension-security/earnings-related-pension-benefits/survivors-pension)

**연금연동방식** 임금지수와 물가지수를 2 : 8의 비율로 결합하여 연동

## ■ 주요개혁

### 2005년 기대여명계수 도입

- 2009년 62세에 도달하는 집단(1947년 출생)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매년 62세에 도달하는 출생 연도 집단의 기대여명계수를 계산

출생연도	기대여명계수	출생연도	기대여명계수
1947년	1.00000	1953년	0.97200
1948년	0.99170	1954년	0.96800
1949년	0.98689	1955년	0.96344
1950년	0.98351	1956년	0.96102
1951년	0.97914	1957년	0.95722
1952년	0.97552	1958년	0.95404

- 계수를 통해 조정한 연금의 가치가 2009년 기준의 연금의 가치와 같아지도록 설정하며, 1.5%로 설정되어 있는 급여 지급률이 2080년 1.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기대여명증가에 따른 개시연령 연동 (2030년~)

## ■ 시사점

-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 및 연금 수급기간 감소를 통해 확정급여(DB)제도 하의 급여의 적정성 및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대안으로 평가됨

## ■ 관리·운영기관

- 관리·감독**
- 핀란드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핀란드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정책수립** 보건복지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법률 제정 이전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

\* 핀란드 연금연맹(The Finnish Pension Alliance), 공인된 연금기관(Authorised pension provider), 핀란드 연금센터(The Finnish Centre for pensions), 고용주, 근로자, 자영업자 등

### 운 영 <sup>52)</sup>

구 분	운영기관
민간근로자(TyEL)	공인된 연금보험회사 (company pension funds) 중 고용주 / 자영업자가 선택하며, 고용주가 직접 회사 자체의 기업연기금 (company pension funds)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산업별 연기금 (industry-wide pension funds)에 가입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공인된 기관 (Authorised pension provider) : 연금보험회사 (4개), 기업연기금 (8개), 산업별 연기금 (4개)
자영업자(YEL)	
선원(MEL)	선원연기금 (The Seafarer's Pension Fund)
농민(MYEL)	농민 사회보험기관 (Mela)
공공근로자(JuEL)	핀란드 공공부문 연금(Keva)

**운영기관 조정·총괄** 핀란드 연금센터 (Finnish Centre for Pensions)

52) [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administration-and-supervision/parties-to-the-pension-scheme](http://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administration-and-supervision/parties-to-the-pension-scheme), [www.tela.fi/en/pension-providers/different-types-of-providers](http://www.tela.fi/en/pension-providers/different-types-of-providers)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일본



## 일본 (국가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기초연금, 1층)과 근로자를 위한 후생연금(2층)이 있음
- '86년 연금개혁으로 다층제 전환 (공무원 : 국민연금 + 공제연금 적용)
- 2층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공무원을 위한 신연금제도(개인연금, 3층) 도입 ('12년 법 개정, '15년 시행)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층	iDeCo <sup>53)</sup>					
	국민 연금 기금	iDe Co	확정기여 기업연금	확정급여 기업연금	후생연금 기금	퇴직등 연금급여
3층						
2층			후생연금 (소득비례연금)			후생연금적용 ('15. 10.~)
1층			국민연금 (기초연금)			

자영업자등	민간 근로자	공무원 등	제2호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제1호 가입자]	[제2호 가입자]		[제3호 가입자]

53) 개인형확정기여연금(iDeCo)은 기업연금 비대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한해 가입 가능했으나, 2017년 1월부터 기업연금 대상 근로자, 공무원, 전업주부 포함 60세 미만 모든 사람으로 확대



## 공적연금제도 개요

### ■ 주요 연혁 및 관련 법령<sup>54)</sup>

- 1890년** 공무원 및 군인 대상 은급법 제정
- 1942년** 노동자연금보험법 제정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변경)
- 1958년**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정 및 은급제도·공제연금 통합
- 1961년** 국민연금법 시행
- 1962년** 지방조례 등으로 개별 규정된 지방공무원공제조합제도 통합
- 1986년** 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 및 공제연금 구조 후생연금과 일치
- 1997년** 3공제(철도JR공제, 담배JT공제, 통신NTT공제) 후생연금으로 통합
- 2002년** 농림공제 후생연금에 통합
- 2009년** 국가공무원공제조합과 지방공무원공제조합間 재정단위 일원화
- 2015년** 근로자연금일원화법에 따라 공제연금·후생연금 일원화

### ■ 적용 대상자

**국민연금**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국민 (자영업자, 학생, 전업주부 포함)

**후생연금** 70세 미만의 직장인 (후생연금적용사업소에 고용된 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포함

**인원 현황** <sup>55)</sup> ('19년 말 기준)

(단위 : 만 명)

구분	가입자수 (A)	연금수급자수(B)	합계 (A+B)	부양률 (B/A)
구 후생연금	4,037	1,599	5,636	39.6%
구 국가공무원공제	108	65	173	60.2%
구 지방공무원공제	286	206	492	72.0%
구 사립학교교직원공제	57	14	71	24.6%
합 계	4,488	1,884	6,372	42.0%

54) 후생노동성 연금제도의 포인트 [www.mhlw.go.jp/content/00341071.pdf](http://www.mhlw.go.jp/content/00341071.pdf)

55) 후생노동성(2019) 第89回社会保障審議會年金数理部会, 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一令和元(2019)年度一付属資料(案) p.311, 323

## ■ 재원조달

### 재정방식 부분적립방식

(5년마다 재정재계산 통해 향후 100년 뒤에도 1년 지출에 사용될 수준의 기금 유지되도록 함)

### 소득구간 표준보수월액 최소 88,000엔 ~ 최대 650,000엔<sup>56)</sup> ('21년 기준)

### 비용부담 법정보험료 18.3% 공무원, 정부 균등부담, 은급세대분 비용 등 기타 추가비용 전액 정부부담

- (법정보험료율) 매년 0.354%씩 인상 통해 '18년 후생연금과 일치 (18.3%)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후생연금	8.383	8.560	8.737	8.914	9.091	9.15	9.15
공제연금	8.108	8.285	8.462	8.639	8.816	8.993	9.15

### <국가공무원 연금비용 부담 내역<sup>57)</sup>>

(단위 : 억엔, %)

2019 회계년도		후생연금부분		구 직역가산부분	
		금액	보수대비	금액	보수대비
공무원 기여금		6,450.5	9.150	-	-
정부 부담금	법정부담금	6,450.5	9.150	23	0.033
	공경제부담	2,967	4.209	6	0.008
	추가비용	1,640	2.326	152	0.216
	합 계	11,057.5	15.685	181	0.257

- 그 외 '퇴직등연금급여(직역가산대체제도)'의 보험료 1.5%는 공무원·정부 각 0.75%씩 부담하고, 퇴직수당으로 약 10% 수준<sup>58)</sup> 별도 부담

56) [www.nenkin.go.jp](http://www.nenkin.go.jp)

57) 후생노동성(2019), 第89回社会保障審議會年金数理部会, 令和元年度 財政状況 —国家公務員共済組合—

58) 재무부 예산국(2020), 令和3年度 公務員人件費 국가공무원 급여비 39,590억엔 퇴직수당 3,900억엔

**재정상황** 적립금 ('19년)<sup>59)</sup> : 국공제 6조 5,687억엔, 지공제 38조 1,238억엔

(단위 : 억엔, %)

2019 회계년도		후생연금 <sup>60)</sup>	국공제 <sup>61)</sup>	지공제 <sup>62)</sup>
후생연금상당액	수 입	481,934	30,969	85,014
	지 출	478,619	30,449	83,173
	연도말적립금	1,128,931	61,766	191,149
	적립금운용수익률	△5.00	2.51	3.08
구 직역가산부분 (경과적 장기급여)	수 입	-	230	6,212
	지 출	-	1,689	5,530
	연도말적립금	-	3,921	190,089
	적립금운용수익률	-	0.79	3.06

- 근로자연금 일원화로 국공제 등의 적립금 일부도 후생연금에 속하나, 적립금 관리운용은 계속 국공제 연합회 및 지공제연합회 등에서 수행<sup>63)</sup>
- 기존의 장기급여 적립금을 후생연금보험급여적립금, 경과적 장기급여적립금(구 직역가산부분)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퇴직등연금제도 적립금은 별도 운용

(단위 : 조엔)

2015년 기준	후생연금	국공제	지공제
후생연금 보험급여 적립금*	112.5	7.1	18.9
경과적 장기급여 적립금 (직역가산)	-	0.7	18.9

\* 2015년 당시 후생연금적립비율이 4.9년분이므로 국공제 및 지공제의 2015년 연금지출액의 4.9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함<sup>64)</sup>

59) 令和元年度 財政状況 国家公務員共済組合 및 地方公務員共済組 연도말 후생연금적립금 + 경과적장기급여적립금의 장부가격

60)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807989.pdf>

61)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807991.pdf>

62)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807994.pdf>

63) 후생노동성(2016), 연금제도의 포인트(年金制度のポイント). p.30

64) [www.mhlw.go.jp/file/05-Shingikai-12601000-Seisakutoukatsukan-Sanjikanshitsu-Shakaihoshoutantou/0000124842.pdf](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2601000-Seisakutoukatsukan-Sanjikanshitsu-Shakaihoshoutantou/0000124842.pdf)

## ■ 수급요건

### 노령연금

구 분	노령기초연금			노령후생연금			퇴직연금 <sup>65)</sup> (직역가산 대체제도)
수급 요건	보험료 납부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 합하여 10년 이상 가입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을 전제로, 후생연금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가입			공제조합 가입기간 1년 이상
개시 연령	~ 2012	2013 ~ 2015	2016 ~ 2018	2019 ~ 2021	2022 ~ 2024	2025 ~	65세 ※ 60세부터 조기 연금, 70세까지 지급 연기 가능
	60세 (~ 53년생)	61세 (53 ~ 55년생)	62세 (55 ~ 57년생)	63세 (57 ~ 59년생)	64세 (59 ~ 61년생)	65세 (61년생 ~)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5년 늦게 지급개시연령 연장됨 (2030년 65세)						

### 유족연금

구 분	유족기초연금	유족후생연금
수급 요건	① 단기요건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또는 피보험자였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내거주자가 사망 했을 때 ② 장기요건 : 노령기초연금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자가 사망했을 때	① 단기요건 :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 피보험자 기간 중 초진일이 있는 환자가 초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 1·2급의 장애후생연금수급권자가 사망 한 때 ② 장기요건 : 노령후생연금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격을 충족 한 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료 납부요건	단기요건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 월까지 피보험자 기간이 있고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한 기간이 2/3 이상인 경우 (단, 장애기초연금과 유사한 최근 1년 요건의 특례가 있음)	단기요건 ㉠, ㉡의 경우 유족기초연금과 같은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함

65) [www.kkr.or.jp/nenkin/zenpan/seido/taishokutoukyufu/taishokunenkin/syuushin.html](http://www.kkr.or.jp/nenkin/zenpan/seido/taishokutoukyufu/taishokunenkin/syuushin.html)

구 분	유족기초연금	유족후생연금
유족 범위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사람 ㉠ 자녀 <sup>66)</sup> 가 있는 배우자 ㉡ 자녀 <sup>67)</sup>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사람 단, 부모, 손자녀, 조부모는 선순위자가 수급하는 경우 유족이 될 수 없음 ㉠ 배우자 <sup>68)</sup> (남편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지급은 60세부터 함) ㉡ 자녀 ㉢ 부모 (55세 이상, 60세부터 지급) ㉣ 손자녀 (자녀와 연령조건 동일) ㉤ 조부모 (55세 이상, 60세부터 지급)

구 분	공무유족연금 <sup>69)</sup>
수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조합원(공무원)이 공무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이하 “공무상병<sup>70)</sup>”)에 의해 사망했을 때</li> <li>공제조합원(공무원)이 퇴직 후, 조합원기간 중에 초진일이 있는 공무상병으로 초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단, 조합원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적연금 가입기간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기간 중 초진일이 있는 공무상병으로 사망한 경우 인정</li> <li>1·2급의 공무장해연금수급권자가 공무장해연금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공무상병에 의해 사망했을 때</li> </ul>
유족 범위	후생연금의 유족 범위와 동일하나, 해상보안관 등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사망한 경우(특례공무사망) 사망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는 유족후생연금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족으로 간주함

## 장해연금

구 분	장해기초연금	장해후생연금
보험료 납부요건	① 초진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까지 피보험자 기간이 있고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 면제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3 이상 (단, 초진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1년간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함) ② 초진일에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들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	① 보험료 납부요건은 장애기초연금과 동일 ② 초진일에 피보험자이어야 함

66) 18세 도달한 연도의 말일(3월 31일)을 경과하지 않은 자녀, 20세미만 장해연금의 장해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녀를 말함

67)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기초연금, 유족후생연금은 배우자가 유족기초연금,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권을 갖는 경우 에는 지급정지

68) 남편 사망시 자녀가 없는 30세 미만의 부인에게 지급되는 유족후생연금은 5년간만 지급됨

69) [www.kkr.or.jp/nenkin/zenpan/seido/taishokutoukyufu/izokunenkin.html](http://www.kkr.or.jp/nenkin/zenpan/seido/taishokutoukyufu/izokunenkin.html)

70) 출퇴근재해 제외

구 분	장해기초연금	장해후생연금
장해상태	<p>장해인정일에 장해 1·2급 해당 (장해인정일에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65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장해가 심해져 1·2급에 해당한 경우)</p> <p>* 20세 미만자의 장해기초연금</p> <p>초진일에 20세 미만인 사람이 20세에 도달한 날 1·2급의 장해상태에 있을 때 또는 20세가 된 후 1·2급의 장해상태가 된 때. 단, 소득제한 있음 (전액정지 : 462.1만엔, 1/2정지 : 360.4만엔)</p>	<p>장해인정일*에 장해 1~3급 해당</p> <p>* 장해인정일이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그 전에 증상이 고정된 경우 고정된 날)을 말함</p>

구 분	공무장해연금 <sup>71)</sup>
수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조합원 (공무원)이 공무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sup>72)</sup>한 경우</li> <li>•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에 공제조합원인 경우</li> <li>• 장해등급 1~3급 (후생연금 장해등급과 동일)에 해당하는 경우</li> </ul>
권리상실/지급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경과한 때 또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65세에 도달한 때 중 늦은 때 수급권 소멸</li> <li>•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면직 또는 정직 징계처분 받은 경우, 퇴직수당법 등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장해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제한</li> </ul> <p>* 금고 이상 형 집행 중에는 공무장해연금 전액정지</p>

## ■ 급여지급액

### 퇴직연금

구 분	연금액	비 고
노령 기초연금	$780,900 \times \frac{\text{보험료납부월수} + \text{보험료면제월수} \times (1/2 \sim 7/8)}{480\text{월}}$ <p>* 780,900엔은 2021년 기준 최대금액</p>	<p>보험료전액 면제 : 1/2</p> <p>보험료 3/4 면제 : 5/8</p> <p>보험료 1/2 면제 : 3/4</p> <p>보험료 1/4 면제 : 7/8</p>
노령 후생연금	$\text{평균표준보수월액} \times (9.5 \sim 7125) / 1,000 \times \text{'03년 3월 이전 가입기간} + \text{평균표준보수월액} \times (7.308 \sim 5.481) / 1,000 \times \text{'03년 4월 이후 가입기간}$	지급률은 생년월일에 따라 차등

71) [www.kkr.or.jp/nenkin/zenpan/seido/taishokutoukyufu/shogainenkin.html](http://www.kkr.or.jp/nenkin/zenpan/seido/taishokutoukyufu/shogainenkin.html)

72) 출퇴근재해 제외



구분	연금액		비고
퇴직연금	종신	$\frac{\text{종신퇴직연금산정기초액}}{\text{수급권자연령에 따른 종신연금현가율}}$	퇴직연금산정기초액 : 재직 중 납부한 금액+이자, 종신·유기퇴직연금산정기초액은 퇴직연금산정기초액의 1/2
	유기	$\frac{\text{유기퇴직연금산정기초액}}{\text{수급잔여월수에 따른 유기연금현가율}}$	종신연금현가율 : 기준금리, 사망률 등 고려하여 평생 지급할 수 있는 비율 유기연금현가율 : 개인이 선택한 기간동안 지급 할 수 있는 비율

## 유족연금

구분	연금액	비고
유족 기초연금	780,900엔 (2021년 기준)	첫째, 둘째 자녀 각 224,700엔 셋째 자녀 이후 각 74,900엔
유족 후생연금	사망한 자의 노령후생연금의 3/4	단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노령후생연금 재직기간이 300개월 미만인 경우 300개월로 산정함
공무 유족연금	① $\frac{\text{공무유족연금산정기초액*}}{\text{사망당시연령에 따른 종신연금현가율}} \times \text{조정률**}$ * 공무유족연금산정기초액 ㉠ 조합원기간 300개월 미만인 경우 $\text{급여산정기초액 (=퇴직연금산정기초액)} \times 2.25 / \text{조합원 기간월수} \times 300$ ㉡ 조합원기간 300개월 이상인 경우 $\text{급여산정기초액 (=퇴직연금산정기초액)} \times 2.25$ ② 1,038,100엔 × 각년도 국민연금개정율-후생연금상당액	①, ② 중 큰 금액 지급 ** 조정률 $\frac{\text{공무유족연금 수급년도의 국민연금개정률}}{\text{공무유족연금사유발생년도의 국민연금개정률}}$

**장해연금**

구분	연금액		비고
장해 기초연금	1급 780,900엔 × 1.25 + 자녀가산 2급 780,900엔 + 자녀가산		첫째, 둘째 자녀 각 224,700엔 셋째 자녀 이후 각 74,900엔
장해 후생연금	1급 노령후생연금 × 1.25 + 배우자가산 2급 노령후생연금 + 배우자가산 3급 노령후생연금 (최저보장액 585,700엔)		배우자 가산 224,700엔 장해후생연금액 산정 시 재직기 간이 300개월 미만인 경우 300 개월로 산정함
공무 장해연금	기본	$\frac{\text{공무장해연금산정기초액}}{\text{수급권자연령구분에 따른 종신연금현가율}} \times \text{조정률}^*$	* 조정률  $\frac{\text{공무장해연금 수급년도의 국민연금개정률}}{\text{공무장해연금사유발생연도의 국민연금개정률}}$
	최저 보장	1급 : 4,152,600엔 × 각년도국민연금개정률 - 후생연금상당액 2급 : 2,564,800엔 × 각년도국민연금개정률 - 후생연금상당액 3급 : 2,320,600엔 × 각년도국민연금개정률 - 후생연금상당액	

**퇴직수당**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 퇴직 시 봉급월액 × 근속연수 · 퇴직사유별 지급률 + 조정액

**<근속연수·퇴직사유별 지급률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 적용)>**

구분		근속연수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2년	45년
퇴 직 사 유	정년	4.2	8.4	16.2	24.6	33.3	40.8	47.709			
	의원 면직	2.5	5.0	10.4	19.7	28.0	34.7	37.8	44.8	46.8	47.709

## &lt; 퇴직수당 산정례 &gt;

- 퇴직일 봉급월액 : 일반 행정직 5급 73호봉 387,000엔
- 재직기간 : 채용일 1980년 4월 1일  
승진일 2016년 4월 1일 (4급 → 5급)  
퇴직일 2019년 3월 31일
- 근속기간 : 2019년 3월 - 1980년 4월 = 39년
- 근속기간·퇴직사유별 지급률 : 47.709 (25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
- 퇴직수당 :  $387,000\text{엔} \times 47.709 + (32,500\text{엔} \times 36\text{월} + 27,100\text{엔} \times 24\text{월}) = 20,283,783\text{엔}$
- 조정액

구분	직급	조정월액(엔)	구분	직급	조정월액(엔)
1	지정직(6호봉 이상)	95,400	6	일반 행정 7급	54,150
2	지정직(5호봉 이하)	78,750	7	일반 행정 6급	43,350
3	일반 행정 10급	70,400	8	일반 행정 5급	32,500
4	일반 행정 9급	65,000	9	일반 행정 4급	27,100
5	일반 행정 8급	59,550	10	일반 행정 3급	21,700
			11	기타직	0

\* '직책 포인트' 개념으로 직급에 따른 포인트 60개월분 추가 지급

\*\* 근속 9년 이하 의원면직자는 조정액 미지급, 근속 4년 이하 퇴직자, 근속 10년 이상 24년 이하 의원면직자 조정액은 산정액의 1/2만 지급

**연금연동방식** 물가변동률 또는 임금변동률 + 거시경제 조정률\*

\* 공적연금 피보험자수 변동률<sup>1)</sup> + 기대여명 상승률<sup>2)</sup>

1) 전전년도 이전 3년 평균 증감율 (예 : '05년의 경우 '01년부터 '03년 사이의 증감율)

2) 조정기간 동안 0.3%로 고정

- 2004년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도입, 물가변동률 또는 임금변동률에 의해서만 조정되는 연금액을 현재 공적연금 피보험자 수의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하여 일부 완화시키는 방식임
- 디플레이션 등으로 실제 적용되지 않다가, 2013년부터 경과기간 거쳐 2015년 본격 적용

### < 연금조정률 추이 >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물가변동률		2.7	0.8	-0.1	0.5	1.0	0.5	0.0	i) 물가변동률 > 임금변동률 : 임금변동률 기준으로 거시경제조정률 적용 (2015, 2019, 2020) ii) 물가변동률 > 0 > 임금 변동률 : 연금액 조정하지 않음 (2016, 2018) iii) 0 > 물가변동률 > 임금 변동률 : 거시경제조정률 적용하지 않고 물가변동 률만 적용 (2017)
임금변동률		2.3	-0.2	-1.1	-0.4	0.6	0.3	-0.1	
공적연금피보험자수 변동률 (3년 평균)		-0.6	-0.4	-0.2	0.0	0.1	0.2	0.2	
기대여명상승률(고정)		-0.3							
거시경제조정률		-0.9	-0.7	-0.5	-0.3	-0.2	-0.1	-0.1	
거시경제 미조정분(누계)		-0.5	-	-	-0.3	-0.3	-	-0.1	
연금조정률		0.9	0.0	-0.1	0.0	0.1	0.2	-0.1	

## ■ 관리운영기관

**후생연금** 후생노동성 / 일본연금기구 /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GPIF)

**국 공 제** 재무성 /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지 공 제** 총무성 /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공제사업단에서 관리·운영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대만



## 대만 (공무원)



### 노후소득 보장체계

#### 개요

- 국민연금과 분리된 전체 공무원(공무원, 교원, 군인) 대상 통합체계
- 공무원은 1층 공무원·교직원보험 제도로 일시금 수령, 2층 공무원 연금기금을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
- 전액 정부 부담의 공무원연금제도 운영해 왔으나 재정부담 증가로 공무원·정부 비용 차등부담 (35% : 65%)에 따른 부분적립방식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 ■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3층	자발적 계획	개인저축 등					
2층	법정 퇴직기금	공무원연금기금 (公務人員退休撫卹基金) * 공무원·공립교원·군인 통합기금		사립학교 퇴직기금	노동 퇴직기금		
1층	법정공보험	군인 보험	공무원·교직원 보험 (公務人員保險, 일시금)		노동보험(연금)	국민연금 보험	
적용대상		군인	공무원	교사	민간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

## 공적연금제도 개요<sup>73)</sup>

제 도		주요내용	소득대체율(25년 근무)
1층	군인보험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	-
	공무원·교직원보험	공무원·공립교원에게는 일시금만 제공하며 사립교원에게만 연금 지급	18.75 ~ 32.5%
	노동보험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여, 주로 연금 수급	38.75%
	국민연금보험	다른 1층 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자동가입(무직자 등)	32.5% (약 월21만원)
2층	공무원연금기금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며, 주로 연금 수급	75 ~ 85%
	사립학교 퇴직기금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며, 주로 일시금 수급	-
	노동퇴직기금	일시금만 취급하다 2009년부터 연금 지급 시작	13.37%

## 공무원연금제도 주요 내용

### ■ 주요 연혁 및 관련 법령

- 1943년** 공무원연금기금 도입 (전액 정부부담)
- 1960년** 1층 공무원·교직원 보험(일시금) 제도 도입
- 1995년** 공무원연금기금 기여제 방식 전환 (공무원 : 정부 = 35% : 65%)
  - 기금운용기관으로 PSPF (Public Service Pension Fund) 설립
  - \* 공무원, 교직원, 군인연금기금 통합 관리
- 2017년** 지급개시연령 인상, 기준소득 변경 등 모수개혁<sup>74)</sup>
  - \* 2018년 7월 시행, 개혁사항 단계적 적용

73) 노대명 외 5인(2017), 「아시아보장정책 비교연구 :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 [www.benefitscanada.com/news/bencan/do-taiwans-cuts-to-public-sector-pensions-offer-lessons-for-canada/](http://www.benefitscanada.com/news/bencan/do-taiwans-cuts-to-public-sector-pensions-offer-lessons-for-canada/)

## ■ 적용 대상자<sup>75)</sup>

- 공무원 : 공무원법상 공무원, 계약직원, 통신·우편 공기업 직원 등
- 교직원 : 전일제 교사, 공립학교 체육 코치, 공공연구기관 직원 등
- 군 인 : 징집병사를 제외한 모든 군인

### 인원 현황 ('20년 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공무원	교직원	군 인	합 계
재직자(A)	308,000	184,000	180,000	672,000
연금수급자(B)	163,000	130,000	70,000	363,000
부양률(B/A)	52.9%	70.7%	38.9%	54.0%

## ■ 재원조달

### 재정방식 부분적립방식

### 비용부담 기여제(Contributory)로 공무원, 정부의 비용분담 체제

- 보험료 결정 :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해 12~18% 범위 내에서 공표

연 도	2020	2021	2022	2023
보험료율	12%	13%	14%	15%

- 보험료 산정 : 정부 65%, 개인 35%의 비율로 분담

구 분	산 식
공무원	(호봉별 기본급 × 2배) × 보험료율 × 35%
정 부	(호봉별 기본급 × 2배) × 보험료율 × 65%

**재정현황** 적립기금은 6,496억 대만\$(2020년 말 기준)이고 공무원연금 총당부채의 25% 수준 적립되어 있으며, 이는 제도 미성숙에 기인  
(‘95년 제도 도입 / 적립률 : 교직원 15%, 군인 11%)<sup>76)</sup>

75) Public Service Pension Fund(2021), Public Service Pension Fund Annual Report 2020.

76) Public Service Pension Fund(2021), Public Service Pension Fund Annual Report 2020.

(단위 : 1억 대만\$)

기간	수입 및 지출	공무원	교직원	군인	합계
2020 회계연도 (연간)*	보험료 수입	365	308	213	886
	급여 지출	452	375	112	939
	지출/수입 비율	123.8%	121.8%	52.6%	106.0%
2020년 말 (누적)	보험료 수입	5916	4,608	2165	12,689
	급여 지출	3988	3615	1933	9,536
	지출/수입 비율	67.4%	78.5%	89.3%	75.2%

\* 연간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나 적립기금에서 부족금액 사용 중

## ■ 수급요건

**퇴직급여**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 시 지급개시연령에 연금 수급

재직기간	수급요건
15년 미만	퇴직일시금만 수급 가능(퇴직연금 선택 불가)
15년 이상	55세 *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인상 (2021년) 60세 → (2026년) 65세

**유족급여**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구분	수급요건
배우자	공무원과 법률상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경우 (장애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연령 무관) * 재혼 시 수급권 소멸
자녀	① 미성년 자녀, 또는 ②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성인 자녀
부모	별도 요건 없음

\* 유족의 월평균 소득이 법정 기본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장해급여**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 퇴직급여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

## 급여지급액

### 퇴직급여

구분	급여액
퇴직연금	최종8년* 평균연금보수** × 2% × 35년까지 재직기간 + 최종8년 평균연금보수 × 1% × 35년 초과 재직기간(최대 재직기간 40년) * 35년 재직 시 소득대체율 70%, 40년 재직 시 소득대체율 75%
퇴직일시금	최종연금보수 × 1.5 × 35년까지 재직기간 + 최종연금보수 × 1 × 35년 초과 재직기간(최대 재직기간 42년)

\* '최종 8년'은 '22년 기준으로, '29년 최종 15년 평균 연금보수 적용을 목표로 1년씩 상향 중

\*\* '연금보수'는 기본급의 2배로 설정되고, 실제 소득의 110 ~ 130% 수준임

- (조기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1년당 4%씩 감액되는 조기퇴직연금 수령 가능,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 (총 20% 감액)

### 유족급여

구분	급여액
배우자·자녀·부모	퇴직연금액의 50% (유족간 균등 분할 지급)

### 장해연금

재직기간	급여액
5년 미만	재직기간 5년 기준으로 퇴직일시금 지급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2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지급

\* 위험 공무 수행 중 질병·부상으로 장해가 된 경우 장해보상 가산금 추가 지급

## 관리운영기관

**관리 및 기금운용** 공무원연금기금관리위원회

PSPFMB (Public Service Pension Funds Management Board)

**기금운용 감독·평가** 공무원연금기금감독위원회

PSPFSB (Public Service Pension Funds Supervisory Board)



## 개혁동향

### ■ 주요 개혁

#### 2017년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모수개혁<sup>77)</sup>

- (배경) '16년 공적연금 미적립 연금충당부채가 정부예산의 9배에 달함  
 \* 기금소진 예상시점 : (군인) 2020년, (민간) 2027년, (공립교사) 2030년, (공무원) 2031년
- (지급개시연령 인상) 55세 → '21년 60세 → '26년 65세로 인상  
 \*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지급개시연령에 변동 없음
- (연금산정 기준소득) 최종 → 최종 5년 → '29년 최종 15년 평균보수
- (정부 보조금 삭감)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공무원·교직원보험 일시금에 대한 저축예금 우대금리 삭감

기간	~ 2018. 6. 30.	2018. 7. 1. ~ 2020. 12. 31.	2021. 1. 1. ~
우대금리	18%	9%	0%

77) [www.benefitscanada.com/news/bencan/do-taiwans-cuts-to-public-sector-pensions-offer-lessons-for-canada](http://www.benefitscanada.com/news/bencan/do-taiwans-cuts-to-public-sector-pensions-offer-lessons-for-canada)



# III

---

## 주제별 운영현황

---

# 1 재정안정화 기여금

## 1)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

- 2003년 연금개혁(최종보수 → 18년 평균보수)으로 재직자의 연금액이 낮아져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 징수

퇴직시점(년)	~ 2003	2004	2005	2006	...	2018	2019
기여율(%)	3.30	3.04	2.92	2.79	...	1.26	1.13

## 2) 그리스 (모든 연금)<sup>78)</sup>

- 2008년 국가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2010년부터 연금액에 따라 3~14% 수준의 연대기여금 (Pensioner's Solidarity Contribution) 징수

연금액 (유로)	1,400이하	1,400초과 1,700이하	1,700초과 2,000미만	2,000초과 2,300미만	2,300초과 2,600미만	2,600초과 2,900미만	2,900초과 3,200미만	3,200초과 3,500미만	3,500초과
기여율(%)	0	3	6	7	9	10	12	13	14

## 3) 포르투갈 (모든 연금)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국가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2011년부터 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연대기여금(CES) 도입
- 2016년 기준, 월 €4,611.42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적용<sup>79)</sup>
  - 산정방식 : 연금액 €4,611.42 ~ €7,126.74의 7.5% + €7,126.74 초과 연금액의 20%
  - ※ 2013년 공무원연금수급자(월 연금 600유로 이상) 연금 최대 10% 감액 추진한 바 있으나, 위헌 결정<sup>80)</sup>으로 미실현

78) National Actuarial Authority of Greece : [www.eaa.gr](http://www.eaa.gr), Greek Pension System Fiche, European Commission Economy Policy Committee Ageing Working Group Ageing Projections Exercise 2021 p.59

79) OECD(2017) Pension at a Glance 2017 : Country Profiles-Portugal

80) 주포르투갈대한민국대사관 경제동향 및 정보 「포르투갈 공무원연금 삭감 법안 위헌판결」 [overseas.mofa.go.kr/pt-ko/](http://overseas.mofa.go.kr/pt-ko/)

#### 4) 벨기에 (모든 연금)

- 1994년부터 고액연금수급자\* 연금액의 0.5 ~ 2.0% 연대기여금 부과

\* 2018년 기준, 월 €2,311.96(단독) 또는 €2,672.91(부부) 초과 시<sup>81)</sup>

#### 5) 프랑스 (모든 연금)

- 연금수급자에게도 일반적 사회보장기여금 등 부과

과세소득 (‘22년 기준)	연금수급자에게 부과되는 기여금		
	CSG (일반사회보장기여금)	CRDS (사회부채상환금)	CASA (추가연대기여금)
€11,431 이하	-	-	-
€11,432 ~ €14,944	3.8%	0.5%	-
€14,945 ~ €23,192	6.6%	0.5%	0.3%
€23,193 초과	8.3%	0.5%	0.3%

**CSG** 기존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사회보장자금 조달의 부담을 다양화하기 위해 연금 및 투자소득에도 일반사회보장기여금 부과

\* '91년 도입, 소득에 따라 기여율 차등 적용(투자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CRDS** 사회보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부채 상환을 위한 기여금으로 연금소득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득에 부과

\* '96~'09년까지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10년 법 개정으로 '25년까지 연장

**CASA** 자율적 활동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의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수급자에게만 부과하는 기여금

\* 고액 연금수급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제한적 부과 ('13년 도입)

81) Anne-Lore Fraikin et al(2018) Social Security Incentives in Belgium: An Analysis of Four Decades of Change p.12

## 6) 독일 (공무원연금)

### ● 1998년 위험준비금적립제도 개혁

- '10년대 말부터의 퇴직자 급증 대비 정부 재정부담 경감 차원
- 공무원, 연금수급자 부담에 기초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 '99~'17년까지\* 매년 0.2% 누적 형태로 공무원보수와 연금인상을 억제하여 마련한 금액을 위험준비금으로 전입시키고, 이를 공무원연금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예산에 대한 재정압박 완화
- ※ '99~'17년까지 기금적립, '18~'31년 기금운용, '32년부터 15년 간 총당 예정

### ● 2007년 특별기금 '연방 연금기금' 설립으로 완전적립제도로의 이행

- 고령화에 따른 장기 정부 재정부담 완화 차원
- 소관부처 표준보험료 부담의 '공무원연금기금' 설치 후 적립방식 도입
- 재정방식 이행에 따른 이중부담 피하기 위해 연금제도 분리·운영

#### < 재정안정화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비교 >

구 분	재정안정화기금 (공무원연금 지급준비금)	공무원연금기금
도 입	1998. 7. 9. 공무원연금지급준비금법 제정	2006. 12. 21. 공무원연금이체시행령 제정 (공무원연금 지급준비금법 개정 및 추가규정)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즉 베이비부머 세대와 '60 ~ '70년대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 시기의 정부 지출 압박 완화</li> <li>- 공무원연금 지출자금 확보 필요성 인지</li> </ul> <p>독일공무원노동조합(DBB)은 독립된 공무원연금제도 유지를 전제로 부분적립방식의 지급준비금 적립에 찬성</p>	<p>지급준비금만으로는 미래재정 압박을 감내하기 어려움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 인지</p>
목 적	연금지출에서 발생하는 (예산)부담을 제한된 기간 동안 완화, 공무원연금 지출 보장	공무원의 연금지출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급 (현 예산으로 전액 지급 중)
대 상	1999 ~ 2017년 전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한시적)	2007. 1. 1. 이후 신규임용 된 공무원, 판사, 직업 군인의 공무원연금 지출 (부조비용, 지원금 포함) 조달 (시행법 제 14조)
형 태	부분적립형태	완전적립형태



구 성	A. '99~'02년, '11~'17년 :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연금수급자 연금인상률 0.2% 삭감 * 연금액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 → 보수인상률 및 연금인상률 각 2.2%* 감소 * 총 11개년 × 0.2% + B. '03~'10년 : 연금지급률을 8단계에 걸쳐 하향조정하여 조성된 금액의 1/2 * 연금지급률 75% → 71.75%로 총 4.33%* 연금 삭감 효과 발생 * (100% - 71.75% ÷ 75%) ÷ 8년 = 연 0.54%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기여하는 금액* + 이자수익  * 보험수리에 기초하여 각각 퇴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보수 x 기여율**  ** 시행령 제1조 제1항 (2012년 1월) - 고위직 공무원 : 36.9% - 상급직 공무원 : 29.3% - 중하위직 공무원 : 27.9% - 직업 군인 : 36.9% * 2025년 1월 검토 예정							
	- 연도별 적용기준 <table><tr><th>적용연도</th><th>적용기준</th></tr><tr><td>1999년 ~ 2002년</td><td>A</td></tr><tr><td>2003년 ~ 2010년</td><td>B</td></tr><tr><td>2011년 ~ 2017년</td><td>A</td></tr></table>	적용연도	적용기준	1999년 ~ 2002년	A	2003년 ~ 2010년	B	2011년 ~ 2017년	A
적용연도	적용기준								
1999년 ~ 2002년	A								
2003년 ~ 2010년	B								
2011년 ~ 2017년	A								
관 리 및 운 용	연방내무부 관리로 운용지침, 감독권 행사 (법 제 5조)  법 제5조 (재원의 관리, 투입) ① 1. 연방내무부는 특별기금을 관리한다. 2. 특별기금의 기금 관리는 독일 연방은행에 위임된다. 기금 관리에 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② 1. 보험감독법 제217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법령에 따라 투자원칙에 따른 담보, 유동성 및 수익금 유입은 보통 국공채에 투자된다. 2. 주식은 특별자산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시장가격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연방내무부가 재무부와 협조하여 보험수리 계산에 기초, 공무원보수법과 공무원연금법 변경을 고려하여 기여율의 적절성을 최소 3년 마다 검토하되, 필요 시 변경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3조 할당 비율의 수준) 기여율은 연방내무부가 재무부와 함께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등급과 수급권 변경에 대한) 보험수리 계산에 기초하여 그 수준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기 금 규 모	약 9억 6,269만 유로 (1999 ~ 2018년) - 시장가치 : 약 190억 유로 ('19년 말 기준) - 주식 : 21.4% - 연평균 수익률 : 6.1%	약 4억 3,398만 유로 (2007~2018년) - 시장가치 : 약 96억 유로 ('19년 말 기준) - 주식 : 20.1% - 연평균 수익률 : 5.2%							
사 용	퇴직자 급증으로 연금수급자 수가 2035~2040년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32년부터 15년간 공무원연금지급에 총당되며 연방예산 경감 예정	2007년부터 신규 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 법관, 직업군인 연금에 지급 ('30년 이후 사용)							
의 의		- 공무원에 대한 비용 투명성 - 현재대 공무원 비용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 추구 - 완전적립방식에서의 전환 계기 마련							
근거 법령 <sup>82)</sup>	공무원연금지급준비법	공무원연금기금이체시행령 (VFZV)							

82) 공무원연금적립금법(Versorgungsruecklagegesetz), 공무원연금기금이체시행령 VFZV

## 2

## 연금조정

### 연금동결

#### 1) 미국 : 연금액 조정시기 변경(연금인상 지연) 및 연금동결<sup>83)</sup>

**OSADI/CSRS\*** 연금액 조정시기가 1984년 이전까지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매년 12월로 변경, 인상 지연 효과 ('83년 4월 → '84년 12월)

\* OASDI (미국 사회보장연금;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CSRS (미국 연방공무원 구 연금제도;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 '65 - '84년 CSRS 연금조정시기 및 조정률 ]

연 도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조정월	12월	1월	5월	3월	11월	8월	6월	7월	7월	1월	7월	1월	8월
조정률(%)	6.1	3.9	3.9	3.9	5.0	5.6	4.5	4.8	6.1	5.5	6.3	7.3	5.1
연 도	'76	'77		'78		'79		'80		'81	'82	'83	'84
조정월	3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3월	4월	12월
조정률(%)	5.4	4.8	4.3	2.4	4.9	3.9	6.9	6.0	7.7	4.4	8.7	3.9	3.5

**CSRS** 재정악화로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에 따라 연금액 미조정 ('85년 12월)

**CSRS** '93년 예산조정법으로 연금액 조정시기 변경 (~ '96년, 3년 간 12 → 3월)

[ '85 - '19년 CSRS 연금조정시기 및 조정률 ]

연 도	'85	'86	'87	'88	'89	'90	'91	'92	'94	'95	'96	
조정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3월	3월	3월	12월
조정률(%)	0.0	1.3	4.2	4.0	4.7	5.4	3.7	3.0	2.6	2.8	2.6	2.9
연 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조정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조정률(%)	2.1	1.3	2.4	3.5	2.6	1.4	2.1	2.7	4.1	3.3	2.3	5.8
연 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조정월	12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조정률(%)	0.0.	0.0	3.6	1.7	1.5	1.7	0.0	0.3	2.0	2.8	1.6	1.3

**OPERS\*** 오하이오주 공무원연금 재정악화로 2년간 ('22 ~ '23년) 연금동결 예정<sup>84)</sup>

\* OPERS : Ohio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2) 프랑스 : 연금액 조정시기 변경 (연금인상 지연, 공무원연금 포함 모든 연금)<sup>85)</sup>

- 2013년 개혁 시 연금 조정시기를 매년 4월에서 10월로 변경
-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2014년 이후 3차례 연금조정을 하지 않고, 2019년부터 연금 조정시기를 10월에서 1월로 변경
  - \* 예) 2020회계년도 사회보장기금법 : 2020년 재평가는 2,000유로 기준 차등 적용
  - 2018회계년도 사회보장기금법 : 다음 재평가는 2019. 1. 1. 시행 등 (매년 개정)
- 2020년 연금조정은 과거 연금동결로 발생한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연금액에 따라 조정률 차등 적용

조정시기	'13. 4.	'14. 4.	'15. 10.	'16. 1.	'17. 10.	'18. 10.	'19. 1.	'20. 1.		'21. 1.	'22. 1.
조정률	1.3%	-	0.1%	-	0.8%	-	0.3%	2,000€ 이하	1%	0.4%	1.1%
								2,000€ 초과	0.3%		

## 3) 영국 : 특정 국가 거주하는 국가연금 수급자는 연금동결<sup>86)</sup>

- 영국과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의 국가연금(State Pension) 동결 (단, EU·미국 등 협정체결 국가 거주 시 미적용)
  - \* 미체결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거주하는 동안 연금동결)
- 동결 대상자(약 51만명, '19년 4월) 중 약 84%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거주

## 4) 기타 EU 국가 : 사회보장연금 한시적 동결 ('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 라트비아 ('09 ~ '12년), 그리스 ('10 ~ '15년), 크로아티아 ('10 ~ '11년), 루마니아 ('11 ~ '13년), 슬로베니아('12년), 키프로스 ('13 ~ '16년) 등 동결 시행

83) [crsreports.congress.gov](https://crsreports.congress.gov),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st-of-Living Adjustments for Federal Civil Service Annuities」, Updated October 14, 2020

84) [www.pionline.com/node/891986](http://www.pionline.com/node/891986) 「Ohio Public Employees plans to freeze COLA for 2 years」, September 20, 2019

85) [retraitedeletat.gouv.fr/retraite/le-revalorisationpaiement-de-ma-retraite/la-revalorisation](https://retraitedeletat.gouv.fr/retraite/le-revalorisationpaiement-de-ma-retraite/la-revalorisation)

86) Djuna Thurley and Rod McInnes(2019) Frozen overseas pensions

## 연금조정 : 인구·경제변수 등을 연금액 조정률에 반영하여 재정 절감

구 분		일본 (후생연금)	독일 (법정연금보험)	미국 (연방공무원)	스웨덴 (국민연금)
연금인상방식		물가연동	보수연동	물가연동	보수연동 (3년평균)
조정변수		가입자수, 기대여명	보험료, 부양률	정책조정 (CPI 3%이상시)	기대여명, 경제성장률
적용 방식	소득 재평가 (퇴직전)	보수인상률 - 조정률(0.9%)	물가상승률 (조정변수 없음)	재평가 없음 (최고3년평균) *FERS제도	DC방식 연금산정 (재평가된 보험료총액 / 기대여명)
	연금인상 (퇴직후)	물가상승률 - 조정률(0.9%)	보수상승률 × 조정변수	물가상승률 - 1% (단, CPI > 3%)	보수상승률(3년평균) - 잠재경제성장률(1.6%)

### 1) 일본 (2004년 재정재계산 시 연금액 조정방식에 조정률 도입)

- 물가 또는 임금변동률에 의해서만 조정되던 연금액을 공적연금 가입자 수의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를 고려하여 일부 완화

- 연금액 조정방식 : 소비자물가상승률(또는 임금상승률) - 조정률
- 조정률 = 공적연금 가입자 수 감소율 + 평균기대여명 증가율
  - \* 개정 당시 향후 20년에 걸쳐 적용하기로 하였고, 평균 조정률은 0.9% 수준 예상 (공적연금 전체 가입자 수 감소율 0.6% + 평균기대여명 증가율 0.3%)

- 디플레이션 등으로 실제 적용되지 않다가, 2015년부터 본격 적용 (실제 거시경제조정을 적용된 경우는 2015년, 2019년, 2020년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물가변동률	2.7	0.8	-0.1	0.5	1.0	0.5	0.0	i) 물가변동률 > 임금변동률 : 임금변동률 기준으로 거시경제 조정률 적용 (2015, 2019, 2020)
임금변동률	2.3	-0.2	-1.1	-0.4	0.6	0.3	-0.1	
공적연금피보험자수 변동률 (3년 평균)	-0.6	-0.4	-0.2	0.0	0.1	0.2	0.2	
기대여명상승률(고정)	-0.3							ii) 물가변동률 > 0 > 임금변동률 : 연금액 조정하지 않음 (2016, 2018)
거시경제조정률	-0.9	-0.7	-0.5	-0.3	-0.2	-0.1	-0.1	iii) 0 > 물가변동률 > 임금변동률 : 거시경제조정률 적용하지 않고 물가변동률만 적용 (2017)
거시경제 미조정분(누계)	-0.5	-	-	-0.3	-0.3	-	-0.1	
연금조정률	0.9	0.0	-0.1	0.0	0.1	0.2	-0.1	

\* 거시경제 미조정분 : 시행 이후 유예기간에 적용하지 않았던 조정률을 향후에 나눠 적용

## 2) 미국 (FERS의 생계비 조정은 62세 이후 적용)

- 물가인상률이 2%를 초과하면 물가인상률 중 일부만 반영<sup>87)</sup>

CSRS (舊연방공무원연금)	FERS (新연방공무원연금)		
소비자물가인상률 (CPI)	CPI ≤ 2%	2% ≤ CPI ≤ 3%	CPI > 3%
	CPI	2%	CPI - 1%

## 3) 독일 (2001년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2001년** 보험료 변동률 반영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조정을 하락)

**2004년** 지속성 계수 추가 도입 (부양률이 높아지면 조정을 하락)

$$AR_t = AR_{t-1} \times \frac{BE_{t-1}}{BE_{t-2}} \times \frac{100\% - RVB_{t-1} - AVA_{t-1}}{100\% - RVB_{t-2} - AVA_{t-2}} \times \left[ \left( 1 - \frac{RQ_{t-1}}{RQ_{t-2}} \right) \times \alpha + 1 \right]$$

$AR_t$ : t년도의 실질연금가치  
 $BE_{t-1}$ : (t-1)년도의 가입자 평균총임금  
 $RVB_{t-1}$ : (t-1)년도 법정연금보험료율  
 $AVA_{t-1}$ : (t-1)년도 Riester연금 보험료율  
 $RQ_{t-1}$ : (t-1)년도 가입자 수에 대한 연금수급자 비율(부양률)  
 $\alpha$ : 보험료 인상억제 목표달성을 위한 상수(0.25)

## 4) 스웨덴 (2001년 연금재정 상태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 연금부채와 '보험료수입 + 적립기금 합계'를 비교한 지수를 활용
- 소득연금의 총 자산과 총 연금부채의 비율인 균형비[(보험료 수입(자산)+적립기금)/연금부채]를 활용하며, 연금부채가 자산보다 커져서 1이하로 낮아지면 소득연금제도의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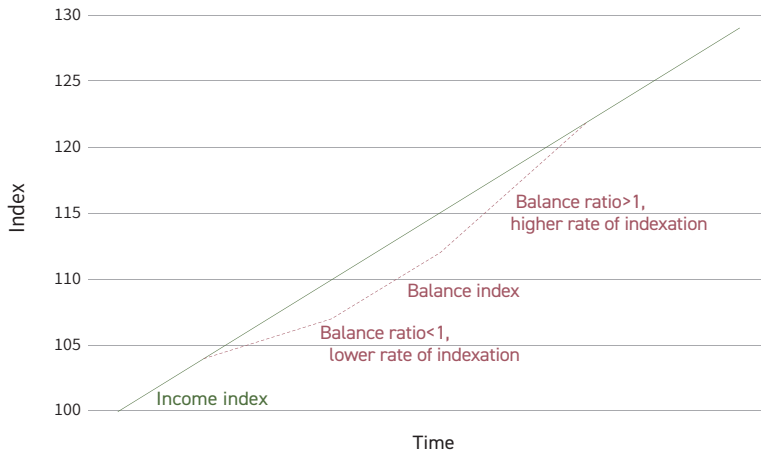
\* 자동적으로 1 이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기수급 중인 연금은 수지균형연동 (Balance Indexation) 방식에 따라 금액이 조정

\*\* 자동조정장치가 작동되면 소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하지만, 그 결과로 소득연금제도의 재정이 회복되어 비율이 1 이상으로 높아지면 소득대체율도 다시 상승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균형비율이 연금개혁 이후 최초로 1 미만을 기록하였는데, 2008년의 균형 비율은 2009년에 정부가 승인한 후 2010년 1월부터 적용되었고, 이와 같은 자동조정장치의 작동으로 2018년 이후에는 1 을 회복

8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st-of-Living Adjustments for Federal Civil Service Annuities,' Updated October 14, 2020

## 균형비 이용 연금액 자동조정 방식



- 연금수급대상자가 연금을 최초로 받은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연금급여가 매년 소득연동방식 (소득지수:INCOME INDEX)을 적용받아 상향조정되나,

→ 연금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균형비(BALANCE RATIO)가 1보다 작아지면 장기적인 균형을 회복(재정 안정화)하기 위하여 소득지수 대신 균형지수를 사용하는 자동조정장치 작동

ex) 소득지수가 100에서 104로 상승하고, 균형비가 0.99를 기록한 경우,

변환균형비\*는 산식에 따라  $0.9967 = (0.99 - 1) \div 3 + 1$ 이 됨 그 결과 균형지수는  $103.66 = 104 \times 0.9967$ 이 되고, 다음 연도의 연금수지계정은 소득지수 상승률 4%가 아닌 균형지수 3.66%에 따라 연동됨

$$B_t = I_t \cdot BT_t^*$$

$$B_{t+1} = B_t \cdot \left( \frac{I_{t+1}}{I_t} \right) \cdot BT_{t+1}^* = I_{t+1} \cdot BT_t^* \cdot BT_{t+1}^*$$

$B_t$      $t$  연도의 균형지수 [= 소득지수  $\times$  변환균형비]  
 $I_t$      $t$  연도의 소득지수  
 $BT_t^*$      $t$  연도의 변환균형비 [\* 변환균형비 = (균형비-1)  $\div$  3+1]

※ 균형비 변동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균형비	1.0000	0.9826	0.9383	0.9406	0.9592	0.9436	0.9474	0.9829	0.9894	1.0000	1.0000	1.0000



## 3

## 지급개시연령

## 1) 네덜란드 (기초연금, AOW)

- 지급개시연령 연장 여부를 개인특성이 아닌 기대수명과 연계
- 개시연령 적용은 가입·퇴직연도가 아닌 생년월일 기준으로 결정

연도	주요 내용										
2012	기존 지급개시연령 연장 : 65세 → 66세(2019년) → 67세(2023년)										
	생년월일	'47. 01. 01 '48. 11. 30	'48. 12. 01 '49. 10. 31	'49. 11. 01 '50. 09. 30	'50. 10. 01 '51. 07. 31	'51. 08. 01 '52. 05. 31	'52. 06. 01 '53. 03. 31	'53. 04. 01 '53. 12. 31	'54. 01. 01 '54. 09. 30	'55. 07. 01 '55. 06. 30	'56. 04. 01 '56. 12. 31
	개시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개시연령	65세 1개월	65세 2개월	65세 3개월	65세 5개월	65세 7개월	65세 9개월	66세	66세 3개월	66세 6개월	66세 9개월
2015	지급개시연령 연장 가속화 : 66세 (2018년) → 67세 (2021년) - 기대수명 1년 증가 시 지급개시연령 1년 증가 (1:1 연동)										
	생년월일	'49.11.01 '50.09.30	'50.10.01 '51.06.30	'51.07.01 '52.03.31	'52.04.01 '52.12.31	'53.01.01 '53.08.31	'53.08.31 '54.04.30	'54.04.30 '54.12.31	'55.01.01 '55.09.30	'55.10.01 '56.09.30	'56.10.01 '57.09.30
	개시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개시연령	65세 3개월	65세 6개월	65세 9개월	66세	66세 4개월	66세 8개월	67세	67세 3개월	67세 3개월	67세 3개월
2019	지급개시연령 동결 및 속도 완화 : 66년 4개월 (~2021년) → 67세 (2024년) - 기대수명 증가 대비 67% (8:12) 수준으로 연동 - 통계청 발표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 향후 5년에 대한 지급개시연령 공표										
	생년월일	'53. 01. 01 '53. 08. 31	'53. 09. 01 '54. 08. 31	'54. 09. 01 '55. 08. 31	'55. 9. 1 '56. 5. 31	'56. 06. 01 '57. 02. 28	'57. 03. 01 '57. 12. 31	'57. 12. 31 '60. 12. 31	'57. 12. 31 '60. 12. 31	'61. 01. 01 ~	'61. 01. 01 ~
	개시연도	'19	'20	'21	'22	'23	'24	'25 ~ '27	'25 ~ '27	'28 ~	'28 ~
	개시연령	66세 4개월	66세 4개월	66세 4개월	66세 7개월	66세 10개월	67세	67세	67세	기대수명 연동	기대수명 연동
* 2015년 개혁의 지급개시연령 연장 스케줄이 지나치게 빠르고, 육체노동 근로자 및 교육수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65세 기대여명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으로 인해 개혁 속도 조정											

## 2) 미국 (공무원연금, CSRS/FERS)

- '86년 개혁으로 30년 이상 재직자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
- 단,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을 차등 적용하여 장기재직자 우대

재직기간	舊연방공무원연금(CSRS) (1983년 이전 임용자)	新연방공무원연금(FERS) (1984년 이후 임용자)
5년 이상	62세	좌동
20년 이상	60세	좌동
30년 이상	55세	55세~57세

출생년도	1947이전	1948	1949	1950	1951	1952	
개시연령	55세	55세 2월	55세 4월	55세 6월	55세 8월	55세 10월	
출생년도	1953-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이후
개시연령	56세	56세 2월	56세 4월	56세 6월	56세 8월	56세 10월	57세

## 3) 영국 (공무원연금)

- 수차례 개혁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별도의 플랜 적용을 통해 운영

※ 2007년 이전 임용자(classic, premium : 60세), 이후 임용자(nuvos : 65세), 2015년 이후 임용자(alpha : 65세에서 단계적 연장)

구분(도입)	classic(1972)	premium(2002)	nuvos(2007)	alpha(2015)
가입대상	'02. 9. 30. 이전 재직자	'02. 10. 1. 이후 임용자	'07. 7. 31. 이후 임용자	'15.4.1. 이후 임용자 및 07.7.31. 이후 임용자 중 선택자
연금지급 개시연령	60세	60세	65세	신국가연금 지급개시연령* 또는 65세 중 높은 연령

\* 신국가연금 지급개시 연령 65세 → 66세('20년) → 67세('28년) → 68세('39년)

## 4) 일본 (후생연금, 공제연금)

- '86년 연금개혁 시 지급개시연령 65세로 상향조정했으나 시행시기를 유예(60세지급) 해오다가 실제로는 '13년부터 3년에 1세씩 상향<sup>88)</sup>

적용연도	~ 2013	2013~15	2016~18	2019~21	2022~24	2025 ~
개시연령	60세 (~ 53년생)	61세 (53 ~ 55년생)	62세 (55 ~ 57년생)	63세 (57 ~ 59년생)	64세 (59 ~ 61년생)	65세 (61년생 ~)

88) 厚生労働省(2021) 年金制度のポイント 令和3年度 p.19

## [참고] 일반직 vs. 현장직 공무원 지급개시연령 등

미국	제도	연방공무원연금법(FERS)			
	구분	일반직		특수직 (경찰, 소방, 관제사 등)	
	지급개시연령	5년 이상 : 62세 20년 이상 : 60세 30년 이상 : 55~57세		20년 근무시 50세 ※ 25년 근무시 즉시 개시	
	개인 기여율	0.8~4.4%		1.3~4.9%	
영국	제도	국가공무원연금 (PCSPS)	교직원연금 (TPS)	경찰공무원연금 (PPS)	소방공무원연금 (FPS)
	구분	일반직	교육직	경찰직	소방직
	지급개시연령	신국가연금 개시연령과 65세 중 더 낮은 연령 ※ 68세까지 상향조정 중		60세	60세
	개인 기여율	4.6 ~ 8.05%	7.4 ~ 11.7%	12.44 ~ 13.78%	11 ~ 14.5%
프랑스	제도	지방공무원연금(CNRACL)			
	구분	사무직 공무원		현장직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지급개시연령	62세 (1955년생~)		57세 (1960년생~)	
	개인 기여율	11.10% (동일)			
독일	제도	연방 공무원연금(BV)			
	구분	공무원, 판사		연방 경찰, 소방	
	지급개시연령	65 → 67세까지 상향조정 중 ※ 헌법재판소 판사 : 68세		60 → 62세까지 상향조정 중	
	개인 기여율	없음 (정부 전액 부담)			
일본	제도	국민연금		후생연금	
	가입대상	20 ~ 60세 미만 전 국민		70세 미만의 직장인	
	지급개시연령	65세 (남성 2025년, 여성 2030년)			

## 4 연금정지

###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도입한 국가는 조사되지 않음)

#### <공무원연금>

##### 1) 영국 (공무원연금, CSP : Civil Service Pension scheme)

-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 후 보수와 연금액의 합계가 퇴직 전 보수의 현가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을 지급정지

#### < 연금감액 (Abatement) 적용 예시 (연 기준) >

퇴직 전 보수 <sup>1)</sup>	$\times$ $\frac{\text{현가요율}^{2)}{(1+CPI)^n}}{=}$ $\text{현가(A)}$	재임용보수+연금액(B) =합계(C)	감액대상 연금액 (D=C-A)	연금지급액 (B-D)
£40,000	$\times 1.05^3 =$ £46,305	£30,000 + £20,000 = £50,000	£3,695	£16,305

1) 재직 중 가장 보수가 높은 때 연봉을 기준으로 함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연봉)

2) 퇴직 후 3년 뒤 재임용되었고 매년 5% 물가변동률 가정

-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부문 또는 75세 이상 취직 시 지급정지 비대상

##### 2) 캐나다 (공무원연금, PSPP : Public Service Pension Plan)

- 공무원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민간 부문 취직 시 지급정지 비대상
-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전액정지

##### 3) 미국 (공무원연금, FERS :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민간 부문 취직 시 지급정지 비대상
- 공무원 재임용 시 연금액만큼 공무원 급여 감액, 사실상 전액정지와 동일 효과

## &lt;공무원연금 이외 연금&gt;

## 4) 일본 (후생연금) \* 정지상한 규정은 없음

연령	정지 기준		
60세 이상~ 65세 미만	연금 근로소득	28만엔 이하	28만엔 초과
	47만엔 이하	$(\text{근로소득} + \text{연금} - 28\text{만엔}) / 2$	근로소득 / 2
	47만엔 초과	$(47\text{만엔} + \text{연금} - 28\text{만엔}) / 2 + \text{근로소득} - 47\text{만엔}$	$47\text{만엔} / 2 + \text{근로소득} - 47\text{만엔}$
65세 이상	연금+근로소득	정지금액	
	47만엔 이하	정지하지 않음	
	47만엔 초과	$(\text{연금} + \text{근로소득} - 47\text{만엔}) / 2$	

5) 미국 (사회보장연금, OASDI)<sup>89)</sup>

연령	정지 기준	정지금액
66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li> <li>심사기준 : 하위 기준소득 ('21년, \$18,960 초과시)</li> </ul>	초과소득의 1/2
66세 이상 ~ 67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li> <li>심사기준 : 상위 기준소득 ('21년, \$50,520 초과시)</li> </ul>	초과소득의 1/3
67세 이상	정지하지 않음	

6) 호주 (기초연금, Age Pension)<sup>90)</sup>

-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연령(66~67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정지 적용

가구원	정지 기준	정지금액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주간 소득 180달러('21년 기준) 초과 시</li> </ul>	초과소득의 1/2
2인(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주간 소득 320달러('21년 기준) 초과 시</li> </ul>	초과소득의 1/2

8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cial Security Retirement Earnings Test: How Earnings Affect Benefits」, Updated February 9, 2021

90) [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topics/income-test-pensions/30406](http://www.servicesaustralia.gov.au/individuals/topics/income-test-pensions/30406)

## 분할·유족연금 지급정지

### 1) 미국 (사회보장연금, OASDI)

-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도 일반 퇴직연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정지 적용

연령	정지 기준	정지금액
66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li> <li>심사기준 : 하위 기준소득 ('21년, \$18,960 초과시)</li> </ul>	초과소득의 1/2
66세 이상~ 67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li> <li>심사기준 : 상위 기준소득 ('21년, \$50,520 초과시)</li> </ul>	초과소득의 1/3
67세 이상	정지하지 않음	

- 유족연금수급자가 60세 이전 재혼 시 유족연금 종결되나 60세 이후 재혼 시에는 종결되지 않음

### 2) 일본 (후생연금)

- 분할연금은 소득이력 분할방식으로 본인의 후생연금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퇴직연금과 동일한 정지기준 적용

연령	정지 기준		
60세 이상~ 65세 미만	연금 근로소득	28만엔 이하	28만엔 초과
	47만엔 이하	$(\text{근로소득} + \text{연금} - 28\text{만엔}) / 2$	근로소득 / 2
	47만엔 초과	$(47\text{만엔} + \text{연금} - 28\text{만엔}) / 2 + \text{근로소득} - 47\text{만엔}$	$47\text{만엔} / 2 + \text{근로소득} - 47\text{만엔}$
65세 이상	연금+근로소득	정지금액	
	47만엔 이하	정지하지 않음	
	47만엔 초과	$(\text{연금} + \text{근로소득} - 47\text{만엔}) / 2$	

- 유족연금은 망인의 부양에 의한 "생계유지" 요건\* 충족 시 지급

\* 배우자 수입이 연 850만엔(소득이 연 655.5만엔) 초과 시 독립적 생계유지로 보아 유족연금 미지급<sup>91)</sup>

- 유족연금 수급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정지하지 않음

\* 단, 본인의 노령후생연금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조정 적용(p.149 참고)

- 재혼 시 유족연금은 종결되나 분할연금은 지속 지급

91) [www.kkr.or.jp/nenkin/q\\_and\\_a/jukyu/shikumi/izoku/faq\\_0064.html](http://www.kkr.or.jp/nenkin/q_and_a/jukyu/shikumi/izoku/faq_0064.html)



## [참고] 일본 후생연금 중복급여 조정(노령연금+유족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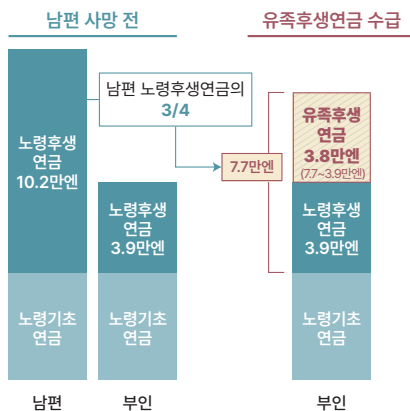
## □ 조정 기준

- 노령후생연금수급권자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후생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1)과 (2)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지급  
(1)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후생연금의 3/4  
(2)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후생연금의 1/2 + 본인 노령후생연금의 1/2
- 산정된 연금액과 본인 노령후생연금의 차액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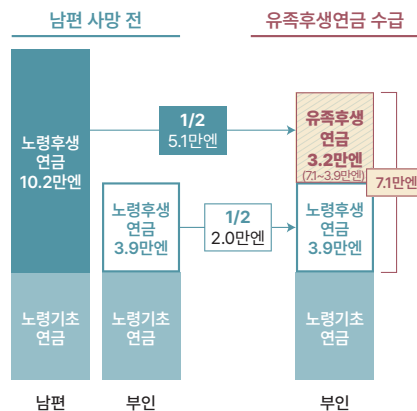
## □ 조정 사례 (유족후생연금 산정방법)

- 남편 노령후생연금 10.2만엔, 부인 노령후생연금 3.9만엔인 경우<sup>92)</sup>

(1)의 계산방법



(2)의 계산방법



- (1) 7.7만엔, (2) 7.1만엔으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본인의 노령후생연금을 공제한 3.8만엔이 유족후생연금으로 지급됨

- 본인의 노령후생연금액이 배우자의 노령후생연금보다 크게 높은 경우 유족후생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위 사례에서 부인이 사망 시 (1) 2.9만엔, (2) 7.1만엔이나 본인의 노령후생연금이 7.1만엔보다 크므로 유족후생연금은 없음

92) 厚生労働省(2021) 年金制度のポイント 令和3年度 p.25

## 5

## 현재가치화

### 1) 일본 (후생연금)

- 연금액 = 평균표준보수월액 × (9.5 ~ 7.125) / 1,000 × '03년3월 이전 가입기간 +  
평균표준보수월액<sup>93)</sup> × (7.308 ~ 5.481) / 1,000 × '03년 4월 이후 가입기간
- 개인의 평균표준보수(월)액 산정 시 연도별 연령별 재평가율 반영<sup>94)</sup>

소득기간	1929년 이전	1930년생	1931년생	1932년생	1933년~ 1934년생	1935년생	1936년생	1937년생	1938년~ 1952년생	1953년생 이후
'57.10~'58.3	13.986	14.127	14.429	14.504	14.504	15.564	14.668	14.789	14.803	14.803
'58.4~'59.3	13.685	13.822	14.121	14.191	14.191	14.249	14.353	14.470	14.483	14.483
'59.4~'60.4	13.495	13.629	13.923	13.994	13.994	14.053	14.154	14.268	14.284	14.284
'60.5~'61.3	11.161	11.273	11.514	11.574	11.574	11.620	11.704	11.802	11.813	11.813
'61.4~'62.3	10.319	10.423	10.646	10.701	10.701	10.745	10.824	10.910	10.923	10.923
...	...	...	...	...	...	...	...	...	...	...
'17.4~'18.3	0.953	0.953	0.953	0.953	0.953	0.953	0.953	0.953	0.951	0.951
'18.4~'19.3	0.943	0.943	0.943	0.943	0.943	0.943	0.943	0.943	0.941	0.941
'19.4~'20.3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6	0.936
'20.4~'21.3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6	0.936
'21.4~'22.3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8	0.936	0.936

- '90년대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재평가율 1보다 작은 구간(음영) 존재

### 2) 영국 (공무원연금)

- 매년 공무원 연간보수에 연금지급률을 곱하여 당해연도 연금액 산출 후 이 금액을 매년 재평가하여 퇴직 시 재평가된 연금액 합산
- 직종별 재평가율을 매년 고시<sup>95)</sup>

\* 일반 공무원, 지방 공무원 및 법원 공무원은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기타 직종은 보수변동률 고려한 개별적 재평가율 적용

<공무원연금 제도별 재직자 연금액 재평가율>

제도	일반공무원 (Civil Service)	지방공무원 (LGPS)	법원 (Judicial)	경찰 (Police)	소방 (Fire)	의료기관 (NHS)	교사 (Teacher)	군인 (Armed Forces)
2019	2.4%	2.4%	2.4%	3.65%	2.8%	3.9%	4.0%	2.8%
2020	1.7%	1.7%	1.7%	2.95%	4%	3.2%	3.3%	4%
2021	0.5%	0.5%	0.5%	1.75%	2.4%	2.0%	2.1%	2.4%

93) 표준보수액+표준상여액

94) [www.nenkin.go.jp/service/jukyu/kyotsu/henkingaku/20150401-01.html](http://www.nenkin.go.jp/service/jukyu/kyotsu/henkingaku/20150401-01.html)

95) [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statement/Commons/2020-02-25/HCWS123/](http://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statement/Commons/2020-02-25/HCWS123/), [hansard.parliament.uk/commons/2021-01-12/](http://hansard.parliament.uk/commons/2021-01-12/)

## 6

## 누진기여금

1) 영국 (공무원연금)<sup>96)</sup> :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율 부과

소득구간	개인기여율 (‘21. 4. ~ ‘22. 3.)	소득구간	정부부담률 (‘21. 4. ~ ‘22. 3.)
£0 ~ £22,600	4.60%	£0~£23,000	26.6%
£22,601 ~ £54,900	5.45%	£23,001~£45,500	27.1%
£54,901 ~ £150,000	7.35%	£45,501~£77,000	27.9%
£150,001 ~	8.05%	£77,001~	30.3%

## 2) 캐나다 (공무원연금) : 소득상한 초과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율 부과 하나, 해당부분에 지급률 (1.375% : 2%)도 높아 실질적 누진효과 없음

- 소득상한 (YMPE) 초과분에 대해 기여율 상향 조정

(2022년 기준<sup>97)</sup>)

소득구간	2012년 이전 임용자 기여율	2013년 이후 임용자 기여율
~\$64,900 (YMPE)	9.36%	7.95%
\$64,901 (YMPE)~	12.48%	11.82%

\* 2013년 이후 임용자는 지급개시연령이 연장(60→65세)되어 이전 임용자보다 급여가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율 설정

3) 홍콩 (공무원연금)<sup>98)</sup> : 장기재직자에 누진적 퇴직금 적용방식 (사용자 부담)

\* 개인 기여율 5% (누진제 없음), 고소득자 기준 아님

재직기간	정부부담률	재직기간	정부부담률
3년 미만	5%	24년 이상 30년 미만	20%
3년 이상 18년 미만	15%	30년 이상 35년 미만	22%
18년 이상 24년 미만	17%	35년 이상	25%

4) 미국 (OASDI) : 소득구간 높을수록 낮은 지급률 적용하는 소득재분배 방식<sup>99)</sup>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로서 저소득자에게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90% 상당 연금을 지급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금액 증가율 완화

소득구간	\$0 ~ \$996	\$996 ~ \$6,002	\$6,002 ~
지급률	90%	32%	15%

96) [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employers/employer-contribution-rates/](http://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employers/employer-contribution-rates/)97) [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public-service-pension-glance.html#toc3](http://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ension-plan/plan-information/public-service-pension-glance.html#toc3)98) [www.csb.gov.hk/english/admin/retirement/421.html](http://www.csb.gov.hk/english/admin/retirement/421.html)99) [www.ssa.gov/oact/cola/piaformula.html](http://www.ssa.gov/oact/cola/piaformula.html), <https://www.ssa.gov/oact/cola/bendpoints.html>

## 7

## 정부부담률

### 1) 미국 (공무원연금)

\* 2019년 회계연도 기준<sup>100)</sup>

구 분		CSRS	FERS
개인기여율	OASDI	미가입	6.2%
	CSRS/FERS	7.0%	0.8 ~ 4.4%
	TSP	임의가입	0 ~ 5%
정부부담률	OASDI	미가입	6.2%
	CSRS/FERS	16.5%	18.7%
	TSP	정부지원 無	0 ~ 5%

- CSRS (부분적립방식) : 공무원과 동일한 정부부담률(7%) 외 연금개혁 당시 미적립채무에 대한 이자부분 정부 추가부담
- FERS (완전적립방식) : 수지균형 이루는 표준보험료를 산정하여 공무원 부담부분 외 전액 정부 부담

### 2) 영국 (공무원연금)

- 개혁시기별 다른 제도인 Classic, Classic plus, Premium, Nuvo, Alpha 모두 정부 부담률이 개인기여율보다 높음 (소득구간별 비율 동일 적용)

소득구간	개인기여율 (‘21.4.~’22.3.)	소득구간	정부부담률 (‘21.4.~’22.3.)
£ 0 ~ £ 22,600	4.6%	£ 0 ~ £ 23,000	26.6%
£ 22,601 ~ £ 54,900	5.45%	£ 23,001 ~ £ 45,500	27.1%
£ 54,901 ~ £ 150,000	7.35%	£ 45,501 ~ £ 77,000	27.9%
£ 150,001 ~	8.05%	£ 77,001 ~	30.3%

※ 개인-정부 소득구간 차이 : 개인의 기여율 및 소득구간은 내각부(정부)와 공무원 대표(노조)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반면, 정부의 부담률은 보험계리사에 의해 결정

100) OPM(2021)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Annual Report, Fiscal Year Ended September 30, 2020

- 소속기관은 연금충당부채부담률(ASLC)\*에서 공무원 보험료 차감 후 부담하며, 징수한 금액이 당해 연도 연금지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 일반 예산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부담

\* ASLC(Accrued Superannuation Liability Charges) : 완전적립제도의 표준보험료와 명목미적립부채 분할상각 부담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자인 소속기관이 4년마다 소득 수준별로 산정

### 3) 프랑스 (공무원연금)<sup>101)</sup>

- 순수부과방식, 공무원 기여 제외 전액 정부 예산부담

#### < 개인기여율 추이 >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10월	'12년11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공무원	7.85	8.12	8.39	8.49	8.76	9.14	9.54	9.94	10.29	10.56	10.83	11.10

#### < 정부부담률 추이 >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국가공무원	62.14	65.39	68.59	71.78	74.28	74.28	74.28	74.28	74.28	74.28	74.28
지방공무원	27.30	27.30	27.30	28.85	30.40	30.50	30.60	30.65	30.65	30.65	30.65

\* 2020년 기준 군인 기여율 11.10%, 고용주 부담률 126.07%

### 4)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 완전적립방식, 매년 수지균형보험료율을 산정하여 공무원과 정부가 노사합의로 부담비율 결정 (공무원 : 정부 부담비율 3 : 7 수준)
- 운용수익저하,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보험료율 증가 추세

#### < 연금보험료 부담비율<sup>102)</sup> >

(단위 :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공무원	5.6	6.3	6.9	7.5	7.5	7.9	7.9
정 부	13.2	14.8	16.0	17.4	17.4	18.0	18.0
계	18.8	21.1	22.9	24.9	24.9	25.9	25.9

\* 일반 기업연금과 마찬가지로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제도개선, 보험료 부담비율 등 주요 결정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101) Evolutions et perspectives des retraites en France Rapport annuel de COR-Juin 2021

102) 각년도 ABP annual report

## 5) 일본 (후생연금)

- 법정보험료는 공무원과 정부가 동일하게 균등부담('18년 기준, 18.3%)하나, 그 외 추가부담 포함 시 총 정부부담률은 공무원의 약 1.8배 수준

< 국가공무원 연금비용 부담내역<sup>103)</sup> >

2019 회계년도		후생연금 부분		구 직역가산 부분	
		금액(억엔)	보수대비(%)	금액(억엔)	보수대비(%)
공무원 기여금		6,450.5	9.150	-	-
정 부 부담금	법정부담금	6,450.5	9.150	23	0.033
	공경제부담	2,967	4.209	6	0.008
	추가비용	1,640	2.326	152	0.216
	합 계	11,057.5	15.685	181	0.257

**공경제부담** 연금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전환비용 등

**추 가 비 용** 국가공무원공제연금 시행 전 은급기간 해당 급여

**구 직역가산** 공제연금에서 지급하던 직역가산부분 지급을 위한 비용

- (기타) 3층의 '퇴직 등 연금급여'(구 직역가산 대체)의 보험료 1.5%는 공무원·정부 각 0.75%씩 부담하고, 퇴직수당은 전액 정부부담(약 10%)

103) 第89回社会保障審議会年金数理部会, 令和元年度 財政状況—国家公務員共済組合—



## 8

## 연금급여제한

구분	주요 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가 다음의 범죄행위 시 연금수급권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공무원) 1년 이상 징역 또는 내란·반란·외환·반국가 행위로 6개월 이상 징역 선고시</li> <li>- (퇴직공무원) 2년 이상 징역 또는 내란·반란·외환·반국가 행위로 6개월 이상 징역 선고시</li> </ul> </li> <li>※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상실한 자는 법정연금보험제도에 소급가입</li> </ul> <p>(관련법령) 독일 공무원신분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징계법 등</p>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100분의 100 감액 / (공무장애연금) 100분의 50 감액</li> </ul> </li> <li>○ 유족연금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족연금) 100분의 50 감액</li> <li>※ 감액대상급여는 직역가산 대체제도(3층 퇴직등연금급여) 중 종신퇴직연금에 한함</li> </ul> </li> </ul> <p>(관련법령) 일본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p>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 및 연금수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몰수 (권리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법상 10년 이상 금고형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형을 합해 10년이 넘는 경우</li> <li>- 내각에 범죄행위, 태만, 사기행위, 고용관계 등에서 기인하는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li> <li>-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확정되어 내각장관으로부터 몰수확인서*가 발급된 경우</li> <li>※ 국가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공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경우 발급하는 확인서</li> <li>- 살인, 과실치사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li> </ul> </li> </ul> <p>(관련법령) 영국 국가공무원연금법</p>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이 재직 중 반국가행위(범인 은닉, 기밀정보 공개, 반역, 반란, 스파이, 간첩 등)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li> <li>- 국가의 안보나 방위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려는 계획이나 시도와 관련된 위증을 하는 경우</li> </ul> </li> </ul> <p>(관련법령) 미국 공법 Title 5</p>





## 출 처

### [미국]

- 인사관리처 홈페이지 [www.opm.gov/retirement-services](http://www.opm.gov/retirement-services)
-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www.ssa.gov/oact/cola/cbb.html](http://www.ssa.gov/oact/cola/cbb.html)
- OPM(2021), Civil Service Retirement and Disability Fund Annual Report, Fiscal Year Ended September 30, 2020.
- OPM(2021), Annual Changes, Benefits Administration Letter, February 2021.

### [캐나다]

- 캐나다 정부 재무부 홈페이지 [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http://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
- 캐나다 정부 국세청 홈페이지 [www.canada.ca/en/revenue-agency](http://www.canada.ca/en/revenue-agency)
- The Treasury Board of Canada(2021), Report on the Public Service Pension Plan for the Fiscal Year Ended March 31, 2020.
- Public Sector Pension Investment Board(2021), Invested in tomorrow – 2020 Annual Report.
-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2013), The case for Ending Early Retirement in the Public Sector.

### [영국]

- 공무원연금제도 홈페이지 [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http://www.civilservicepensionscheme.org.uk)
- 영국 정부 홈페이지 [www.gov.uk](http://www.gov.uk)
- 영국 의회 홈페이지 [www.parliament.uk](http://www.parliament.uk)
- Cabinet Office(2020), Civil Superannuation Account 2020-2021.
- Djuna Thurley(2018), Public service pension age - the Labour Government's reforms.
- 정인영·정창률·권혁창(2020),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 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 배준호(2008), 「국제사회보장 동향 - 2008년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프랑스]

- 이각희(2017), 「공무원연금제도로론」, 공무원연금공단.
- 전주열(2018), 「주요 선진국 공적연금제도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성혜영(2020),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연금이슈&동향분석 제64호, 국민연금연구원.
- 유호선(2021),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 연금이슈&동향분석 제83호, 국민연금연구원.
- 유호선(2021), 「프랑스 연금개혁동향 - 포인트 시스템 도입안을 중심으로」, 연금포럼 겨울호(Vol.84), 국민연금연구원.
- 노대명(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19), 「주요국의 교직원 연금제도」
- 공무원부가연금 홈페이지 [www.rafp.fr](http://www.rafp.fr)
- 국가공무원연금 홈페이지 [www.retraitesdeletat.gouv.fr](http://www.retraitesdeletat.gouv.fr)
- COR(2021), Evolutions et perspectives des retraites en France Rapport annuel de COR-Juin.

## [독일]

- 독일연방정부 홈페이지 [www.bmi.bund.de](http://www.bmi.bund.de)
- 독일연방통계청 홈페이지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 BeamtVG(Beamtenversorgungsgesetz)
- 공무원연금적립금법(Versourngsruecklagegesetz) 1998
- 공무원연금기금이체시행령 VFZV(Versorgungsfondszuweisungsverordnung)
- BMI, DrittesSozialgesetzbuch(III).
- BMAS(2016), Alterssicherungsbericht.
- BMAS(2020), Alterssicherungsbericht.
- BMI(2014), Pension Systems In The Federal Public Service.
- BMI(2019), Siebter Versorg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19), 「주요국의 교직원 연금제도」.
- 김상호(2015), 독일 공무원연금제도의개혁과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 김상호(2015), 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 [네덜란드]

- ABP 홈페이지 [www.abp.nl](http://www.abp.nl)
- ABP 연례보고서 [www.jaarverslag.abp.nl](http://www.jaarverslag.abp.nl)
- 사회보장청 홈페이지 [www.svb.nl](http://www.svb.nl)
- ABP(2018), Statistical Information on participants 2017.
- ABP(2020), Annual Report 2019.
- ABP(2021), Annual Report 2020.

## [오스트리아]

- (구)공무원연금법(Pensionsgesetz, PG) 1965
- 공무원법(Beamten Dienstrechtsgesetz, BDG) 1979
- 일반법정연금법(Allgemeines Pensionsgesetz, APG) 2004
-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Pensions Harmonisierungsgesetz, PHG) 2004
- 연방내무부(2021), 공무원연금 모니터링(Monitoring der Pension der Beamtinnen und Beamten im Bundesdienst).
- 연방내무부(2021), 오스트리아 연금제도(Austrian Country Fiche on Public Pensions).
- 연방재무부(2020),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보고서(Gutachten der Kommission zur langfristigen Finanzierung der Alterssicherungssysteme über die Kostenentwicklung der Pensionen der Beamten und Beamtinnen für die Jahre 2020 bis 2025).
- 오스트리아 연방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www.Oeffentlicherdienst.gv.at](http://www.Oeffentlicherdienst.gv.at)
- 이각희(2017), 「공무원연금제도론」, 공무원연금공단.
- 이상호(2015), 「민주사회와 정책 - 연구유럽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그 시사점 :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9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 정책연구원.
- 이각희(2007), 「오스트리아 신연금법 해설(Pinggera-Poeltner- Stefanits)」.



## [스웨덴]

- 스웨덴 연금청 [www.pensionsmyndigheten.se](http://www.pensionsmyndigheten.se)
- 스웨덴 정부 [www.government.se](http://www.government.se)
- 스웨덴 직역연금청 [www.spv.se](http://www.spv.se)
- 이미연(2021),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스웨덴편)」, NABO 추계&세제 이슈 제 16호, 국회예산정책처.
- 스웨덴 연금청(2021), Orange Report 2020.
- 송지원(2018), 「스웨덴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 국제노동브리프 2018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스웨덴 보건사회부(2017), The Pension Group's agreement on long-term raised and secure pensions.
- 스웨덴 보건사회부(2016), The Swedish old age pension system-How the income pension, premium pension and guarantee pension work.
- 스웨덴 보건사회부(2010), The Swedish Pension Agreement and Pension Reform.
- (조사협조) 주 스웨덴 대사관 왕국 대한민국대사관

## [핀란드]

- 핀란드 연금센터 홈페이지 [www.etk.fi/en](http://www.etk.fi/en)
- 핀란드 연금연합 홈페이지 [www.tela.fi/en/pension-system](http://www.tela.fi/en/pension-system)
- 핀란드 공공부문 연금 [www.keva.fi/en/](http://www.keva.fi/en/)
- 공공부문 연금법 [www.finlex.fi/fi/laki/ajantasa/2016/20160081#L4P89](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16/20160081#L4P89)
- 핀란드 노인 복지 연합 [vtkl.fi/in-english](http://vtkl.fi/in-english)
- 핀란드 사회보험청 [www.kela.fi/web/en/pension](http://www.kela.fi/web/en/pension)
- Finnish Centre for Pensions(2020), Pocket Statistics 2020.
- Finnish Centre for Pensions(2020), Persons insured for an earnings-related pension in Finland 2020.
- 주은선(2021), 「핀란드의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의 변화」,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김문길(2006), 「2005년 핀란드 연금개혁과 시사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2013), 「핀란드 기초연금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기초연금 도입 관련 시사점」, 보건복지 ISSUE&FOCUS 제 20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협조)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 [일본]

- 인사원 홈페이지 [www.jinji.go.jp](http://www.jinji.go.jp)
-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www.nenkin.go.jp](http://www.nenkin.go.jp)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www.mhlw.go.jp](http://www.mhlw.go.jp)
- 후생노동성(2016), 연금제도의 포인트(年金制度のポイント).
- 후생노동성(2021), 연금제도의 포인트(年金制度のポイント).
- 후생노동성(2019), 第89回社会保障審議会年金数理部会 令和元年度 財政状況
-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www.kkr.or.jp](http://www.kkr.or.jp)
-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www.chikyoren.or.jp](http://www.chikyoren.or.jp)

## [대만]

- 공무원연금기금감독위원회 홈페이지 [www.pension.gov.tw](http://www.pension.gov.tw)
- 공무원연금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fund.gov.tw](http://www.fund.gov.tw)
- Public Service Pension Fund(2021), Public Service Pension Fund Annual Report 2020.
- "Laws&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media=print&pcode=H0150049](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media=print&pcode=H0150049)
- 노대명 외 5인(2017), 「아시아보장정책 비교연구 :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22-2-183

2022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

2022년 9월 발행

발행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인 쇄 ㉠ 하이브

---

# 해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2022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